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방안

최성은 · 박실비아 · 여유진 · 김태일 · 임완섭 · 이기주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비롯하여 4대 사회보험이 단기간내에 도입 및 확대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었고, 보육지원의 확대, 장애인 연금의 시행 뿐 아니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등 복지 인프라의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복지제도 및 재정 확대에 비해서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는 아직 높지 않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이 있다.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인식변화와 정책수요 변화에 대한 민감한 감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복지인식과 보건복지정책수요에 대한 대국민조사를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체감도 높은 보건복지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향후 보건복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고, 현행 복지제도 평가와 복지정책수요에 대한 국민의견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최성은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박실비아 연구위원, 여유진 연구위원, 고려대 김태일 교수, 임완섭 전문연구원, 이기주 연구원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본원의 김문길 박사와 신화연 박사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수차례 회의에 참석을 해서 도움을 주신 각계전문가에도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제 목 차 례

요약	1
제 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16
제3절 연구 방법	17
제 2장 2012년 보건복지 정책여건 및 전망	19
제1절 경제 여건 및 전망	21
제2절 보건복지정책 여건 및 전망	34
제3장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 조사	51
제1절 보건복지정책 국민인식조사 결과 분석	53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107
제 4장 복지인식 및 정책수요조사 추진체계 구축	129
제1절 기존 복지인식조사 사례 검토	131
제2절 기존 복지인식 조사 문항	143
제3절 복지인식 및 정책수요 조사표	163
참고문헌	179
부록 1(일반 국민용 설문지)	183
부록 2(전문가용 설문지)	193

표 목차

<표 2-1> 복지지출 추이	21
<표 2-2>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23
<표 2-3> 신용평가사별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24
<표 2-4>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추이	24
<표 2-5> 기관별 2012년 국내경제성장률 전망	25
<표 2-5> 경제성장률 전망	26
<표 2-6 > 소비, 물가, 실업률 현황 및 전망	27
<표 2-7> 최근의 고용지표	29
<표 2-8> 실업률 전망 ; 계절조정 전년동기 대비	29
<표 2-9> 가계신용 동향	30
<표 2-10>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비중	31
<표 2-11> 가구(2인이상) 실질소득 및 지출 증가율 변화(전년 동기대비)	31
<표 2-12> 국가 채무 및 부담률 추이	32
<표 2-13>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계층분포	37
<표 2-14> 노인의 의사진단 만성질환수(2008년)	40
<표 2-15> 적용제외자 전체 및 무소득배우자 성별 및 연령분포(2009년)	41
<표 2-16>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2008년)	42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3
<표 3-2> 복지수준 인식	55
<표 3-3> 연령대별 복지수준 인식	55
<표 3-4> 소득집단별 복지수준에 대한 의견	56
<표 3-5> 소득분배 정도 인식	57
<표 3-6> 연령대별 소득분배 정도 인식	57
<표 3-7> 소득집단별 소득분배 정도 인식	58
<표 3-8>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의견	59
<표 3-9> 연령대별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의견	59

<표 3-10> 소득집단별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의견	59
<표 3-11>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의견	61
<표 2-12> 연령대별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의견	61
<표 3-13> 소득수준별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의견	62
<표 3-14> 보육지원에 대한 의견	63
<표 3-15> 연령대별 보육지원에 대한 의견	63
<표 3-16> 소득수준별 보육지원에 대한 의견	64
<표 3-17> 저소득층 지원강화에 대한 의견	65
<표 3-18> 연령대별 저소득층 지원강화에 대한 의견	65
<표 3-19> 소득수준별 저소득층 지원강화에 대한 의견	66
<표 3-20>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의견	67
<표 3-21> 연령대별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의견	67
<표 3-22> 소득수준별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의견	68
<표 3-23> 주거지원에 대한 의견	69
<표 3-24> 연령대별 주거지원에 대한 의견	69
<표 3-25> 소득수준별 주거지원에 대한 의견	70
<표 3-26> 자활 및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의견	70
<표 2-27> 연령대별 자활 및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의견	71
<표 3-28> 소득수준별 자활 및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의견	71
<표 3-29> 보육지원에 대한 의견	72
<표 3-30> 연령대별 보육지원에 대한 의견	73
<표 3-31> 소득수준별 보육지원에 대한 의견	73
<표 3-32>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의견	74
<표 3-33> 연령대별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의견	75
<표 3-34> 소득수준별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의견	75
<표 3-35>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	76
<표 3-36> 연령대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	77
<표 3-37> 소득집단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	77

<표 3-38> 보건의료 접근성에 대한 성별 만족도 분포	78
<표 3-39> 보건의료 접근성에 대한 연령별 만족도 분포	79
<표 3-40> 보건의료 접근성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만족도 분포	79
<표 3-41> 보건의료 보장성에 대한 성별 만족도 분포	80
<표 3-42> 보건의료 보장성에 대한 연령별 만족도 분포	80
<표 3-43> 보건의료 보장성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만족도 분포	81
<표 3-44> 의료의 질에 대한 성별 만족도 분포	82
<표 3-45> 의료의 질에 대한 연령별 만족도 분포	82
<표 3-46> 의료의 질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만족도 분포	83
<표 3-47>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관계에 대한 성별 선호도	84
<표 3-48>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관계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	84
<표 3-49>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관계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선호도	85
<표 3-50>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부담비율에 대한 성별 선호도	86
<표 3-51>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부담비율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	87
<표 3-52>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부담비율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선호도 ..	87
<표 3-53>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인상을 범위의 성별 분포	88
<표 3-54>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인상을 범위의 연령별 분포	88
<표 3-55>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인상을 범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분포	89
<표 3-56> 저출산·고령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90
<표 3-57> 연령대별 저출산·고령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91
<표 3-58> 소득계층별 저출산·고령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92
<표 3-59> 보육시설 확대	93
<표 3-60> 연령대별 보육시설 확대	93
<표 3-61> 소득계층별 보육시설 확대	94
<표 3-62> 양육수당	95
<표 3-63> 연령대별 양육수당	95
<표 3-64> 소득계층별 양육수당	96

<표 3-65> 노후 대비 수단	97
<표 3-66> 연령대별 노후 대비 수단	98
<표 3-67> 소득계층별 노후 대비 수단	99
<표 3-68> 노후 정책지원	100
<표 3-69> 연령대별 노후 정책지원	101
<표 3-70> 소득계층별 노후 정책지원	102
<표 3-71>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	103
<표 3-72> 연령별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	103
<표 3-73> 소득계층별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	104
<표 3-74>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에 관한 의견	105
<표 3-75> 연령별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에 관한 의견	105
<표 3-76> 소득계층별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에 관한 의견	106
<표 3-77> 전문가 일반적 특성	107
<표 3-78> 전반적인 복지수준 인식	108
<표 3-79>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 인식	109
<표 3-80> 보건복지 분야 성과 순위	109
<표 3-81> 사회정책 관련 미흡 분야 순위	110
<표 3-82> 듣고 싶은 뉴스 선호 순위	111
<표 3-83> 중점 복지분야 정책 선호 순위	113
<표 3-84> 근로능력 저소득층 자립방안	113
<표 3-85> 장애인 지원 정책 요구 순위	115
<표 3-86>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의견	116
<표 3-87> 노인복지 정책지원 요구	117
<표 3-88> 복지정책 발전 방향	118
<표 3-89>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119
<표 3-90> 보건의료부문 평가	120
<표 3-91> 보건의료 분야 중점 정책	120

<표 3-9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122
<표 3-93>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123
<표 3-94>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123
<표 3-95>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정책	124
<표 3-96>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125
<표 3-97>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 정책	126
<표 3-98> 세금과 사회복지 정책	126
<표 3-99> 재원마련 방안	127

그림 목차

[그림 2-1] 분기별 명목 국내총생산(GDP) 및 전년 동기대비 실질 GDP성장률의 추이	25
[그림 2-2] 전년 동기대비 실질 GDP성장률 전망	26
[그림 2-3] 경제활동참가율의 최근 추이	27
[그림 2-4] 실업률의 최근 추이	28
[그림 2-5] 소득과 가계지출 추이	32
[그림 2-6] 소득분배 추이(지니계수)	33
[그림 2-7] 가구당 부채수준	34
[그림 2-8] OECD 국가의 출산율	35
[그림 2-9] 주요 OECD 국가의 연령별 고용률(2007년)	36
[그림 2-10] OECD 국가의 GDP 대비 가족지원 수준(2007년)	38
[그림 2-11] OECD 국가의 노인부양비 추이	39
[그림 2-12] OECD 국가의 노인부양비 추이	40
[그림 2-13] OECD 국가의 의료비 부담	42
[그림 2-14] OECD 국가의 공적 사회지출	43
[그림 4-1] 분석틀: 측정개념과 서로 간의 관계	153

요약

제 1장 서론

-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적 충격의 빈번한 발생과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 사회적 위험이 증대하면서 복지의 확대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및 여건에서 국민의 정책체감도와 시의성 높은 보건복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정책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정책 수요 파악이 중요함.
 - 그간 국민의 보건복지정책 수요 및 복지의식 변화양상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이 부재한 상황임.
 - 복지의식 관련 조사가 기 실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특정 주제의 연구 또는 부가조사로 단발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적인 여론분석 기법을 활용한 국민과 전문가 대상의 체계적인 의견조사를 통해 정책 ‘아젠다’ 발굴과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국민 인식조사와 전문조사 실시와 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2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도출
 - 전문가 조사, 대국민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정책 지향을 마련하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
 - 핵심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으로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국민의 보건복지정책 수요 및 복지의식 변화양상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주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조사에 적용
-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조사 실시·분석
 - 2012년도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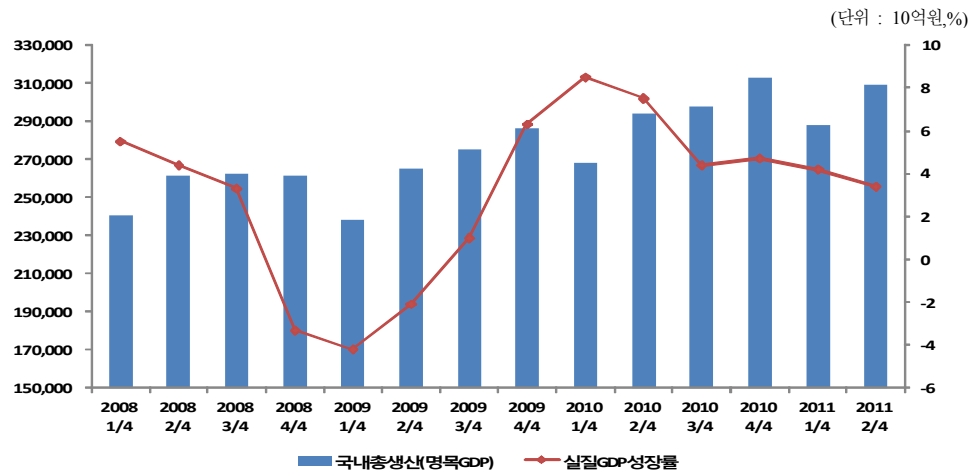
- 실시하여 보건복지정책의 방향 및 복지재원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
- 보건 및 복지, 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국민인식조사와 상호 보완 및 비교분석
- 주기적인 보건복지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 추진체계 구축방안
-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의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문문항 개발
 - 복지 및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전반적 태도, 복지지출 수준 및 재원부담 의사, 사회정책 부문별 체감도 및 만족도, 구체적 복지개혁 방향 및 정책우선순위, 주요 현황 등을 포함한 설문 개발
- 본 연구는 정책 수요 및 인식조사(전화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인터넷), 관련 전문가 자문, 기존 인식조사 및 관련 문헌 자료 분석 및 설문개발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
- 대국민 전화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응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제 응답 대상을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1주일간(2011.9.21~9.27) 실시하였음.
 - 전문가 설문의 경우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문을 구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출관련 문항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복지 및 보건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가 수행함.
 - 설문의 회수 효율성과 분석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응답 회수율 제고를 위해 10일간 조사를 수행(2011.11.2~11.11)하여 105명의 대한 조사를 완료함.
 - 주기적인 보건복지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 추진체계 구축방안
 - 기존에 국내외에서 수행했던 복지수요 및 의식조사 설문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지수요 및 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을 개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설문초안을 작성하고 설문작성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

제 2장 2012년 보건복지 정책여건 및 전망

□ 경제 여건 및 전망

- IMF는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1년과 유사한 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11.9월), 최근의 불확실성 확대에 의해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KDI, 11월)
- Fitch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등급은 A+ 유지한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11.11. 7)
 - － A+(부정적) ('08.11월) → A+(안정적) ('09.9월) → ('11.11월) A+(긍정적)
- 2011년 국내 경제는 물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1] 분기별 명목 국내총생산(GDP) 및 전년 동기대비 실질 GDP성장률의 추이



-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억제 노력 및 주택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말 현재 876.3조원으로 전년말보다 3.5% 늘어났으며 2011년 하반기 들어서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1> 가계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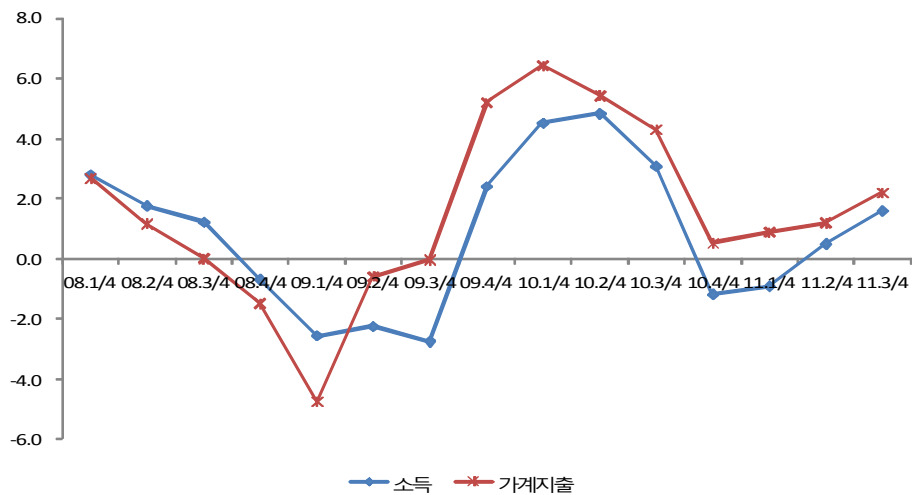
(기간 중 증감액, 조원)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1/4	2/4
가계신용	67.3	6.0	17.3	16.3	27.8	10.5	18.9
가계대출	59.6	5.2	16.5	14.6	23.4	10.7	17.8
예금은행	22.0	0.7	8.6	3.7	8.8	3.7	9.2
주택대출	15.9	1.8	5.1	2.8	6.3	4.5	5.1
(주택담보대출)	20.3	3.0	5.9	3.6	7.7	5.4	5.4
기타대출	6.0	-1.0	3.6	1.0	2.5	-0.9	4.1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3.2	2.7	5.3	6.5	8.7	2.7	6.4
주택대출	8.4	1.6	2.1	1.8	2.9	1.8	2.5
(주택담보대출)	8.5	1.6	2.2	1.8	2.9	1.9	2.5
기타대출	14.8	1.1	3.1	4.7	5.9	0.9	3.9
기타금융기관	14.5	1.7	2.6	4.4	5.8	4.4	2.2
판매신용	7.7	0.8	0.8	1.8	4.4	-0.3	1.1

자료 : 한국은행

- 실질 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1/4분기는 -0.9%, 실질소득 증가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4분기와 3/4분기의 경우 각각 0.5%, 1.65%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소득과 가계지출 추이



□ 보건복지 환경 및 전망

-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관심의 급등
 - － 무료급식 확대로 촉발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은 그 영역을 넘어 “복지담론”을 둘러싸고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음.
- 출산을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보육’ 강화 필요성 증가
- 기대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소득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사회갈등의 중재자 혹은 촉발자로서 사회복지의 역할 증가
-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 노인대상 의료서비스의 효율화
-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가, 이해당사자의 참여요구 증가
-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건강보장 정책의 개선
- 질 좋은 의료서비스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건강 및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의료사고, 의약품 부작용 등 의료이용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요구 증가
- FTA 영향 증가와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한 보건의료시장 대책 필요

제3장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 조사

□ 대국민 조사결과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38.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 응답자의 2.3%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매우 낮다고 평가한 응답자도 9.4%에 이룸. 복지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61.3%이며 이중 ‘다소 낮다’가 2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복지수준 인식

단위: 명(%)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계
남	60 (12.2)	100 (20.4)	156 (31.8)	115 (23.4)	53 (10.8)	7 (1.4)	491 (100.0)
여	34 (6.7)	132 (25.9)	131 (25.7)	124 (24.4)	72 (14.1)	16 (3.1)	509 (100.0)
계	94 (9.4)	232 (23.2)	287 (28.7)	239 (23.9)	125 (12.5)	23 (2.3)	1000 (100.0)

-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하여 각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접근성에 대한 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고(72.6%), 다음으로 의료의 질(61.4%), 보장성(57.9%) 순이었음

<표 3>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 분포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접근성	81 (8.1)	83 (8.3)	110 (11.0)	217 (21.7)	321 (32.1)	188 (18.8)	1000 (100.0)
보장성	86 (8.6)	147 (14.7)	188 (18.8)	224 (22.4)	255 (25.5)	100 (10.0)	1000 (100.0)
의료서비스 질	86 (8.6)	133 (13.3)	167 (16.7)	226 (22.6)	279 (27.9)	109 (10.9)	1000 (100.0)

-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은지,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이 증가하는 것이 좋은지 양자간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세금이 증가하더라도 사회복지혜택이 증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63.6%를 차지하였음.

<표 4>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에 관한 의견

단위: 명(%)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			중상층까지 복지 대상 확대		
	세금 감소 사회복지 감소	세금 증가 사회복지 증가	계	반대	찬성	계
남	148 (30.2)	342 (69.8)	490 (100.0)	244 (49.7)	247 (50.3)	491 (100.0)
여	216 (42.4)	293 (57.6)	509 (100.0)	276 (54.2)	233 (45.8)	509 (100.0)
계	364 (36.4)	635 (63.6)	999 (100.0)	520 (52.0)	480 (48.0)	1000 (100.0)

□ 전문가 조사결과

○ 사회정책의 영역별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1순위에서 국민의 건강보장 (43.8%),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28.6%), 보육 지원 (18.1%) 순으로 성과가 크다는 의견이었음. 기타 성과가 낮은 부분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이 각각 3.8%로 나타났고, 노후소득보장이 가장 낮은 1.9%라는 의견이었음.

<표 5> 보건복지 분야 성과 순위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30	28.6	32	30.5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4	3.8	6	5.7
국민의 건강 보장	46	43.8	24	22.9
보육 지원	19	18.1	23	21.9
노후 소득 보장	2	1.9	11	10.5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4	3.8	9	8.6
계	105	100.0	105	100.0

□ 사회정책 관련 미흡 분야

○ 반면 사회정책관련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의견의 1순위는 일자리창출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42.9%), 노후소득보장 (18.1%),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제고 (16.2%)순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13.3%로 나타났음.

<표 6> 사회정책 관련 미흡 분야 순위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14	13.3	12	11.4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45	42.9	27	25.7
국민의 건강 보장	3	2.9	7	6.7
보육 지원	7	6.7	11	10.5
노후 소득 보장	19	18.1	29	27.6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17	16.2	19	18.1
계	105	100.0	105	100.0

- 향후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각각 38.1%와 29.5%)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각각 25.7%와 21.9%),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각각 20%와 21.9%) 순으로 나타남.

<표 7> 중점 복지분야 정책 선호 순위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21	20.0	23	21.9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40	38.1	31	29.5
국민의 건강 보장	7	6.7	9	8.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27	25.7	23	21.9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10	9.5	19	18.1
계	105	100.0	105	100.0

○ 보건의료 분야 중점 정책

- － 1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로 전체 응답의 21.0%를 차지하였음.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19.0%)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19.0%)로 나타났음.
- － 2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공공의료체계 확충’(20.0%)이었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18.1%)과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사업 확대’(18.1%)였음.

<표 8> 보건의료 분야 중점 정책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20	19.0	19	18.1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20	19.0	15	14.3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22	21.0	15	14.3
공공의료체계 확충	19	18.1	21	20.0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2	11.4	16	15.2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확대	12	11.4	19	18.1
계	105	100.0	105	100.0

○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

- － 영역별로 가장 확대되어야 할 1순위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자리창출 (39%), 아동 (20%), 노인(16.2%)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하 소수의견으로서는 근로무능력자 (7.6%), 보건 (5.7%), 주거(5.7%), 가족(2.9%), 근로자능력개발 (2.9%)순임.
- － 3순위까지 모두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이 72.3%로 가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부문 지출이 54.3%, 아동관련 지출이 49.5%, 근로자능력 개발이 30.5%, 보건의 30.4%, 주거 25.7%, 가족 15.3%순으로 나타났음.

<표 9>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 정책

단위: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노인	17	16.2	19	18.1	21	20.0
아동	21	20.0	20	19.0	11	10.5
근로 무능력자	8	7.6	7	6.7	8	7.6
보건	6	5.7	10	9.5	16	15.2
가족	3	2.9	7	6.7	6	5.7
일자리 창출	41	39.0	17	16.2	18	17.1
근로자 능력개발	3	2.9	15	14.3	14	13.3
주거	6	5.7	10	9.5	11	10.5
계	105	100.0	105	100.0	105	100.0

-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1순위 방안으로서 전문가들은 자본소득세의 인상 (37.1%), 담배 주류 및 사행성산업에 대한 세금인상 (35.2%), 사회보장세등 목적세 신설 (19%), 근로소득세 인상 (5.7%), 부가가치세 인상 (2.9%)순으로 답하고 있음.
- － 복지재원을 위한 세금인상은 담배, 주류, 사행성 산업에 대한 세금인상과 자본소득이 합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목적세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남.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간의 비교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합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간접세보다는 직접세가 세원으로서 보다 합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표 10> 재원마련 방안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로 소득세 인상	6	5.7	7	6.7
자본 소득세 인상	39	37.1	27	25.7
부가가치세 인상	3	2.9	6	5.7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20	19.0	29	27.6
담배, 주류, 사행성 산업(경마 등)에 대한 세금 인상	37	35.2	36	34.3
계	105	100.0	105	100.0

01

K
I
H
A
S
A

서론



제 1 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적 충격의 빈번한 발생과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 사회적 위험이 증대하면서 복지의 확대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각이 확산되고 있음.
 - 정부는 ‘능동적 복지’와 ‘친서민 정책’의 실현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지출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음.
- 이러한 상황 및 여건에서 국민의 정책체감도와 시의성 높은 보건복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정책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정책 수요 파악이 중요함.
 - 그간 국민의 보건복지정책 수요 및 복지의식 변화양상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이 부재한 상황임.
 - 복지의식 관련 조사가 기 실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특정 주제의 연구 또는 부가조사로 단발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전문적인 여론분석 기법을 활용한 국민과 전문가 대상의 체계적인 의견조사를 통해 정책 ‘아젠다’ 발굴과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국민 인식조사와 전문조사 실시와 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2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도출
- 전문가 조사, 대국민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정책 지향을 마련하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
- 핵심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으로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국민의 보건복지정책 수요 및 복지인식 변화양상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주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조사에 적용
- 2012년도의 보건복지정책 수요 및 관련 인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의 정책수요 및 인식수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1. 2012년도 여건 및 환경 분석

- 2011년도 보건·복지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기조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2년도 정책 환경 변화 상황을 분석
 -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이를 통해 파생되는 보육 및 일·가정 양립 등 관련 여건에 대한 분석
 - 보건 분야중 현안 및 향후 문제가 심화될 사안에 대한 동향 및 여건을 분석
- 경제 여건의 변화가 보건복지 환경과 국민의 보건복지 수요에 미칠 영향 분석
 -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 및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남유럽 재정위기로 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환경 및 정책여건 분석
 -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여건 등 주요 경제적 환경을 분석하고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의 향후 전망치를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

2. 2012년도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와 분석

-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조사 실시·분석
 - 2012년도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 실시하여 보건복지정책의 방향 및 복지재원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
 - － 이와 함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복지상태 및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인식을 조사
 - －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 보건 및 복지, 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국민인식조사와 상호 보완 및 비교분석
 - －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내년도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 도출

3.주기적인 보건복지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 추진체계 구축방안

-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정책수요와 복지환경 및 정책관련 의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관련 틀과 향후 활용 가능할 수준의 조사 설문 작성
 -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의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문문항 개발
 - 복지 및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전반적 태도, 복지지출 수준 및 재원부담 의사, 사회정책 부문별 체감도 및 만족도, 구체적 복지개혁 방향 및 정책우선순위, 주요 현황 등을 포함한 설문 개발

제3절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정책 수요 및 인식조사(전화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인터넷), 관련 전문가 자문, 기존 인식조사 및 관련 문헌 자료 분석 및 설문개발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
- 대국민 인식조사(전화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인터넷)
 - 대국민 인식조사를 위해 이전 조사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수차례 연구진 회의를 거쳐 조사 설문을 최종 선정하였음.
 - －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응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제 응답 대상을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1주일간(2011.9.21~9.27) 실시하였음.

○ 전문가 설문외의 경우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 － 대국민 인식조사와 비교해 사회복지 지출관련 문항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복지 및 보건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가 수행함.
- － 설문외 회수 효율성과 분석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응답 회수율 제고를 위해 10일간 조사를 수행(2011.11.2~11.11)하여 10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함.

□ 주기적인 보건복지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 추진체계 구축방안

- 기존에 국내외에서 수행했던 복지수요 및 의식조사 설문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지수요 및 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을 개발
- 기존에 실시되었던 복지인식 관련 보고서와 논문들을 검토 및 분석하여 조사 설문문항 작성과 분석 그리고 보고서 집필에 활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설문초안을 작성하고 설문작성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

2012년 보건복지 정책 여건과 전망

제 2장 2012년 보건복지 정책여건 및 전망

제1절 경제 여건 및 전망

1. 2011년 정책환경 및 대응

- 정부는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여가·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능동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지만 5년간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지출의 비중도 2007년 21.8%에서 2011년 28.0%로 6.2%p 증가하였음.

<표 2-1> 복지지출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07	'08	'09	'10	'11	연평균 증가율
복지지출	61.4	68.8	80.4	81.2	86.4	8.9%
총 지출	238.4	262.8	301.8	292.8	309.1	6.7%
복지지출 비중	21.8	26.2	26.6	27.7	28.0	

* 추경예산 포함 (보건복지부)복지지출 증가추세

- 정부는 2011년 하반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을 중점 추진중
 -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급여 또는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유인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설계하여 탈빈곤 및 탈수급(기초생활보장제도) 촉진

- 빈곤정책(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제공되는 의료·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시키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은 생계급여 산정시 70%만 소득으로 간주하는 등 근로 인센티브를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수급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력 지속 및 수급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수급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이외에 방문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10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공정경쟁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진출시 대기업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등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 진출 추진 등

2. 글로벌 경제동향

□ 글로벌 경제여건

- 과거와 달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범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와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남유럽 재정위기가 유럽국가 전반의 채무위기로 심화되면서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참가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 대외여건 전망

- IMF는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1년과 유사한 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11.9월), 최근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KDI, 11월)
- 유로지역의 경우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 가계 및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의 성장률은 2011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재정위

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로지역의 경우 2011년 1.6%에서 2012년 1.1%로
경제성장률이 0.5%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2-2>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09	2010	2011	2012
세계 ¹⁾	-0.7	5.1	4.0	4.0
선진국	-3.7	3.1	1.6	1.9
미국	-3.5	3.0	1.5	1.8
일본	-6.3	4.0	-0.5	2.3
유로지역	-4.3	1.8	1.6	1.1
개도국	2.8	7.3	6.4	6.1
아시아 ²⁾	7.2	9.5	8.2	8.0
중국	9.2	10.3	9.5	9.0
대만	-1.9	10.9	5.2	5.0
인도	6.8	10.1	7.8	7.5
브라질	-0.6	7.5	3.8	3.6
러시아	-7.8	4.0	4.3	4.1

주: 1) IMF의 세계 전체 성장률은 PPP방식의 추정치.

2)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선진국에 포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11.

□ 국가신용등급

- Fitch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등급은 A+ 유지한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11.11. 7)
- A+(부정적) (‘08.11월) → A+(안정적) (‘09.9월) → (‘11.11월) A+(긍정적)
- Fitch는 재정건전성, 대외건전성,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력 등을 등급전망 상
향 사유로 제시하였고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 가변적인 글로벌 경제환
경에서 높은 대외의존도, ‘12년 외채 만기도래액이 크다는 점 등을 제시
- 하지만,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잘 대처해 나갈 경우 신용등급상향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언급

<표 2-3> 신용평가사별 우리의 국가신용등급

구 분	S&P	Fitch	Moody's
외환위기前	AA-(‘97.10월)	AA-(‘97.11월)	A1(‘97.10월)
현재 등급	A(‘05.7월) (6번째 등급)	A+(공정적, ‘11.11월) (5번째 등급)	A1(‘10.4월) (5번째 등급)

3. 국내 경제동향 및 전망

□ 경제성장 동향

- 2011년 국내 경제는 물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1/4분기에 4.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4분기와 3/4분기에는 3.4%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함.
- 계절조정 전기대비 성장률 역시 1/4분기의 1.3%, 2/4분기 0.9%, 3/4분기 0.7%로 나타나는 등 성장세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전년 동기대비 상반기중 3.8% 성장하여 전반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KDI).

<표 2-4>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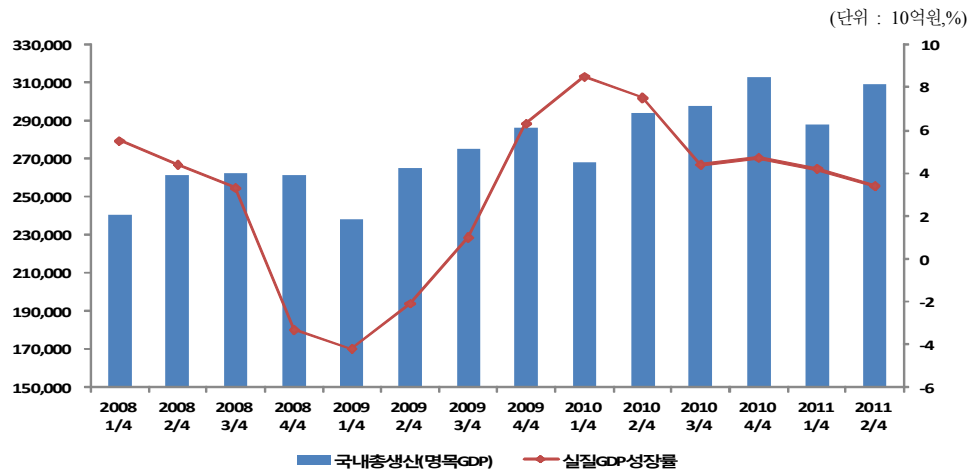
(단위 : %)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¹⁾	1/4 ¹⁾	2/4 ¹⁾	3/4 ¹⁾	4/4 ¹⁾	1/4 ¹⁾	2/4 ¹⁾	3/4 ²⁾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0.3	6.2	8.5	7.5	4.4	4.7	4.2	3.4	3.4
전기대비 증가율(계절조정)	—	—	2.1	1.4	0.6	0.5	1.3	0.9	0.7

주: 1) 잠정치 2) 속보치.

자료: 한국은행.

[그림 2-1] 분기별 명목 국내총생산(GDP) 및 전년 동기대비 실질 GDP성장률의 추이



□ 경제성장 전망

- 각 기관별 2012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메릴린치 그리고 노무라 등은 다소 낙관적인 4.5~5.0%의 전망치를 제시하였지만 UBS와 도이치뱅크 그리고 KDI 등 국내연구기관에서는 4.0% 이하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함.
- 최근 전망치일수록 낮은 경제성장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표 2-5> 기관별 2012년 국내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	정책당국		연구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삼성경제	LG경제	현대경제	한국경제산업		
경제성장률	4.5%(6월)	4.6	3.8	3.6	3.6	4.0	3.6		
구분	국제기구		해외투자은행						증권사
	IMF	OECD	BOA 메릴린치	노무라	UBS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JP모건	삼성증권
경제성장률	4.4	4.5	4.6	5.0	2.8	3.9	4.2	4.2	4.2

자료 : 각 기관

-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좀 더 살펴보면, 실질 GDP 성장률은 2011년 4/4 분기에 3.6%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표 1-5), 2012년에는 전년대비

3.8% 성장하여 장기추세치 수준의 성장세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2012년 전반기의 경우 실질경제성장률이 3.2%로 다소 성장률이 감소하다가 하반기에는 4.2%를 기록하여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

<표 2-5>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1					2012		
	1/4 ¹⁾	2/4 ¹⁾	3/4 ¹⁾	4/4 ²⁾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전년동기대비)	4.2	3.4	3.4	3.6	3.6	3.2	4.2	3.8
(계절조정 전기대비)	(1.3)	(0.9)	(0.7)	(0.7)		(0.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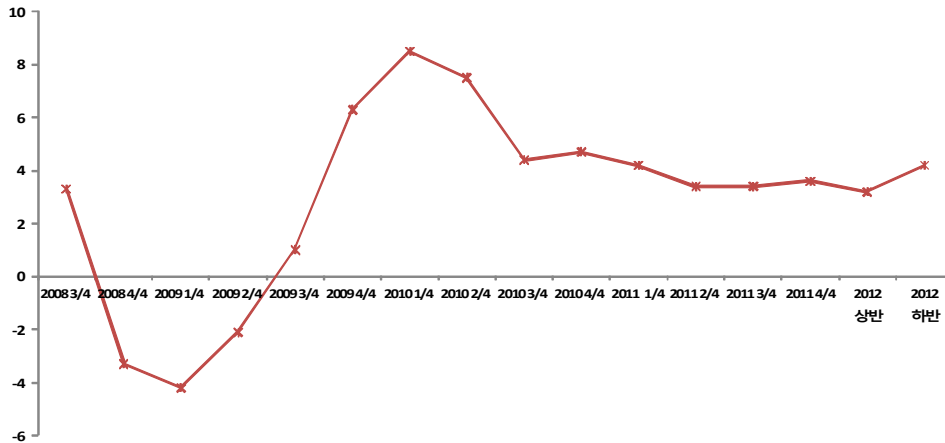
주 : 1) 1는 잠정치, 2)속보치

2) 2012년도 상반기 국내총생산의 전기대비 증가율은 해당 2분기의 전분기대비 성장률 평균임

자료 : KDI, KDI 경제전망, 제28권 제2호/Vol.28 No.2

[그림 2-2] 전년 동기대비 실질 GDP성장률 전망

(단위 : %)



□ 민간소비는 1/4분기중 전년 동기대비 2.8% 늘어난데 이어 2/4분기에는 동기대비 3.0% 증가하여 회복세를 지속함.

- 하지만 3/4분기에는 2.5%증가하여 증가세가 감소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상승하여 2012년 연간 민간소비 상승률은 3.1%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KDI, 11월)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201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4%로 추정되며,

2012년의 경우 3.4%로 추정되어 물가는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2-6 > 소비, 물가, 실업률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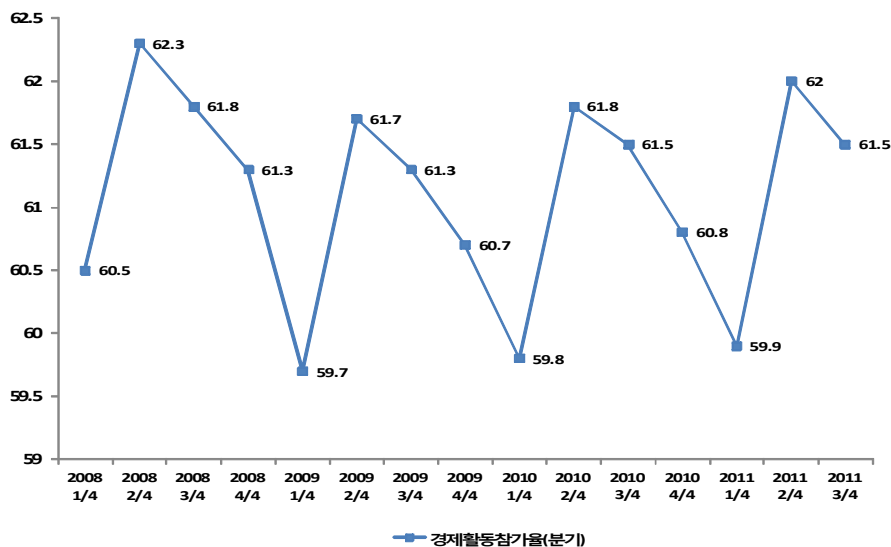
	2011					2012		
	1/4 ¹⁾	2/4 ¹⁾	3/4 ¹⁾	4/4 ²⁾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총소비	2.5	2.8	2.5	3.3	2.8	3.4	3.6	3.5
민간소비	2.8	3.0	2.2	2.5	2.6	2.8	3.5	3.1
소비자물가	4.5	4.2	4.8	4.2	4.4	3.7	3.1	3.4
(근원물가)	(2.9)	(3.4)	(3.9)	(3.8)	(3.5)	(3.6)	(3.2)	(3.4)

자료 : KDI, KDI 경제전망, 제28권 제2호/Vol.28 No.2

□ 노동시장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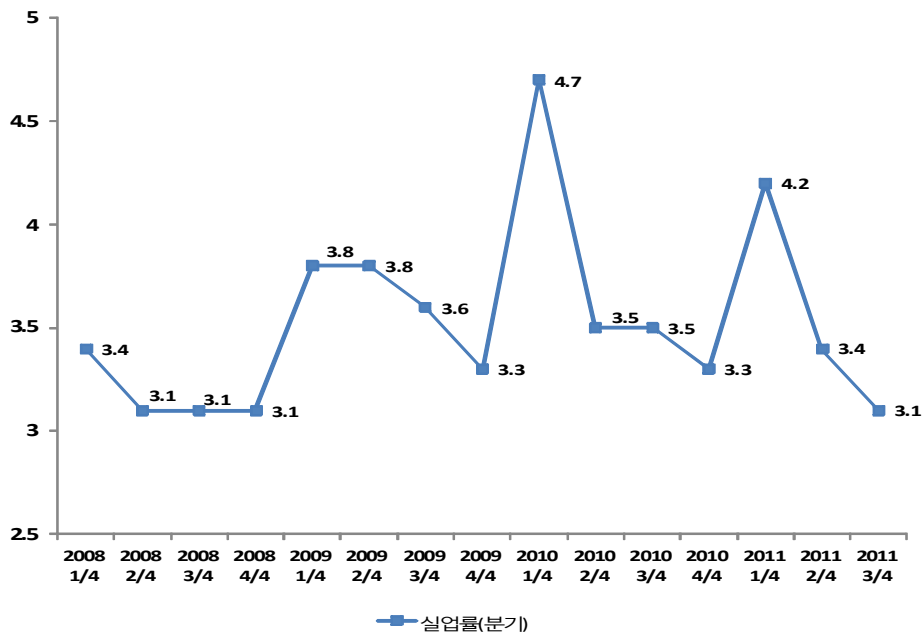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3년간 2008년 61.5%, 2009년 60.8%, 2010년 61.0%로 안정적이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3분기 현재 61.5%를 나타내고 있어 2011년에도 안정적 추세가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음.
- － 2011년 3/4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1/4분기보다는 1.6%p 증가, 2/4분기보다는 0.5%p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는 동일한 수준임.

[그림 2-3] 경제활동참가율의 최근 추이



- 실업률의 경우 2008년 3.2%, 2009년 3.6%, 2010년 3.7%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2011년의 경우 3분기의 현재 3.1%로 증가추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음.
- 분기실업률을 볼 때 2011년 1/4분기는 4.2%, 2/4분기는 3.4%, 3/4분기는 3.1%로 지난 3년간 마지막 분기의 실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작년보다 낮은 실업률을 예상해 볼 수 있음.

[그림 2-4] 실업률의 최근 추이



-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여건도 대체로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취업자수는 2011년 1~9월중 14만명 증가 하였으며 실업률은 2011년 2월 4.0%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으로 전환하여 9월에는 3.2%를 기록함.
 - 서비스업과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는 등 양호한 고용상황이 유지되는 모습
 - 3/4분기에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유지되는 모습

－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0.3/4) 1.6 → (4/4) 1.5 → ('11.1/4) 1.8 → (2/4) 1.7 → (3/4) 1.5

－ 고용률은 30~39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0.2%p 상승한 59.5%를 기록

○ 올해 실업율은 3.5%로 추정되며 내년 실업율도 이와 같은 3.5%로 추정됨.

<표 2-7> 최근의 고용지표

(천명, %)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경제활동인구	24,394 (0.2)	24,748 (1.5)	24,993 (1.4)	24,796 (1.4)	24,488 (1.3)	25,437 (1.6)	25,269 (1.1)
취업자	23,506 (-0.3)	23,829 (1.4)	24,120 (1.6)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483 (1.5)
실업자	889 (15.5)	920 (3.5)	873 (-1.5)	808 (-1.2)	1,028 (-9.0)	865 (-0.4)	786 (-10.0)
비경제활동인구	15,698 (2.9)	15,841 (0.9)	15,656 (0.8)	15,962 (0.8)	16,392 (0.8)	15,559 (0.4)	15,847 (1.2)
경제활동참가율	60.8	61.0	61.5 [61.1]	60.8 [60.8]	59 [61.1]	62.0 [61.3]	61.5 [61.0]
실업률	3.6	3.7	3.5 [3.6]	3.3 [3.4]	4.2 [3.9]	3.4 [3.4]	3.1 [3.2]
고용률	58.6	58.7	59.3 [58.9]	58.9 [58.7]	57.4 [58.8]	59.9 [59.2]	59.5 [59.1]

주 : 1)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안은 계절조정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8> 실업률 전망 ; 계절조정 전년동기 대비

	2011					2012		
	1/4 ¹⁾	2/4 ¹⁾	3/4 ¹⁾	4/4 ²⁾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업률	4.2	3.4	3.1	3.1	3.5	3.7	3.2	3.5
(계절조정)	(3.9)	(3.4)	(3.2)	(3.2)		(3.6)	(3.4)	

□ 가계대출 현황

○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억제 노력 및 주택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말 현재 876.3조원으로 전년말보다 3.5% 늘어났으며 2011년 하

반기 들어서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가계대출은 주택구입목적보다 생활형자금 성격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주택담보 대출중 주택구입 이외 목적 대출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1년 상반기중 48.4%를 기록하였음.

- － 2011년 상반기중 신용대출은 4.1% 증가하여 주택담보 대출증가율 3.7% 을 상회

- 이와 함께 신용카드대출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음.

- － 생활형자금성격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가격상승에 따른 주거비부담 높은 물가 오름세 등으로 생계비 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수지 지출소득이 악화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가계신용은 2/4분기 중 전년동기(17.3조원)보다 확대된 18.9조원 증가를 기록

- 2/4분기중 가계대출은 17.8조원 증가하여 전년동기(16.5조원)보다 증가폭 확대

- － 예금은행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8.6조원 → 9.2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주택대출 및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보다 증가폭이 확대(5.3조원 → 6.4조원)

- －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축소(2.6조원 → 2.2조원)

- 판매신용은 신용카드회사를 중심으로 2/4분기 중 1.1조원 증가로 전환

- 가계대출 잔액(금년 6월말 기준)의 경우, 전년 6월말 대비 예금은행의 비중 (55.1%→53.8%)은 하락,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승, 기타금융 기관은 동일

<표 2-9> 가계신용 동향

(기간 중 증감액, 조원)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1/4	2/4
가계신용	67.3	6.0	17.3	16.3	27.8	10.5	18.9
가계대출	59.6	5.2	16.5	14.6	23.4	10.7	17.8
예금은행	22.0	0.7	8.6	3.7	8.8	3.7	9.2
주택대출	15.9	1.8	5.1	2.8	6.3	4.5	5.1
(주택담보대출)	20.3	3.0	5.9	3.6	7.7	5.4	5.4
기타대출	6.0	-1.0	3.6	1.0	2.5	-0.9	4.1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1/4	2/4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3.2	2.7	5.3	6.5	8.7	2.7	6.4
	주택대출	8.4	1.6	2.1	1.8	2.9	1.8	2.5
	(주택담보대출)	8.5	1.6	2.2	1.8	2.9	1.9	2.5
	기타대출	14.8	1.1	3.1	4.7	5.9	0.9	3.9
	기타금융기관	14.5	1.7	2.6	4.4	5.8	4.4	2.2
	판매신용	7.7	0.8	0.8	1.8	4.4	-0.3	1.1

자료 : 한국은행

<표 2-10>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비중

(단위 :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예금취급기관	74.6	74.8	74.7	74.7	74.5	74.8
예금은행	55.2	55.1	54.6	54.1	53.8	53.8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9.4	19.6	20.1	20.6	20.7	21.0
상호저축은행	1.0	0.9	0.9	1.0	1.0	1.1
신용협동기구	18.2	18.5	19.0	19.4	19.5	19.8
우체국 등	0.2	0.2	0.2	0.2	0.2	0.2
기타금융기관	25.4	25.2	25.3	25.3	25.5	25.2
보험기관	9.0	8.8	8.7	8.6	8.5	8.4
여신전문기관	4.4	4.4	4.5	4.6	4.6	4.6
기타 ¹⁾	12.1	12.0	12.1	12.2	12.4	12.1

주 : 1) 연금기금,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한국장학재단 등

자료 : 한국은행

<표 2-11> 가구(2인이상) 실질소득 및 지출 증가율 변화(전년 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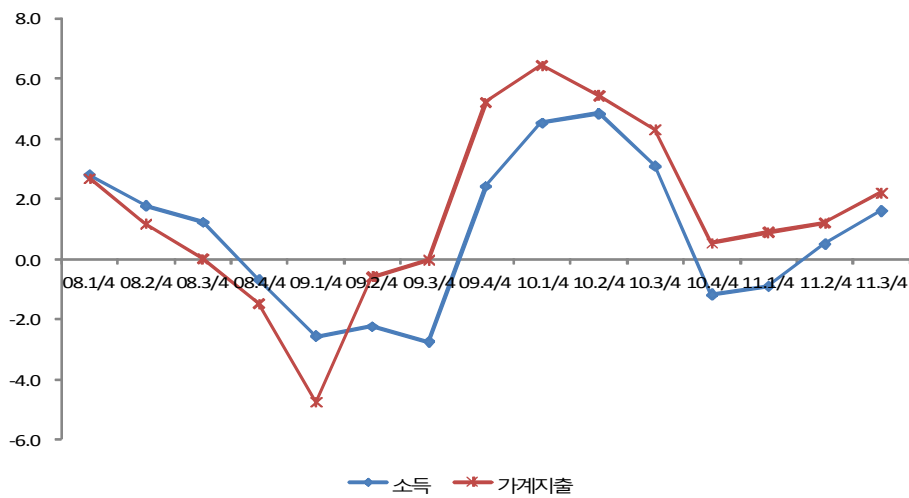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소득	2.8	1.8	1.2	-0.7	-2.6	-2.2	-2.7	2.4	4.5	4.8	3.1	-1.2	-0.9	0.5	1.6
경상소득	3.1	1.8	1.1	0.3	-3.3	-2.1	-1.9	2.0	4.4	4.8	3.3	-0.4	0.1	0.4	1.5
근로소득	6.0	3.5	2.0	1.8	-2.0	-1.4	-2.4	1.2	2.2	3.0	3.5	-0.9	0.9	0.5	1.4
사업소득	-1.4	-2.1	-2.2	-5.1	-7.4	-4.8	0.4	7.3	9.5	8.4	2.8	-1.1	-1.9	-1.3	0.1
가계지출	2.7	1.2	0.0	-1.5	-4.8	-0.6	0.0	5.2	6.4	5.4	4.3	0.5	0.9	1.2	2.2
소비지출	2.3	1.4	-0.5	-1.9	-6.9	-0.9	0.9	5.5	7.1	4.6	3.0	1.3	0.7	0.9	2.1
식료품·비주류음료	4.5	4.1	2.1	1.4	-11.0	-5.3	-8.9	-3.7	2.2	0.4	2.7	-3.0	-2.7	1.6	-1.9

자료 : 통계청 KOSIS.

- 실질 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1/4분기는 -0.9%, 실질소득 증가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4분기와 3/4분기의 경우 각각 0.5%, 1.65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상소득과 근로소득의 경우 작년 4/4분기와 같은 마이너스 증가율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증가율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가계지출의 경우 2011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소득과 가계지출 추이



-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경우 각각 19%대와 25%대에서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GDP대비 국가채무의 규모도 2010년부터 축소외더 2012년에는 32.8%로 2011년보다 2.3%p 축소되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표 2-12> 국가 채무 및 부담률 추이

(조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국가채무 ³⁾	359.6	407.2	435.5	448.2
[GDP대비, %]	[33.8]	[36.1]	[35.1]	[32.8]

구분	2009	2010	2011	2012
조세부담률 ⁴⁾	19.7	19.3	19.3	19.2
국민부담률 ⁴⁾	25.6	25.0	25.2	25.1

주: 1) 용자수입 포함.

2) ()안은 직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 < >안은 직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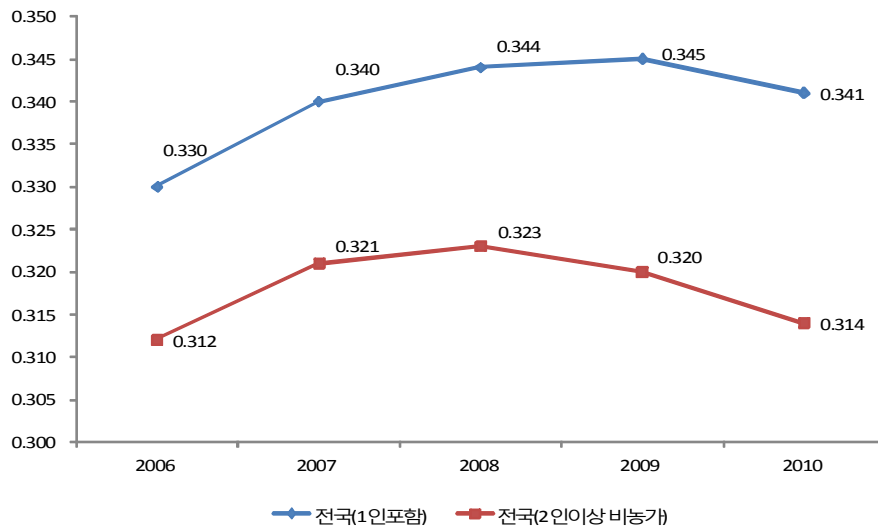
3) 2009년은 결산 기준.

4) 2010년 및 201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012년은 세입예산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 소득재분배 추이를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2006년 0.33에서 2009년 0.345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에는 0.341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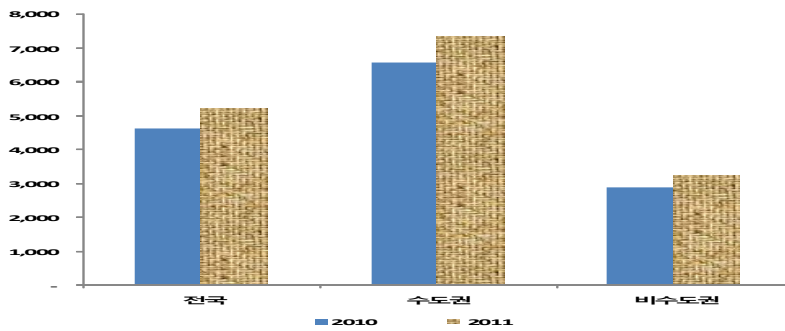
[그림 2-6] 소득분배 추이(지니계수)



○ 2인이상 가구(비농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까지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지만 2009년에는 0.32로 전년도보다 0.3%p 개선됨. 2010년에는 0.314로 2009년보다 0.6%p 개선됨.

□ 가구당 부채수준을 살펴보면, 2010년 가구당 4600만원있던 부채가 2011년 52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7] 가구당 부채수준



제 2절 보건복지정책 여건 및 전망

1. 보건복지 환경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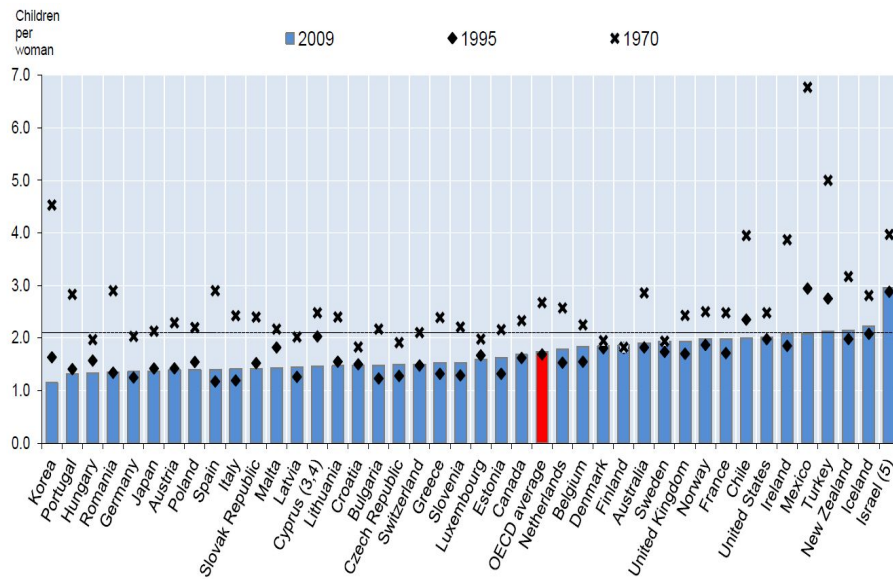
□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관심의 급등

- 무료급식 확대로 촉발된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은 그 영역을 넘어 “복지담론”을 둘러싸고 정치 쟁점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음.
 - － 따라서, 2012년에는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모형 뿐 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관심과 논쟁이 더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보육’ 강화 필요성 증가

-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는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로 변화함.
 -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 1970년 4.53명,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2000년 1.47명, 2009년 1.15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왔음.
 - －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계획에 성공한 수범국으로 손꼽혔으나, 현재는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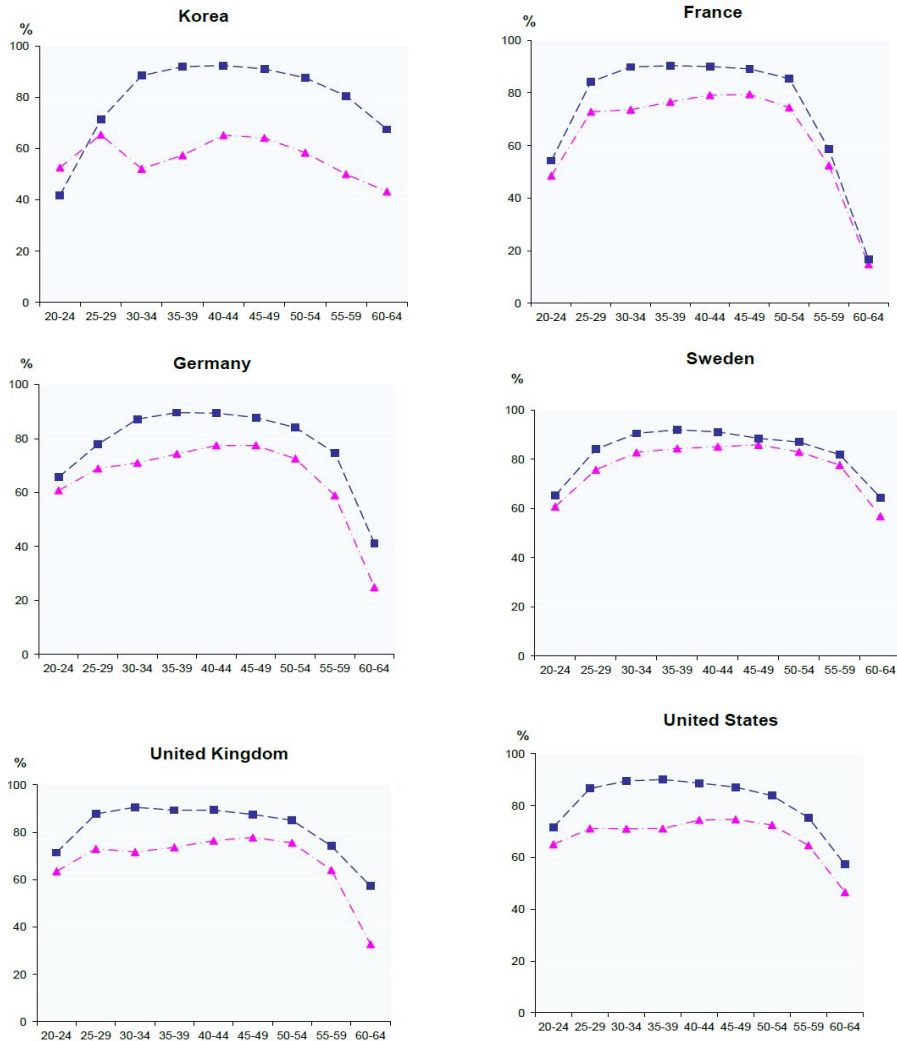
[그림 2-8] OECD 국가의 출산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다중적이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의한 양육 부담과 보육·교육비 부담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음.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의 사회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스웨덴, 프랑스, 독일—은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고용률의 부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주요 OECD 국가의 연령별 고용률(2007년)



주 : ■ : 남성, ▲ : 여성
 자료: OECD Family Database

- 영국과 미국 같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경우, 20대 중반에서 30대 사이에 고용률이 약간 떨어지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음.
-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전체적으로 낮은 동시에, 20대 중반에서 30대까지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분명한 ‘M자’ 커브를 그리고 있음.

- 그만큼 출산·보육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노동의 수요 측면(회사)과 공급 측면(가정) 모두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상존해 있음을 의미.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맞벌이가구는 중상층과 상위층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반면, 홑벌이가구는 빈곤층과 중하층에 분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는 달리 말하면, 보육과 교육을 위한 시간적 여력이 있는 가구는 경제적 여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구는 시간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2-13>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계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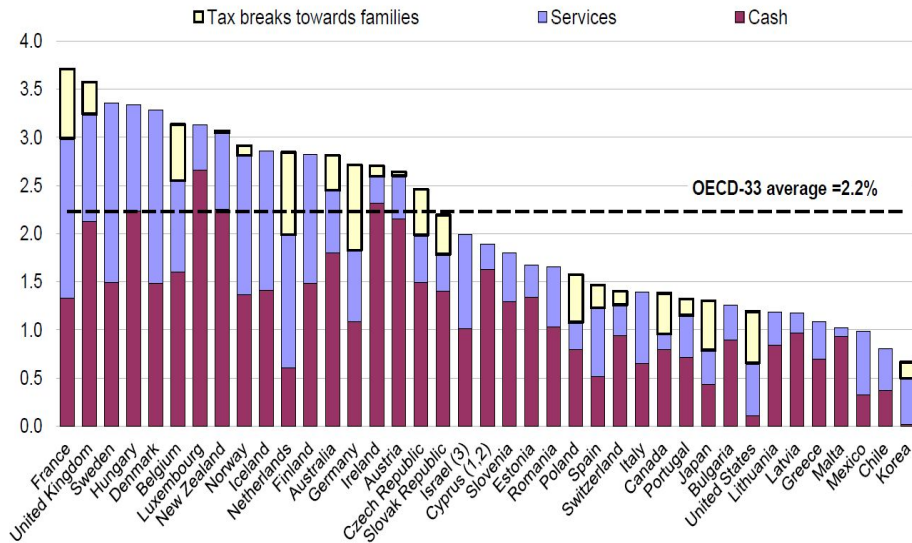
(단위: %)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도시근로자	홑벌이	11.5	20.7	48.9	18.9
	맞벌이	3.9	10.3	50.4	35.5
2인이상	홑벌이	13.4	16.1	48.7	21.8
	맞벌이	3.2	7.8	48.1	40.8

자료: 여유진 외(2009)

-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을 포함한 가족지원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한국의 GDP 대비 가족지원의 수준은 현금이 0.02%, 서비스가 0.48%, 세금을 통한 지원이 0.25%로 합계 0.66%에 불과함. 이는 OECD 평균인 2.2%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그림 2-10] OECD 국가의 GDP 대비 가족지원 수준(2007년)



○ 저출산의 문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부양비 증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침식하는 장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장의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구소득, 아동의 삶의 질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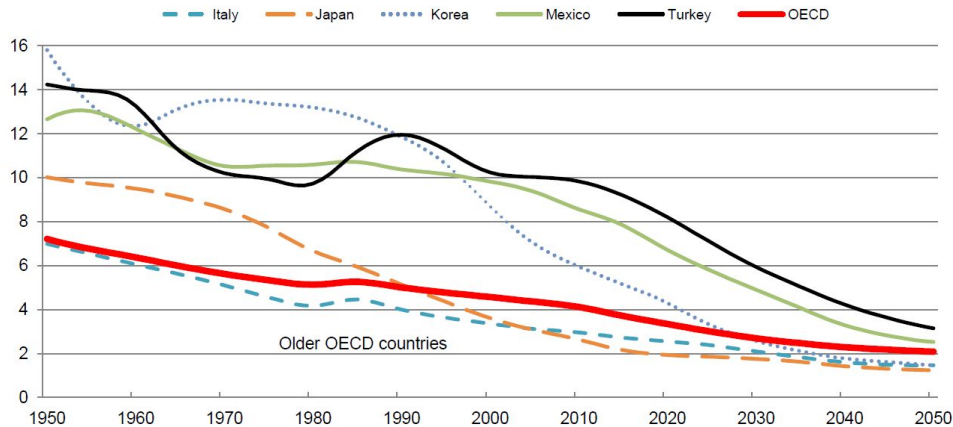
－ 따라서 질 좋은 저렴한 보육시설과 보육환경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보육’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기대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소득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한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름.

－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1인당 근로연령 인구의 수는 6.3명이지만, 2050년에는 노인부양비는 1.5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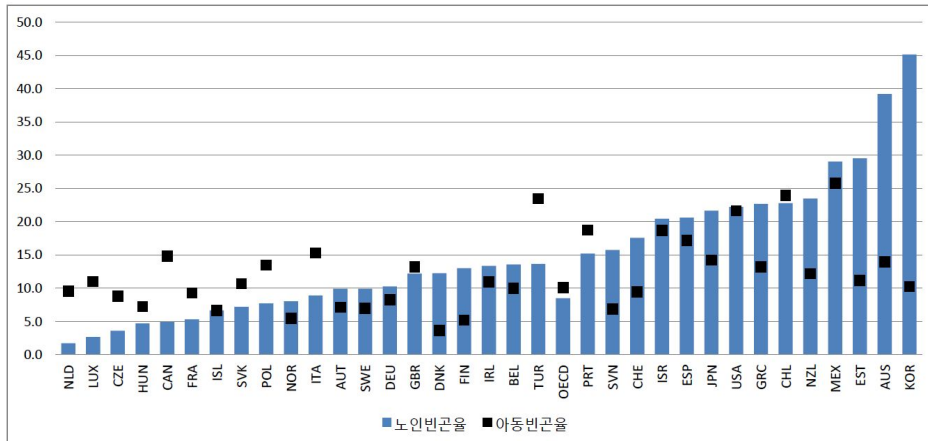
[그림 2-11] OECD 국가의 노인부양비 추이



주: 1950년-2050년 간 노인(65세 이상) 인구 1명당 근로연령(20-64세) 인구의 수
 자료: OECD(2011)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혹은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가장 큰 문제는 노인의 소득보장과 건강 문제임.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기준으로 45.1%로 현재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이는 현 세대 노인의 공적 연금 지급률이 매우 낮고, 자녀의 부양의식과 실제 경제적 부양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대체해 줄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 2-12] OECD 국가의 노인부양비 추이



주: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

자료: OECD(2011)

- 2000년 WHO에 의해 추정된 국가별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HALE)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65.1세로 51위로 나타남(1위 일본(74.5세), 2위 호주(73.2), 3위 프랑스(73.1세) 순임)
-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 5명 중 약 1명 정도는 의사가 진단한 만성 질환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4>노인의 의사진단 만성질환수(2008년)

	(단위: %)				
	없다	1개	2개	3개이상	계
전체		-	-	-	-
65세이상	18.7	25.4	25.2	30.7	100
60세이상	21.2	27	23.9	27.9	100
성별		-	-	-	-
남성	27.5	31.3	22.3	18.9	100
여성	16.4	23.8	25.1	34.6	100

자료: www.kosis.kr

-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체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

- 1999년에 전국민 공적연금 개보험화가 개시되었다고 하지만, 200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적용제외자가 1,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우혜봉·최은아, 2009).
- 또한,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최저 수준이 낮아 빈곤을 탈피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됨. 표준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공적연금의 실질(예상) 소득대체율은 30%에 불과함(류건식, 2009; 정경희 외, 2011 재인용).

<표 2-15> 적용제외자 전체 및 무소득배우자 성별 및 연령분포(2009년 4월 기준)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적용제외자 전체						
18~39세	3,062,007	59.28	4,166,430	51.06	7,228,437	54.27
40~49세	1,055,692	20.44	2,298,775	28.19	3,354,467	25.18
50~59세	1,047,694	20.28	1,689,137	20.71	2,736,831	20.55
합 계	5,165,393	100.0	8,154,342	100.0	13,319,735	100.0
무소득배우자						
18~39세	186,335	27.91	1,880,894	38.65	2,067,229	37.35
40~49세	277,730	41.60	1,733,545	35.62	2,011,275	36.34
50~59세	203,508	30.48	1,252,204	25.73	1,455,712	26.30
합 계	667,573	100.0	4,866,643	100.0	5,534,216	100.0

자료: 우혜봉·최은아(2009)

- 2008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개시되어 노인 인구의 약 70%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급여액이 낮아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기능은 매우 미흡함.
- 기초노령제도의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 값)의 5%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인 인상이 예정되어 있음(매년 0.05%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빈곤이나 박탈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기초보장 사각지대’가 편재하고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 노인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22.8%, 여성 노인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39.6%에 이르지만, 기초보장 수급률은 각각 27.7%와 4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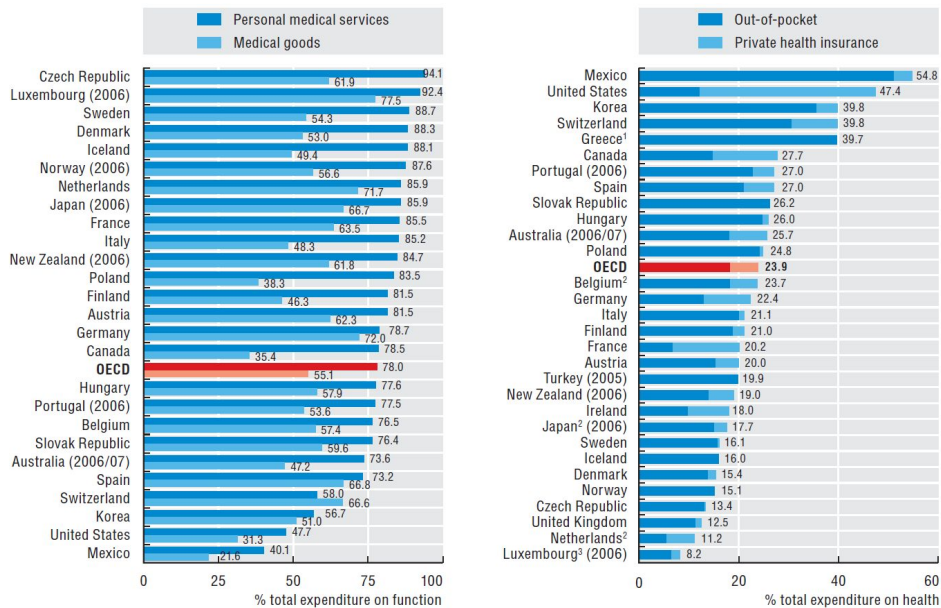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가구	남성노인가구주가구	여성노인가구주가구
기초보장전 빈곤율	11.26	22.82	39.64
기초보장 수급률	45.49	27.67	45.90

자료: 여유진 외(2010)

- 노인의 소득보장 수요와 함께, 노인 인구의 절대적·상대적 증가에 따라 의료 수요와 비용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에서 사부담율(out-of-pocket expenditure)은 전체 의료비의 39.8%로 OECD 국가 중 멕시코(54.8%)와 미국(47.4%)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2-13] OECD 국가의 의료비 부담



자료: OECD(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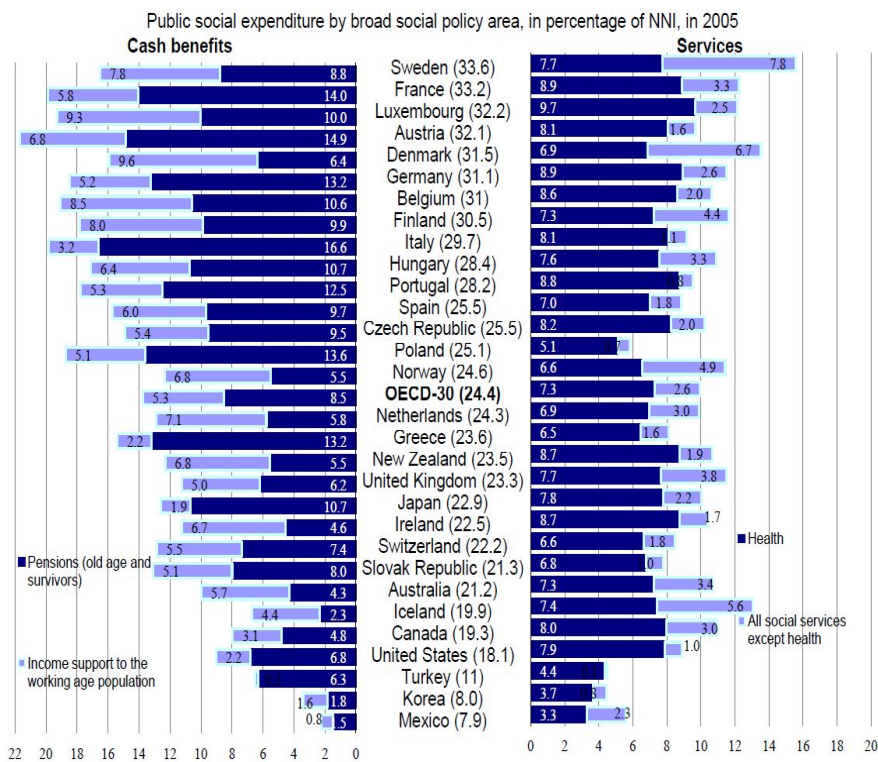
□ 사회갈등의 중재자 혹은 촉발자로서 사회복지의 역할 증가

- 최근 경제적·정치적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세대간·

지역간·이념간 사회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됨.

- 사회갈등에 있어 사회복지의 대체로 갈등의 중재자 혹은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 갈등 유발자의 역할을 하기도 함.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적 사회지출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일자리 부족 및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가, 저출산·고령화, 생활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압박 등으로 인해 복지 수요와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2-14] OECD 국가의 공적 사회지출



자료: OECD(2009)

□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보건의료비의 지출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증가함
- 2002-2007년 연평균 노인인구 증가율은 5.0%로 OECD 평균(1.8%)의

- － 2.8배에 달하여 향후 보건의료비 지출이 매우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의 비중은 2005년 9.22%에서 2009년 10.87%로 높아지고 있음.
- 노인들은 만성질환, 복합성병을 주로 앓으므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의료이용 행태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급체계가 미흡하며, 중복적인 의료이용으로 인한 낭비적 지출 요소가 존재함
 - －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방문일수는 연간 34.2일로 64세 미만(16.4일)의 2.1배로 높음 (2009)
 - － 65세 이상의 1인당 건강보험 약품비는 64세 이하에 비해 4배 이상 (2009)
- 노인 1인 가구 및 독거노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
 - － 2010년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102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1/5 수준이며, 이 중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독거 노인은 17만6천명으로 추정됨.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수혜가 2010년 31만6천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5.9%이며, 아직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
 -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방문횟수는 13.0회(2008)로 OECD 평균(2007년 6.8회)의 1.9배이며, 환자 1인당 평균입원일수는 15.8일(2007)로 OECD 평균(2007년 9.6일)의 1.6배로 의료이용량이 매우 높으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의료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의료공급체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
 - － 고가의료장비의 과잉 공급, 이용 및 대형의료기관 선호현상 등 의료서비스 이용 전반에 낭비적 요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에 대한 효율적 통제기전이 요구됨

-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건강보험재정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이 요구되며 입원, 외래, 약제 등 분야별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중 장기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노인대상 의료서비스의 효율화

- 노인의 질환 및 건강문제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급체계의 구축
 - 전문과목 중심의 현재 의료체계는 다양한 만성질환과 급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며 의료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크므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마련
 - 다른 성인과 달리 복합상병을 주로 앓는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공급체계 개선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운영
 - 노인은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모두 필요로 하므로 서비스 공급체계에 서로 의료와 요양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 요양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글로벌 경제위기의 보건의료시장에의 영향

- 글로벌 경제위기의 위협과 국내 경제 불안의 가능성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어 2011년 9월에도 세계 경제가 위기 국면에 진입하였다는 진단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짐
 -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에서의 경제 불안요소가 국내에 즉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전반과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사회경제적 불안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중산층 감소, 양극화 지속으로 의료이용, 건강보장에서의 취약계층 여전히 존재
 -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과거 10년간 선진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임금 불평등의 확대를 보이고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었고 전반적으로 의료

- 의 질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의 취약계층은 해소되지 않음
- 지불능력의 10%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수의 10~15%¹⁾
 -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의료이용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가 전체 지역가입자세대의 25% 규모 (2008년 207만 세대)²⁾
 - 차상위계층의 45%가 의료이용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하였고,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의 12%에서 나타나며 치료 포기의 가장 큰 이유가 진료비 부담(84%)이었음³⁾
 - 성인의 17%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였고, 당뇨병(21.5%), 고혈압(17.4%), 뇌졸중(20.7%), 천식(25.3%), 만성폐쇄성질환(28%) 등 주요 질환에서 미충족 의료 비율이 높음(2005)⁴⁾
-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 증가, 이해당사자의 참여요구 증가
- 이해당사자의 경제적 이해와 참여하게 관련되는 정책 변화에 대한 의사표명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직적 반발과 법적 소송도 증가하고 있음
 - 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집단 간 충돌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 추진 시 조정과정이 중요하게 부각됨
 -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한미 FTA 협정문에 약제의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과 관련한 독립적 검토 절차의 마련을 명시하고 있어, 협정 발효 시 절차 마련과 운영이 요구됨
- 경제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및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보장 대책 강화 필요
- 경제위기 시 국민의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의료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약계층을 겨냥한(targeting) 관리가 요구됨

1) 신영전.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료사각지대. 한국사회정책. 2010: 17(1); 95-127.

2) 신현웅.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2009.9

3) 이현주.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4) 허순임, 김미곤, 이수형, 김수정.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 최고 수준이며, 그 원인은 사회경제 전반에 있으나 자살 위험이 높은 취약층을 보건의료체계에서 집중 관리하여 자살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성이 높은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건강보장 정책의 개선

- 건강보험 보장성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 설정 및 국가 건강보장의 장기적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급여되지 못한 서비스 및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있는 계층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 - 질환 영역(중증질환, 만성질환 등) 및 인구사회학적 대상(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서비스 및 기술 분야(고가치료제 등) 등 부문별로 보장성 강화의 필요도와 소요자원 추계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장단기적으로 설정

○ 정책,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제공 강화,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

- 건강보험 보장 및 재정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적절한 참여 방안 마련
- 이해당사자와 독립된 전문가적 판단이 가능한 의사결정과정 마련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및 합리적 절차의 수립을 위한 방법론적 검토
- 정책 추진과 관련된 이해단체의 조직적 저항과 법적 분쟁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
-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시민위원회 등 참여적 의사결정체계 마련

□ 질 좋은 의료서비스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의료서비스, 의약품 등 보건의료관련 자원이 팽창하고 이용에서의 접근성이 해소될수록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사회적 압력이 증가함 - 일반인과 전문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중에서 보장성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가 가장 낮았음

-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의 요구가 증가함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건강 및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
 -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질병 치료과정이 복잡해지고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소비자는 구체적 정보를 원하게 되며, 정보 접근 및 건강에 대한 권리의식이 증가함
 -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SNS 등 새로운 정보 채널을 통한 의료정보 유통이 증가함 - 정보 제공 확대의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불법 광고의 소지가 있는 정보 유통행위도 증가할 것임
-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의료사고, 의약품 부작용 등 의료이용에 의한 건강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요구 증가
 -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요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2011년 의료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2012년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제도 시행이 예정되면서 구체적 제도방안 마련 등 사회적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009년 26,827건에서 2010년 53,854건으로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증가할수록 그에 대한 합리적 보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이며,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가 실시되면 의약품 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임
-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대책에 대한 요구 증가
 - 의약품의 새로운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의약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품질 불량 의약품, 가짜의약품의 유통 등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식품 이물 및 식품에서의 안전문제는 근절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상기후 및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보건의료 외적 요인에 의하여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음
-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장성의 제고를 위한 의료공급체계 관리 선진화
 -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를 체계화하고 의료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pay-for-performance, 정보 공개 등 기존에 실시해 온 제도를 확대 발전
 -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에 있는 서비스, 약제 등의 질관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급여권 내에 편입하여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 관리체계 구축
- 보건의료, 건강 관련 정보의 소비자 제공 확대 및 새로운 정보유통 패러다임에 맞는 관리체계의 개선
 - 건강관리, 질병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의 행태변화가 중요한 만큼 건강행태 및 올바른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
 - 보건관련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하여 소비자 및 이해당사자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 홍보 및 의견 수렴과정의 확대
 - SNS 등 새로운 정보채널을 통한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의 불법 광고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 의료분쟁조정제도 및 의약품피해구제제도 구축, 운영
 - 2012. 4월 시행 예정인 의료사고피해구제제도의 구축 및 시행
 - 2011. 4월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설립 예정인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의약품피해구제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 시행
- 보건의료분야 내적 및 외적 요인에 의한 국민건강 위협 요소를 사전 사후적으로 관리, 적응하는 대책 강화
 - 식품, 의약품, 의료용품 등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정보 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하고 건강위험 요소 발생 시 신속한 제품평가 및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수립

- －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가짜의약품 등 건강위험 물질의 국내 유통을 차단, 감시할 수 있는 체계 강화
 - － 환경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국민건강 위험 발생에 대비한 준비대책 강화
- FTA 영향 증가와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한 보건의료시장 대책 필요
 - － 한미 FTA협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한미 FTA의 현실화가 가까워지고 있음
 - － 한미 FTA 이행 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보건의료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우려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증가할 것임
 - －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시설, 인력, 서비스의 공급이 확산될 전망
- 국제 교류의 증가로 기후변화 및 신종 전염병, 자연재해 등의 국외에서 발생한 문제의 국민 건강 위협 가능성 증가
 - － 기후변화, 신종 질병의 창궐, 자연재해 등 글로벌 환경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은 예측이 어려우며, 발생시 피해의 규모는 매우 심각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FTA 등 무역협상, 국제협약 등에 의한 국내 보건의료시장 대책의 구체화 필요
 - － 한미 FTA 이행 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협상 이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약품 시장에서의 합리적 경쟁체제 위협 요소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방안 마련
 - － 국내 시장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제약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제품, 기술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R&D 지원, 촉진 방안을 마련
- 급작한 기후변화, 신종 질병 확산에 대한 위기대응체계의 강화
 - －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의 보건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와 업무지침을 마련함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분석

제3장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 조사

제1 절 보건복지정책 국민인식조사 결과 분석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는 다음과 같음

- 전체 응답자의 49.1%는 남성이었고, 여성응답자는 50.9% 임.
-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2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30대 21.4%, 50대 18.6%, 20대 17.6%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 전체 응답자의 44.9%가 대졸 이상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고졸 37.3% 중졸이하는 17.7% 임.
- 본인의 혼인 상태에 대해서는 69.4%가 기혼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미혼이라는 응답은 23.6% 임.
- 전체 응답자의 87.3%가 시나 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에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2.7% 임.
- 평균 가구소득에 대해서는 21.2%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00만원에서 400만원 18.7%, 500만원 이상 17.2%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91	49.1
	여	509	50.9
	계	1000	100.0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176	17.6
	30대	214	21.4
	40대	220	22.0
	50대	186	18.6
	60대	111	11.1
	70대 이상	93	9.3
	계	1000	100.0
학력	중졸이하	177	17.7
	고졸	373	37.3
	대졸 이상	449	44.9
	계	999	100.0
혼인상태	미혼	236	23.6
	기혼	694	69.4
	기타	70	7.0
	계	1000	100.0
거주 지역	시, 구	873	87.3
	군	127	12.7
	계	1000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13.6
	100~200만원 미만	167	17.0
	200~300만원 미만	209	21.2
	300~400만원 미만	184	18.7
	400~500만원 미만	122	12.4
	500만원 이상	169	17.2
	계	985	100.0

*광역자치단체별 응답분포는 서울(21.1%), 부산(7.2%), 대구(4.9%), 인천(5.4%) 광주(2.8%), 대전(3.0%), 울산(2.2%), 경기(23.5%), 강원(3.0%), 충북(3.0%), 충남(4.0%), 전북(3.5%), 전남(3.5%), 경북(5.4%), 경남6.5%), 제주(1.1)임.

□ 복지수준 인식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38.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응답자의 2.3%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매우 낮다고 평가한 응답자도 9.4%에 이릅니다. 복지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61.3%이며 이중 ‘다소 낮다’가 2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6지선다로 나타난 보기를 2개씩 합하여 분류하면 부정적 입장은 32.6%, 긍정적인 입장은 14.8%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지만 ‘다소 낮다’와 ‘다소 높다’로 응답한 중간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의 비중은 52.6%로 가장 높게 타나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64.4%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여성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었음. 보기 문항을 두 개씩 묶었을 경우에도 여성은 17.2%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남성은 12.2%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남.

<표 3-2> 복지수준 인식

단위: 명(%)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계
남	60 (12.2)	100 (20.4)	156 (31.8)	115 (23.4)	53 (10.8)	7 (1.4)	491 (100.0)
여	34 (6.7)	132 (25.9)	131 (25.7)	124 (24.4)	72 (14.1)	16 (3.1)	509 (100.0)
계	94 (9.4)	232 (23.2)	287 (28.7)	239 (23.9)	125 (12.5)	23 (2.3)	1000 (100.0)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복지수준에 평가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음. 이는 고령자 일수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됨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표 3-3> 연령대별 복지수준 인식

단위: 명(%)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계
20대	14 (8.0)	49 (27.8)	56 (31.8)	39 (22.2)	18 (10.2)	0 (0.0)	176 (100.0)
30대	23 (10.7)	54 (25.2)	70 (32.7)	52 (24.3)	14 (6.5)	1 (0.5)	214 (100.0)
40대	16 (7.3)	53 (24.1)	79 (35.9)	48 (21.8)	20 (9.1)	4 (1.8)	220 (100.0)
50대	23 (12.4)	46 (24.7)	45 (24.2)	45 (24.2)	25 (13.4)	2 (1.1)	186 (100.0)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계
60대	13 (11.7)	17 (15.3)	22 (19.8)	34 (30.6)	22 (19.8)	3 (2.7)	111 (100.0)
70세 이상	5 (5.4)	13 (14.0)	15 (16.1)	21 (22.6)	26 (28.0)	13 (14.0)	93 (100.0)
계	94 (9.4)	232 (23.2)	287 (28.7)	239 (23.9)	125 (12.5)	23 (2.3)	1000 (100.0)

-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6지선다를 두 개씩 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이 낮아질수록 복지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역시 소득이 낮아질수록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에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표 3-4> 소득집단별 복지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계
100만원 미만	13 (9.7)	26 (19.4)	30 (22.4)	30 (22.4)	28 (20.9)	7 (5.2)	134 (100.0)
100~200만원 미만	19 (11.4)	36 (21.6)	45 (26.9)	37 (22.2)	24 (14.4)	6 (3.6)	167 (100.0)
200~300만원 미만	25 (12.0)	48 (23.0)	50 (23.9)	58 (27.8)	25 (12.0)	3 (1.4)	209 (100.0)
300~400만원 미만	16 (8.7)	48 (26.1)	62 (33.7)	39 (21.2)	16 (8.7)	3 (1.6)	184 (100.0)
400~500만원 미만	11 (9.0)	28 (23.0)	39 (32.0)	34 (27.9)	9 (7.4)	1 (.8)	122 (100.0)
500만원 이상	10 (5.9)	43 (25.4)	55 (32.5)	37 (21.9)	21 (12.4)	3 (1.8)	169 (100.0)
계	94 (9.5)	229 (23.2)	281 (28.5)	235 (23.9)	123 (12.5)	23 (2.3)	985 (100.0)

*무응답 : 15(1.5%)

□ 소득분배 정도

-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수준이 얼마나 평등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77.7%가 분배수준이 불평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79.3%)이 여성 (76.2%)보다는 약간 더 소득분배 상태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 소득분배 정도 인식

단위: 명(%)

	매우 불평등 하다	불평등 하다	다소 불평등 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계
남	133 (27.1)	130 (26.5)	126 (25.7)	49 (10.0)	46 (9.4)	7 (1.4)	491 (100.0)
여	112 (22.0)	158 (31.0)	118 (23.2)	75 (14.7)	44 (8.6)	2 (0.4)	509 (100.0)
계	245 (24.5)	288 (28.8)	244 (24.4)	124 (12.4)	90 (9.0)	9 (0.9)	1000 (100.0)

- 연령별로는 40대 (84.1%)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70대 이상에서는 58.1%만이 소득분배상태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40대 이하가 50대 이상 세대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노인층에 대한 소득재분배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기인하기도 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3-6> 연령대별 소득분배 정도 인식

단위: 명(%)

	매우 불평등 하다	불평등 하다	다소 불평등 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계
20대	34 (19.3)	58 (33.0)	49 (27.8)	20 (11.4)	13 (7.4)	2 (1.1)	176 (100.0)
30대	55 (25.7)	51 (23.8)	66 (30.8)	34 (15.9)	7 (3.3)	1 (0.5)	214 (100.0)
40대	64 (29.1)	78 (35.5)	43 (19.5)	15 (6.8)	19 (8.6)	1 (0.5)	220 (100.0)
50대	46 (24.7)	52 (28.0)	47 (25.3)	20 (10.8)	18 (9.7)	3 (1.6)	186 (100.0)
60대	28 (25.2)	28 (25.2)	24 (21.6)	13 (11.7)	16 (14.4)	2 (1.8)	111 (100.0)
70세 이상	18 (19.4)	21 (22.6)	15 (16.1)	22 (23.7)	17 (18.3)	0 (0.0)	93 (100.0)
계	245 (24.5)	288 (28.8)	244 (24.4)	124 (12.4)	90 (9.0)	9 (0.9)	1000 (100.0)

- 소득계층별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대의 소득계층에서 불평등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82%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가장 낮은 비중 (69.4%)로 나타나, 500만원 이상 가구의 불평등도 인식 (75.8%)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월평균 소득 400만원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분배상태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반면, 400만원 이상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분배상태가 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합하여 보건대, 복지수혜 혜택이 비교적 많은 저소득계층과 노인층이 느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는 고소득층이나 청,중,장년층에 비해 낮고, 중산층과 40대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정도가 불평등하다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산층과 40대의 복지수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시사함.

<표 3-7> 소득집단별 소득분배 정도 인식

단위: 명(%)

	매우 불평등 하다	불평등 하다	다소 불평등 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계
100만원 미만	34 (25.4)	31 (23.1)	28 (20.9)	17 (12.7)	21 (15.7)	3 (2.2)	134 (100.0)
100~200 만원미만	36 (21.6)	58 (34.7)	36 (21.6)	29 (17.4)	7 (4.2)	1 (0.6)	167 (100.0)
200~300 만원미만	56 (26.8)	63 (30.1)	51 (24.4)	24 (11.5)	14 (6.7)	1 (0.5)	209 (100.0)
300~400 만원미만	46 (25.0)	56 (30.4)	49 (26.6)	21 (11.4)	11 (6.0)	1 (0.5)	184 (100.0)
400~500 만원미만	33 (27.0)	33 (27.0)	28 (23.0)	14 (11.5)	13 (10.7)	1 (0.8)	122 (100.0)
500만원 이상	38 (22.5)	42 (24.9)	48 (28.4)	16 (9.5)	23 (13.6)	2 (1.2)	169 (100.0)
계	243 (24.7)	283 (28.7)	240 (24.4)	121 (12.3)	89 (9.0)	9 (0.9)	985 (100.0)

*무응답 : 15(1.5%)

□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평가

-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현정부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전체의

73.9%가 성과가 미흡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성별분포를 보면, 남성 (78.1%)이 여성 (70%)보다 더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남	129 (26.3)	130 (26.5)	124 (25.3)	44 (9.0)	52 (10.6)	12 (2.4)	491 (100.0)
여	94 (18.5)	137 (26.9)	125 (24.6)	69 (13.6)	61 (12.0)	23 (4.5)	509 (100.0)
계	223 (22.3)	267 (26.7)	249 (24.9)	113 (11.3)	113 (11.3)	35 (3.5)	1000 (100.0)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83.6%), 40대 (82.3%), 30대 (77%)의 순으로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강했으나, 70대 이상에서는 57%가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우수하다는 의견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60대의 경우도 미흡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65.7%로 청장년층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3-9> 연령대별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20대	42 (23.9)	54 (30.7)	51 (29.0)	9 (5.1)	18 (10.2)	2 (1.1)	176 (100.0)
30대	51 (23.8)	60 (28.0)	54 (25.2)	34 (15.9)	10 (4.7)	5 (2.3)	214 (100.0)
40대	56 (25.5)	71 (32.3)	54 (24.5)	18 (8.2)	16 (7.3)	5 (2.3)	220 (100.0)
50대	42 (22.6)	49 (26.3)	42 (22.6)	22 (11.8)	26 (14.0)	5 (2.7)	186 (100.0)
60대	20 (18.0)	26 (23.4)	27 (24.3)	12 (10.8)	15 (13.5)	11 (9.9)	111 (100.0)
70세 이상	12 (12.9)	7 (7.5)	21 (22.6)	18 (19.4)	28 (30.1)	7 (7.5)	93 (100.0)
계	223 (22.3)	267 (26.7)	249 (24.9)	113 (11.3)	113 (11.3)	35 (3.5)	1000 (100.0)

- 소득계층별로는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가구 (77.8%)에서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64.9%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덜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소득집단별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100만원미만	30 (22.4)	27 (20.1)	30 (22.4)	12 (9.0)	23 (17.2)	12 (9.0)	134 (100.0)
100~200만원미만	38 (22.8)	52 (31.1)	32 (19.2)	17 (10.2)	21 (12.6)	7 (4.2)	167 (100.0)
200~300만원미만	48 (23.0)	53 (25.4)	56 (26.8)	22 (10.5)	25 (12.0)	5 (2.4)	209 (100.0)
300~400만원미만	40 (21.7)	50 (27.2)	50 (27.2)	22 (12.0)	18 (9.8)	4 (2.2)	184 (100.0)
400~500만원미만	30 (24.6)	38 (31.1)	27 (22.1)	15 (12.3)	10 (8.2)	2 (1.6)	122 (100.0)
500만원이상	32 (18.9)	44 (26.0)	48 (28.4)	25 (14.8)	15 (8.9)	5 (3.0)	169 (100.0)
계	218 (22.1)	264 (26.8)	243 (24.7)	113 (11.5)	112 (11.4)	35 (3.6)	985 (100.0)

*무응답 : 15(1.5%)

□ 보건 및 의료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52.3%로 우수하다는 의견 47.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의견이 2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소 미흡 21.2%, 미흡 19.7% 순임.
- 여성응답자의 53.4%가 미흡한 편으로 응답하여 남성응답자의 51.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은 남성이 14.1%, 여성이 8.8%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1>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남	69 (14.1)	80 (16.3)	102 (20.8)	107 (21.8)	103 (21.0)	30 (6.1)	491 (100.0)
여	45 (8.8)	117 (23.0)	110 (21.6)	86 (16.9)	115 (22.6)	36 (7.1)	509 (100.0)
계	114 (11.4)	197 (19.7)	212 (21.2)	193 (19.3)	218 (21.8)	66 (6.6)	1000 (100.0)

-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는 70대 이상에서 우수하다는 평가가 73.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0대 62.1%, 50대 51.1% 순으로 나타나 높은 연령대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연령대별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20대	19 (10.8)	41 (23.3)	35 (19.9)	39 (22.2)	30 (17.0)	12 (6.8)	176 (100.0)
30대	29 (13.6)	53 (24.8)	52 (24.3)	40 (18.7)	34 (15.9)	6 (2.8)	214 (100.0)
40대	36 (16.4)	44 (20.0)	56 (25.5)	37 (16.8)	38 (17.3)	9 (4.1)	220 (100.0)
50대	16 (8.6)	35 (18.8)	40 (21.5)	32 (17.2)	50 (26.9)	13 (7.0)	186 (100.0)
60대	10 (9.0)	15 (13.5)	17 (15.3)	28 (25.2)	29 (26.1)	12 (10.8)	111 (100.0)
70세 이상	4 (4.3)	9 (9.7)	12 (12.9)	17 (18.3)	37 (39.8)	14 (15.1)	93 (100.0)
계	114 (11.4)	197 (19.7)	212 (21.2)	193 (19.3)	218 (21.8)	66 (6.6)	1000 (100.0)

- 소득집단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우수하다는 응답이 52.1%로 나타났고, 1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55.2%가 우수하다고 응답하였음.
- 100만원 미만 집단의 13.4%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가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와는 반대로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13.9%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3-13> 소득수준별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100만원 미만	10 (7.5)	25 (18.7)	25 (18.7)	19 (14.2)	37 (27.6)	18 (13.4)	134 (100.0)
100~200만원미만	18 (10.8)	26 (15.6)	42 (25.1)	32 (19.2)	36 (21.6)	13 (7.8)	167 (100.0)
200~300만원미만	29 (13.9)	53 (25.4)	34 (16.3)	42 (20.1)	43 (20.6)	8 (3.8)	209 (100.0)
300~400만원미만	21 (11.4)	37 (20.1)	48 (26.1)	37 (20.1)	32 (17.4)	9 (4.9)	184 (100.0)
400~500만원미만	14 (11.5)	24 (19.7)	31 (25.4)	22 (18.0)	22 (18.0)	9 (7.4)	122 (100.0)
500만원 이상	20 (11.8)	31 (18.3)	30 (17.8)	38 (22.5)	42 (24.9)	8 (4.7)	169 (100.0)
계	112 (11.4)	196 (19.9)	210 (21.3)	190 (19.3)	212 (21.5)	65 (6.6)	985 (100.0)

*무응답 : 15(1.5%)

□ 보육지원에 대한 평가

- 보육지원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8.6%가 미흡한 쪽으로 응답하였으며, 우수한 쪽의 응답은 41.3%임
 - 다소 미흡하다는 응답이 2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흡하다 20.6%, 다소 우수 18.9%, 순으로 응답하였음.
- 여성응답자의 43.5%가 우수하다고 응답하여 남성 39.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보육지원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23.9%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다소 우수하다와 미흡하다는 각 19.4%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음.
- 여성응답자의 21.8%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소 미흡 19.4%, 다소 우수 18.5%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4> 보육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남	86 (17.6)	95 (19.4)	117 (23.9)	95 (19.4)	71 (14.5)	26 (5.3)	490 (100.0)
여	78 (15.3)	111 (21.8)	99 (19.4)	94 (18.5)	88 (17.3)	39 (7.7)	509 (100.0)
계	164 (16.4)	206 (20.6)	216 (21.6)	189 (18.9)	159 (15.9)	65 (6.5)	999 (100.0)

*무응답 : 1(0.1%)

- 연령별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는 70세 이상 집단의 60.2%가 우수한 쪽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0대 41.9%, 50대 44.6%, 30대의 36.9%가 우수한 쪽으로 응답하였음.
- 매우 우수하다는 응답은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은 30대 집단임.
 - － 노후소득 보장 등 관련 제도의 주 대상의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보육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는 30대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5> 연령대별 보육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20대	35 (19.9)	47 (26.7)	37 (21.0)	26 (14.8)	25 (14.2)	6 (3.4)	176 (100.0)
30대	47 (22.0)	33 (15.4)	55 (25.7)	39 (18.2)	30 (14.0)	10 (4.7)	214 (100.0)
40대	31 (14.2)	55 (25.1)	41 (18.7)	43 (19.6)	36 (16.4)	13 (5.9)	219 (100.0)
50대	27 (14.5)	39 (21.0)	37 (19.9)	40 (21.5)	29 (15.6)	14 (7.5)	186 (100.0)
60대	17 (15.3)	23 (20.7)	25 (22.5)	17 (15.3)	20 (18.0)	9 (8.1)	111 (100.0)
70세 이상	7 (7.5)	9 (9.7)	21 (22.6)	24 (25.8)	19 (20.4)	13 (14.0)	93 (100.0)
계	164 (16.4)	206 (20.6)	216 (21.6)	189 (18.9)	159 (15.9)	65 (6.5)	999 (100.0)

*무응답 : 1(0.1%)

- 소득계층별 보육정책의 평가는 100만원 미만에서 우수하다는 응답이 45.5%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35.7%가 우수 쪽으로 평가하여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집단의 22.4%가 보육지원정책이 우수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소 미흡 20.9%, 다소 우수 17.9% 순임
- 200~300만원 집단에서는 23.9% 미흡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소 미흡 21.7%, 매우 미흡 19.6% 순으로 응답하였음.
-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응답이 2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수 18.5%, 매우 미흡 16.1%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6> 소득수준별 보육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100만원 미만	12 (9.0)	22 (16.4)	28 (20.9)	24 (17.9)	30 (22.4)	18 (13.4)	134 (100.0)
100~200만원미만	30 (18.0)	33 (19.8)	38 (22.8)	29 (17.4)	26 (15.6)	11 (6.6)	167 (100.0)
200~300만원미만	31 (14.8)	55 (26.3)	39 (18.7)	43 (20.6)	31 (14.8)	10 (4.8)	209 (100.0)
300~400만원미만	36 (19.6)	44 (23.9)	40 (21.7)	32 (17.4)	28 (15.2)	4 (2.2)	184 (100.0)
400~500만원미만	26 (21.3)	24 (19.7)	21 (17.2)	29 (23.8)	14 (11.5)	8 (6.6)	122 (100.0)
500만원 이상	27 (16.1)	25 (14.9)	46 (27.4)	31 (18.5)	26 (15.5)	13 (7.7)	168 (100.0)
계	162 (16.5)	203 (20.6)	212 (21.5)	188 (19.1)	155 (15.8)	64 (6.5)	984 (100.0)

*무응답 : 16(1.6%)

☐ 저소득층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8%가 동의하는 쪽으로 응답하였음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9.6%가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의함 30.3%, 동의하는 편임 18.1% 순으로 나타났음.

- 남성 응답자의 90.4%가 저소득층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응답하여, 여성 85.6%보다 높게 나타났음.
-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남성응답자중 46.4%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함 27.3%, 동의하는 편임 16.7%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응답분포는 동의함이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우 동의함 33.0%, 동의하는 편임 19.4% 순으로 나타남.

<표 3-17> 저소득층 지원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남	8 (1.6)	11 (2.2)	28 (5.7)	82 (16.7)	134 (27.3)	228 (46.4)	491 (100.0)
여	14 (2.8)	32 (6.3)	27 (5.3)	99 (19.4)	169 (33.2)	168 (33.0)	509 (100.0)
계	22 (2.2)	43 (4.3)	55 (5.5)	181 (18.1)	303 (30.3)	396 (39.6)	1000 (100.0)

- 연령에 따른 저소득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20대 집단에서 동의하는 쪽의 응답이 9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60대에서는 동의하는 쪽의 응답이 76.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20~40대에서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도 동의와 매우 동의함의 응답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8> 연령대별 저소득층 지원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20대	1 (0.6)	5 (2.8)	2 (1.1)	31 (17.6)	53 (30.1)	84 (47.7)	176 (100.0)
30대	3 (1.4)	3 (1.4)	16 (7.5)	34 (15.9)	57 (26.6)	101 (47.2)	214 (100.0)
40대	2 (0.9)	9 (4.1)	11 (5.0)	45 (20.5)	59 (26.8)	94 (42.7)	220 (100.0)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50대	6 (3.2)	11 (5.9)	14 (7.5)	31 (16.7)	57 (30.6)	67 (36.0)	186 (100.0)
60대	6 (5.4)	10 (9.0)	10 (9.0)	21 (18.9)	36 (32.4)	28 (25.2)	111 (100.0)
70세 이상	4 (4.3)	5 (5.4)	2 (2.2)	19 (20.4)	41 (44.1)	22 (23.7)	93 (100.0)
계	22 (2.2)	43 (4.3)	55 (5.5)	181 (18.1)	303 (30.3)	396 (39.6)	1000 (100.0)

- 저소득층 지원강화에 대한 소득집단별 응답분포는 400~500만원 미만 집단에서 동의하는 쪽의 의견이 91.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의 집단은 81.3%가 동의하는 쪽으로 응답하였음.
-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34.3%가 저소득층지원확대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함 33.6%, 동의하는 편임 13.4% 순으로 응답하였음.
- 400~500만원 미만 집단의 46.7%가 저소득층지원 확대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의함 30.3%, 동의하는 편임 21.3% 순으로 나타났음.

<표 3-19> 소득수준별 저소득층 지원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100만원 미만	8 (6.0)	8 (6.0)	9 (6.7)	18 (13.4)	45 (33.6)	46 (34.3)	134 (100.0)
100~200만원미만	4 (2.4)	5 (3.0)	10 (6.0)	21 (12.6)	54 (32.3)	73 (43.7)	167 (100.0)
200~300만원미만	2 (1.0)	9 (4.3)	5 (2.4)	43 (20.6)	60 (28.7)	90 (43.1)	209 (100.0)
300~400만원미만	1 (0.5)	11 (6.0)	14 (7.6)	41 (22.3)	48 (26.1)	69 (37.5)	184 (100.0)
400~500만원미만	0 (0.0)	5 (4.1)	5 (4.1)	18 (14.8)	37 (30.3)	57 (46.7)	122 (100.0)
500만원 이상	7 (4.1)	5 (3.0)	10 (5.9)	36 (21.3)	55 (32.5)	56 (33.1)	169 (100.0)
계	22 (2.2)	43 (4.4)	53 (5.4)	177 (18.0)	299 (30.4)	391 (39.7)	985 (100.0)

*무응답 : 15(1.5%)

□ 보건 및 의료 지원 강화

- 보건 및 의료서비스가 확충이 필요하지에 대해서는 89.2%가 동의하는 쪽으로 응답하였음.
- 전체적으로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의함 34.5%, 동의하는 편임 15.8% 순으로 나타났음.
- 남성응답자의 91%가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한 쪽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86.9%가 필요한 쪽으로 응답하였음.

<표 3-20>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남	11 (2.2)	8 (1.6)	22 (4.5)	73 (14.9)	170 (34.6)	207 (42.2)	491 (100.0)
여	7 (1.4)	25 (4.9)	35 (6.9)	85 (16.7)	175 (34.4)	182 (35.8)	509 (100.0)
계	18 (1.8)	33 (3.3)	57 (5.7)	158 (15.8)	345 (34.5)	389 (38.9)	1000 (100.0)

- 연령대별 응답분포는 30대에서 동의하는 쪽의 응답비율이 9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90.4%, 20대 89.8% 순으로 나타났음.
- 30대의 44.9%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 42.6%, 40대 41.8%로 젊은 연령대에서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3-21> 연령대별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20대	3 (1.7)	5 (2.8)	10 (5.7)	23 (13.1)	60 (34.1)	75 (42.6)	176 (100.0)
30대	4 (1.9)	1 (.5)	12 (5.6)	30 (14.0)	71 (33.2)	96 (44.9)	214 (100.0)
40대	2 (0.9)	7 (3.2)	12 (5.5)	33 (15.0)	74 (33.6)	92 (41.8)	220 (100.0)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50대	5 (2.7)	11 (5.9)	10 (5.4)	38 (20.4)	62 (33.3)	60 (32.3)	186 (100.0)
60대	2 (1.8)	6 (5.4)	7 (6.3)	19 (17.1)	43 (38.7)	34 (30.6)	111 (100.0)
70세 이상	2 (2.2)	3 (3.2)	6 (6.5)	15 (16.1)	35 (37.6)	32 (34.4)	93 (100.0)
계	18 (1.8)	33 (3.3)	57 (5.7)	158 (15.8)	345 (34.5)	389 (38.9)	1000 (100.0)

- 400~5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보건 및 의료서비스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95.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도 46.7%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쪽의 응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 5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매우 동의 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33.7%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3-22> 소득수준별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100만원 미만	4 (3.0)	4 (3.0)	10 (7.5)	17 (12.7)	47 (35.1)	52 (38.8)	134 (100.0)
100~200만원미만	3 (1.8)	4 (2.4)	9 (5.4)	24 (14.4)	59 (35.3)	68 (40.7)	167 (100.0)
200~300만원미만	2 (1.0)	11 (5.3)	6 (2.9)	33 (15.8)	69 (33.0)	88 (42.1)	209 (100.0)
300~400만원미만	5 (2.7)	4 (2.2)	13 (7.1)	37 (20.1)	62 (33.7)	63 (34.2)	184 (100.0)
400~500만원미만	1 (0.8)	3 (2.5)	2 (1.6)	20 (16.4)	39 (32.0)	57 (46.7)	122 (100.0)
500만원 이상	3 (1.8)	7 (4.1)	15 (8.9)	24 (14.2)	63 (37.3)	57 (33.7)	169 (100.0)
계	18 (1.8)	33 (3.4)	55 (5.6)	155 (15.7)	339 (34.4)	385 (39.1)	985 (100.0)

*무응답 : 15(1.5%)

□ 주거지원 강화

- 주거지원 강화에 대한 동의도는 88.6%로 나타나고 있음. 남성(88.5%)과 여성(88.6%)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3-23> 주거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남	10 (2.0)	19 (3.9)	27 (5.5)	68 (13.8)	164 (33.4)	203 (41.3)	491 (100.0)
여	8 (1.6)	19 (3.7)	31 (6.1)	101 (19.8)	177 (34.8)	173 (34.0)	509 (100.0)
계	18 (1.8)	38 (3.8)	58 (5.8)	169 (16.9)	341 (34.1)	376 (37.6)	1000 (100.0)

- 연령별로는 20대(95%)가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필요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나, 70세 이상에서는 정책 강화 필요도가 증가하고 있음.

<표 3-24> 연령대별 주거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20대	1 (0.6)	3 (1.7)	5 (2.8)	33 (18.8)	48 (27.3)	86 (48.9)	176 (100.0)
30대	2 (0.9)	5 (2.3)	9 (4.2)	34 (15.9)	67 (31.3)	97 (45.3)	214 (100.0)
40대	3 (1.4)	11 (5.0)	14 (6.4)	33 (15.0)	85 (38.6)	74 (33.6)	220 (100.0)
50대	6 (3.2)	5 (2.7)	16 (8.6)	35 (18.8)	62 (33.3)	62 (33.3)	186 (100.0)
60대	6 (5.4)	5 (4.5)	11 (9.9)	14 (12.6)	43 (38.7)	32 (28.8)	111 (100.0)
70세 이상	0 (0.0)	9 (9.7)	3 (3.2)	20 (21.5)	36 (38.7)	25 (26.9)	93 (100.0)
계	18 (1.8)	38 (3.8)	58 (5.8)	169 (16.9)	341 (34.1)	376 (37.6)	1000 (100.0)

- 소득계층별 분포는 100만원 ~200만원 가구(91%)와 400만원~500만원 가구(90.1%)의 주거지원 필요도가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1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 (88%)와 500만원 이상 고소득가구(86.4%)의 지원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차상위계층과 중산층의 경우 보다 높은 주거지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복지수혜가 많은 저소득층과 수혜 필요도가 낮은 고소득층의 지원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까닭인 것으로 사료됨.

<표 3-25> 소득수준별 주거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하지 않음	동의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100만원 미만	4 (3.0)	6 (4.5)	6 (4.5)	20 (14.9)	46 (34.3)	52 (38.8)	134 (100.0)
100~200만원미만	0 (0.0)	5 (3.0)	10 (6.0)	20 (12.0)	59 (35.3)	73 (43.7)	167 (100.0)
200~300만원미만	2 (1.0)	9 (4.3)	11 (5.3)	40 (19.1)	66 (31.6)	81 (38.8)	209 (100.0)
300~400만원미만	4 (2.2)	6 (3.3)	11 (6.0)	35 (19.0)	65 (35.3)	63 (34.2)	184 (100.0)
400~500만원미만	2 (1.6)	4 (3.3)	6 (4.9)	19 (15.6)	43 (35.2)	48 (39.3)	122 (100.0)
500만원 이상	5 (3.0)	5 (3.0)	13 (7.7)	30 (17.8)	59 (34.9)	57 (33.7)	169 (100.0)
계	17 (1.7)	35 (3.6)	57 (5.8)	164 (16.6)	338 (34.3)	374 (38.0)	985 (100.0)

*무응답 : 15(1.5%)

□ 자활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자활 및 일자리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도에는 94.4%가 동의하고 있음.
 - 매우 동의하는 의견도 49.1%로 필요성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
- 성별분포는 남성(94.1%)과 여성(94.7%)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표 3-26> 자활 및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하지 않음	동의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남	6 (1.2)	6 (1.2)	17 (3.5)	56 (11.4)	160 (32.6)	246 (50.1)	491 (100.0)
여	5 (1.0)	8 (1.6)	14 (2.8)	67 (13.2)	170 (33.4)	245 (48.1)	509 (100.0)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계	11 (1.1)	14 (1.4)	31 (3.1)	123 (12.3)	330 (33.0)	491 (49.1)	1000 (100.0)

○ 연령별로는 20대(97.7%), 30대 (96.3%)의 동의도가 70세 이상 (94.7%), 60대 (92.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상대적으로 50대(93%)와 40대(91.9%)의 동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2-27> 연령대별 자활 및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20대	1 (0.6)	2 (1.1)	1 (0.6)	15 (8.5)	50 (28.4)	107 (60.8)	176 (100.0)
30대	1 (.5)	1 (.5)	6 (2.8)	28 (13.1)	79 (36.9)	99 (46.3)	214 (100.0)
40대	3 (1.4)	3 (1.4)	12 (5.5)	23 (10.5)	73 (33.2)	106 (48.2)	220 (100.0)
50대	3 (1.6)	6 (3.2)	4 (2.2)	28 (15.1)	57 (30.6)	88 (47.3)	186 (100.0)
60대	1 (0.9)	1 (0.9)	6 (5.4)	19 (17.1)	37 (33.3)	47 (42.3)	111 (100.0)
70세 이상	2 (2.2)	1 (1.1)	2 (2.2)	10 (10.8)	34 (36.6)	44 (47.3)	93 (100.0)
계	11 (1.1)	14 (1.4)	31 (3.1)	123 (12.3)	330 (33.0)	491 (49.1)	1000 (100.0)

○ 소득계층별 분포는 특징적인 사항이 눈에 띄지는 않음. 다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가구의 동의도가 90.2%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 가구의 동의도가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500만원 이상 고소득집단의 동의도도 94.7%에 달하고 있음

<표 3-28> 소득수준별 자활 및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100만원 미만	3 (2.2)	1 (0.7)	6 (4.5)	10 (7.5)	48 (35.8)	66 (49.3)	134 (100.0)

	전혀 하지 않음	동의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100~200 만원미만	1 (0.6)	1 (.6)	1 (.6)	23 (13.8)	53 (31.7)	88 (52.7)	167 (100.0)
200~300 만원미만	4 (1.9)	2 (1.0)	7 (3.3)	26 (12.4)	68 (32.5)	102 (48.8)	209 (100.0)
300~400 만원미만	1 (.5)	6 (3.3)	11 (6.0)	26 (14.1)	68 (37.0)	72 (39.1)	184 (100.0)
400~500 만원미만	0 (.0)	3 (2.5)	0 (.0)	14 (11.5)	37 (30.3)	68 (55.7)	122 (100.0)
500만원 이상	2 (1.2)	1 (0.6)	6 (3.6)	21 (12.4)	53 (31.4)	86 (50.9)	169 (100.0)
계	11 (1.1)	14 (1.4)	31 (3.1)	120 (12.2)	327 (32.2)	482 (48.9)	985 (100.0)

*무응답 : 15(1.5%)

□ 보육지원 강화

- 보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도는 91.4%로 나타남.
 -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도 44.1%로 지배적임
- 남성(92.2%)이 여성(90.5%)보다 강화에 대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29> 보육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하지 않음	동의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남	7 (1.4)	13 (2.6)	18 (3.7)	68 (13.8)	164 (33.4)	221 (45.0)	491 (100.0)
여	6 (1.2)	18 (3.5)	24 (4.7)	80 (15.7)	161 (31.6)	220 (43.2)	509 (100.0)
계	13 (1.3)	31 (3.1)	42 (4.2)	148 (14.8)	325 (32.5)	441 (44.1)	1000 (100.0)

- 연령별로는 육아의 부담이 많이 있는 30대 (96.3%)와 20대 (95.5%)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으며, 60세 이상에서는 88%로 현저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낮게 나타남.

<표 3-30> 연령대별 보육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하지 않음	동의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20대	2 (1.1)	3 (1.7)	3 (1.7)	22 (12.5)	55 (31.3)	91 (51.7)	176 (100.0)
30대	0 (0.0)	2 (.9)	6 (2.8)	25 (11.7)	59 (27.6)	122 (57.0)	214 (100.0)
40대	3 (1.4)	9 (4.1)	7 (3.2)	29 (13.2)	78 (35.5)	94 (42.7)	220 (100.0)
50대	6 (3.2)	11 (5.9)	10 (5.4)	34 (18.3)	64 (34.4)	61 (32.8)	186 (100.0)
60대	2 (1.8)	3 (2.7)	8 (7.2)	22 (19.8)	34 (30.6)	42 (37.8)	111 (100.0)
70세 이상	0 (0.0)	3 (3.2)	8 (8.6)	16 (17.2)	35 (37.6)	31 (33.3)	93 (100.0)
계	13 (1.3)	31 (3.1)	42 (4.2)	148 (14.8)	325 (32.5)	441 (44.1)	1000 (100.0)

○ 소득계층별로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87.3%)와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88.8%)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도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낮은 현상을 보임. 이는 저소득계층은 대체로 보육료지원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고소득계층은 혜택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이유로 해석할 수 있음.

○ 보육지원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소득집단에서 93%대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의 소득집단에서도 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차상위계층 및 중산층이상의 보육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보임.

<표 3-31> 소득수준별 보육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하지 않음	동의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100만원 미만	3 (2.2)	3 (2.2)	11 (8.2)	20 (14.9)	52 (38.8)	45 (33.6)	134 (100.0)
100~200 만원미만	2 (1.2)	4 (2.4)	5 (3.0)	26 (15.6)	45 (26.9)	85 (50.9)	167 (100.0)
200~300 만원미만	3 (1.4)	6 (2.9)	4 (1.9)	30 (14.4)	72 (34.4)	94 (45.0)	209 (100.0)

	전혀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300~400 만원미만	3 (1.6)	8 (4.3)	5 (2.7)	31 (16.8)	63 (34.2)	74 (40.2)	184 (100.0)
400~500 만원미만	0 (0.0)	3 (2.5)	7 (5.7)	11 (9.0)	35 (28.7)	66 (54.1)	122 (100.0)
500만원 이상	2 (1.2)	7 (4.1)	10 (5.9)	28 (16.6)	49 (29.0)	73 (43.2)	169 (100.0)
계	13 (1.3)	31 (3.1)	42 (4.3)	146 (14.8)	316 (32.1)	437 (44.4)	985 (100.0)

*무응답 : 15(1.5%)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도는 약 91.9%로 나타났다.
-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44.1%, 동의한다는 의견이 33.1%, 동의하는 편인 의견이 14.7%로 나타남.
- 남성(91.5%)보다는 여성(92.3%)의 동의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32>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남	10 (2.0)	11 (2.2)	21 (4.3)	73 (14.9)	156 (31.8)	220 (44.8)	491 (100.0)
여	5 (1.0)	11 (2.2)	23 (4.5)	74 (14.5)	175 (34.4)	221 (43.4)	509 (100.0)
계	15 (1.5)	22 (2.2)	44 (4.4)	147 (14.7)	331 (33.1)	441 (44.1)	1000 (100.0)

- 연령별 분포는 역 U자 형태를 보이고 있음. 40대의 동의도가 93.7%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에서는 88.2%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이고 있음. 이는 노후소득보장의 혜택을 받는 연령계층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표 3-33> 연령대별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20대	2 (1.1)	5 (2.8)	6 (3.4)	20 (11.4)	60 (34.1)	83 (47.2)	176 (100.0)
30대	3 (1.4)	5 (2.3)	7 (3.3)	34 (15.9)	59 (27.6)	106 (49.5)	214 (100.0)
40대	2 (.9)	5 (2.3)	7 (3.2)	23 (10.5)	82 (37.3)	101 (45.9)	220 (100.0)
50대	4 (2.2)	4 (2.2)	9 (4.8)	36 (19.4)	63 (33.9)	70 (37.6)	186 (100.0)
60대	3 (2.7)	1 (.9)	7 (6.3)	21 (18.9)	36 (32.4)	43 (38.7)	111 (100.0)
70세 이상	1 (1.1)	2 (2.2)	8 (8.6)	13 (14.0)	31 (33.3)	38 (40.9)	93 (100.0)
계	15 (1.5)	22 (2.2)	44 (4.4)	147 (14.7)	331 (33.1)	441 (44.1)	1000 (100.0)

○ 소득계층별로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필요성에 대한 동의비율이 9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500만원 이상 고소득 집단 (89.3%)과 100만원 미만 저소득 집단 (88.8%)의 양극단의 소득집단에서의 동의도가 대체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저소득계층은 노후소득보장 혜택을 대체로 많이 수혜하고 있고, 고소득집단은 자구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34> 소득수준별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100만원 미만	3 (2.2)	2 (1.5)	10 (7.5)	15 (11.2)	43 (32.1)	61 (45.5)	134 (100.0)
100~200만원미만	3 (1.8)	2 (1.2)	9 (5.4)	29 (17.4)	47 (28.1)	77 (46.1)	167 (100.0)
200~300만원미만	2 (1.0)	6 (2.9)	6 (2.9)	33 (15.8)	70 (33.5)	92 (44.0)	209 (100.0)
300~400만원미만	2 (1.1)	5 (2.7)	8 (4.3)	27 (14.7)	67 (36.4)	75 (40.8)	184 (100.0)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400~500 만원미만	1 (0.8)	1 (0.8)	2 (1.6)	17 (13.9)	41 (33.6)	60 (49.2)	122 (100.0)
500만원 이상	4 (2.4)	5 (3.0)	9 (5.3)	23 (13.6)	58 (34.3)	70 (41.4)	169 (100.0)
계	15 (1.5)	21 (2.1)	44 (4.5)	144 (14.6)	326 (33.1)	435 (44.2)	985 (100.0)

*무응답 : 15(1.5%)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91.8%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41.7%, 동의한다는 의견은 34.8%, 동의하는 편이라는 의견은 15.3%로 나타났다.
- 성별 분포는 남성 (90.9%)이 여성(90.9%)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표 3-35>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남	8 (1.6)	9 (1.8)	19 (3.9)	68 (13.8)	164 (33.4)	223 (45.4)	491 (100.0)
여	7 (1.4)	14 (2.8)	25 (4.9)	85 (16.7)	184 (36.1)	194 (38.1)	509 (100.0)
계	15 (1.5)	23 (2.3)	44 (4.4)	153 (15.3)	348 (34.8)	417 (41.7)	1000 (100.0)

- 연령별로는 20대(93.7%)와 40대 (93.6%)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92.1%), 50대(91.4%), 60대(90%)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0세 이상에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6%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3-36> 연령대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20대	2 (1.1)	3 (1.7)	6 (3.4)	24 (13.6)	53 (30.1)	88 (50.0)	176 (100.0)
30대	2 (0.9)	5 (2.3)	10 (4.7)	36 (16.8)	68 (31.8)	93 (43.5)	214 (100.0)
40대	3 (1.4)	3 (1.4)	8 (3.6)	27 (12.3)	81 (36.8)	98 (44.5)	220 (100.0)
50대	5 (2.7)	5 (2.7)	6 (3.2)	32 (17.2)	71 (38.2)	67 (36.0)	186 (100.0)
60대	2 (1.8)	1 (.9)	8 (7.2)	19 (17.1)	41 (36.9)	40 (36.0)	111 (100.0)
70세 이상	1 (1.1)	6 (6.5)	6 (6.5)	15 (16.1)	34 (36.6)	31 (33.3)	93 (100.0)
계	15 (1.5)	23 (2.3)	44 (4.4)	153 (15.3)	348 (34.8)	417 (41.7)	1000 (100.0)

- 소득 집단별로는 200~300만원 미만 집단에서 동의하는 쪽의 의견이 9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400~500만원 미만이 95.1%로 나타남.
-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400~500만원 이상 집단의 과반수가 넘는 54.9%로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도 41.4%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표 3-37> 소득집단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
100만원 미만	3 (2.2)	3 (2.2)	13 (9.7)	16 (11.9)	50 (37.3)	49 (36.6)	134 (100.0)
100~200만원미만	2 (1.2)	7 (4.2)	6 (3.6)	28 (16.8)	55 (32.9)	69 (41.3)	167 (100.0)
200~300만원미만	0 (0.0)	4 (1.9)	3 (1.4)	31 (14.8)	77 (36.8)	94 (45.0)	209 (100.0)
300~400만원미만	5 (2.7)	4 (2.2)	9 (4.9)	34 (18.5)	69 (37.5)	63 (34.2)	184 (100.0)
400~500만원미만	0 (0.0)	2 (1.6)	4 (3.3)	13 (10.7)	36 (29.5)	67 (54.9)	122 (100.0)
500만원 이상	5 (3.0)	3 (1.8)	8 (4.7)	29 (17.2)	54 (32.0)	70 (41.4)	169 (100.0)
계	15 (1.5)	23 (2.3)	43 (4.4)	151 (15.3)	341 (34.6)	412 (41.8)	985 (100.0)

*무응답 : 15(1.5%)

□ 의료환경 전반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만족도

-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하여 각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접근성에 대한 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고(72.6%), 다음으로 의료의 질(61.4%), 보장성(57.9%) 순이었음
- 접근성
 - －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를 6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이 18.8%, 만족이 32.1%, 다소 만족이 21.7%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72.6%로 나타났음
 - －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거의 없었음 (남성의 만족 비율 72.1%, 여성의 만족 비율 73.1%)
 - － 연령구간별로 볼 때 70세 이상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만족 비율 80.6%), 그 다음으로 20대의 만족도가 높았음(만족 비율 77.9%).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연령구간은 40대였으나(만족 비율 69.5%) 다른 연령층과 큰 차이는 없었음
 -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만족 비율 76.9%). 반대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 집단에서 의료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만족 비율 68.7%)

<표 3-38> 보건의료 접근성에 대한 성별 만족도 분포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남	45 (9.2)	41 (8.4)	51 (10.4)	112 (22.8)	151 (30.8)	91 (18.5)	491 (100.0)
여	36 (7.1)	42 (8.3)	59 (11.6)	105 (20.6)	170 (33.4)	97 (19.1)	509 (100.0)
계	81 (8.1)	83 (8.3)	110 (11.0)	217 (21.7)	321 (32.1)	188 (18.8)	1000 (100.0)

<표 3-39> 보건의료 접근성에 대한 연령별 만족도 분포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20대	10 (5.7)	10 (5.7)	19 (10.8)	40 (22.7)	61 (34.7)	36 (20.5)	176 (100.0)
30대	15 (7.0)	21 (9.8)	26 (12.1)	51 (23.8)	66 (30.8)	35 (16.4)	214 (100.0)
40대	23 (10.5)	21 (9.5)	23 (10.5)	51 (23.2)	72 (32.7)	30 (13.6)	220 (100.0)
50대	14 (7.5)	17 (9.1)	25 (13.4)	39 (21.0)	51 (27.4)	40 (21.5)	186 (100.0)
60대	13 (11.7)	11 (9.9)	8 (7.2)	21 (18.9)	34 (30.6)	24 (21.6)	111 (100.0)
70세 이상	6 (6.5)	3 (3.2)	9 (9.7)	15 (16.1)	37 (39.8)	23 (24.7)	93 (100.0)
계	81 (8.1)	83 (8.3)	110 (11.0)	217 (21.7)	321 (32.1)	188 (18.8)	1000 (100.0)

<표 3-40> 보건의료 접근성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만족도 분포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100만원미만	18 (13.4)	13 (9.7)	11 (8.2)	23 (17.2)	40 (29.9)	29 (21.6)	134 (100.0)
100~200만원 미만	13 (7.8)	13 (7.8)	20 (12.0)	42 (25.1)	47 (28.1)	32 (19.2)	167 (100.0)
200~300만원 미만	11 (5.3)	20 (9.6)	25 (12.0)	46 (22.0)	80 (38.3)	27 (12.9)	209 (100.0)
300~400만원 미만	14 (7.6)	15 (8.2)	24 (13.0)	41 (22.3)	57 (31.0)	33 (17.9)	184 (100.0)
400~500만원 미만	11 (9.0)	8 (6.6)	14 (11.5)	24 (19.7)	46 (37.7)	19 (15.6)	122 (100.0)
500만원이상	12 (7.1)	13 (7.7)	14 (8.3)	36 (21.3)	48 (28.4)	46 (27.2)	169 (100.0)
계	79 (8.0)	82 (8.3)	108 (11.0)	212 (21.5)	318 (32.3)	186 (18.9)	985 (100.0)

*무응답 : 15(1.5%)

○ 보장성

-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보장성)’에 대한 만족도를 6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이 10.0%, 만

- 족이 25.5%, 다소 만족이 22.4%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57.9%로 나타났다
-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거의 없었음 (남성의 만족 비율 57.7%, 여성의 만족 비율 58.2%)
 - 연령구간별로 볼 때 6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만족 비율 67.5%), 그 다음으로 70대의 만족도가 높았음(만족 비율 65.5%).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연령구간은 40대와 30대였음(40대 만족 비율 52.7%, 30대 만족 비율 52.8%)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만족 비율 65.7%).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200~300만원 미만’으로 만족 비율이 54.1%였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 집단의 만족 비율은 58.3%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1> 보건의료 보장성에 대한 성별 만족도 분포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남	46 (9.4)	81 (16.5)	81 (16.5)	104 (21.2)	131 (26.7)	48 (9.8)	491 (100.0)
여	40 (7.9)	66 (13.0)	107 (21.0)	120 (23.6)	124 (24.4)	52 (10.2)	509 (100.0)
계	86 (8.6)	147 (14.7)	188 (18.8)	224 (22.4)	255 (25.5)	100 (10.0)	1000 (100.0)

<표 3-42> 보건의료 보장성에 대한 연령별 만족도 분포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20대	11 (6.3)	27 (15.3)	36 (20.5)	33 (18.8)	52 (29.5)	17 (9.7)	176 (100.0)
30대	22 (10.3)	43 (20.1)	36 (16.8)	57 (26.6)	46 (21.5)	10 (4.7)	214 (100.0)
40대	23 (10.5)	37 (16.8)	44 (20.0)	48 (21.8)	50 (22.7)	18 (8.2)	220 (100.0)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50대	15 (8.1)	21 (11.3)	38 (20.4)	40 (21.5)	50 (26.9)	22 (11.8)	186 (100.0)
60대	10 (9.0)	8 (7.2)	18 (16.2)	31 (27.9)	30 (27.0)	14 (12.6)	111 (100.0)
70세 이상	5 (5.4)	11 (11.8)	16 (17.2)	15 (16.1)	27 (29.0)	19 (20.4)	93 (100.0)
계	86 (8.6)	147 (14.7)	188 (18.8)	224 (22.4)	255 (25.5)	100 (10.0)	1000 (100.0)

<표 3-43> 보건의료 보장성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만족도 분포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100만원미만	13 (9.7)	16 (11.9)	27 (20.1)	25 (18.7)	36 (26.9)	17 (12.7)	134 (100.0)
100~200만원 미만	24 (14.4)	18 (10.8)	34 (20.4)	35 (21.0)	36 (21.6)	20 (12.0)	167 (100.0)
200~300만원 미만	19 (9.1)	34 (16.3)	43 (20.6)	43 (20.6)	54 (25.8)	16 (7.7)	209 (100.0)
300~400만원 미만	10 (5.4)	31 (16.8)	41 (22.3)	47 (25.5)	45 (24.5)	10 (5.4)	184 (100.0)
400~500만원 미만	7 (5.7)	23 (18.9)	17 (13.9)	32 (26.2)	31 (25.4)	12 (9.8)	122 (100.0)
500만원이상	12 (7.1)	22 (13.0)	24 (14.2)	38 (22.5)	49 (29.0)	24 (14.2)	169 (100.0)
계	85 (8.6)	144 (14.6)	186 (18.9)	220 (22.3)	251 (25.5)	99 (10.1)	985 (100.0)

*무응답 : 15(1.5%)

○ 의료의 질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6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이 10.9%, 만족이 27.9%, 다소 만족이 22.6%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1.4%로 나타났다
-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거의 없었음 (남성의 만족 비율 61.9%, 여성의 만족 비율 60.9%)
- 연령구간별로 볼 때 70세 이상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만족 비율 71.0%), 그 다음으로 20대의 만족도가 높았음(만족 비율 69.9%). 만족도

가 가장 낮은 연령구간은 40대였음(만족 비율 53.2%)

- －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만족 비율 69.3%).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100~200만원 미만’으로 만족 비율이 55.1%였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 집단의 만족 비율은 64.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표 3-44> 의료의 질에 대한 성별 만족도 분포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남	46 (9.4)	68 (13.8)	73 (14.9)	114 (23.2)	142 (28.9)	48 (9.8)	491 (100.0)
여	40 (7.9)	65 (12.8)	94 (18.5)	112 (22.0)	137 (26.9)	61 (12.0)	509 (100.0)
계	86 (8.6)	133 (13.3)	167 (16.7)	226 (22.6)	279 (27.9)	109 (10.9)	1000 (100.0)

<표 3-45> 의료의 질에 대한 연령별 만족도 분포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20대	10 (5.7)	20 (11.4)	23 (13.1)	39 (22.2)	65 (36.9)	19 (10.8)	176 (100.0)
30대	16 (7.5)	30 (14.0)	43 (20.1)	60 (28.0)	51 (23.8)	14 (6.5)	214 (100.0)
40대	25 (11.4)	37 (16.8)	41 (18.6)	51 (23.2)	47 (21.4)	19 (8.6)	220 (100.0)
50대	22 (11.8)	28 (15.1)	26 (14.0)	41 (22.0)	49 (26.3)	20 (10.8)	186 (100.0)
60대	8 (7.2)	12 (10.8)	18 (16.2)	21 (18.9)	34 (30.6)	18 (16.2)	111 (100.0)
70세 이상	5 (5.4)	6 (6.5)	16 (17.2)	14 (15.1)	33 (35.5)	19 (20.4)	93 (100.0)
계	86 (8.6)	133 (13.3)	167 (16.7)	226 (22.6)	279 (27.9)	109 (10.9)	1000 (100.0)

<표 3-46> 의료의 질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만족도 분포

단위: 명(%)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100만원미만	12 (9.0)	14 (10.4)	22 (16.4)	24 (17.9)	38 (28.4)	24 (17.9)	134 (100.0)
100~200만원 미만	21 (12.6)	22 (13.2)	32 (19.2)	27 (16.2)	48 (28.7)	17 (10.2)	167 (100.0)
200~300만원 미만	17 (8.1)	35 (16.7)	33 (15.8)	52 (24.9)	52 (24.9)	20 (9.6)	209 (100.0)
300~400만원 미만	12 (6.5)	24 (13.0)	38 (20.7)	51 (27.7)	49 (26.6)	10 (5.4)	184 (100.0)
400~500만원 미만	10 (8.2)	17 (13.9)	21 (17.2)	27 (22.1)	35 (28.7)	12 (9.8)	122 (100.0)
500만원이상	11 (6.5)	20 (11.8)	21 (12.4)	40 (23.7)	54 (32.0)	23 (13.6)	169 (100.0)
계	83 (8.4)	132 (13.4)	167 (17.0)	221 (22.4)	276 (28.0)	106 (10.8)	985 (100.0)

*무응답 : 15(1.5%)

□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관계에 대한 선호도

- 건강보험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는 사전적으로 지불하는 보험료와 의료 이용 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있음. 보험료가 높아지면 확보된 보험재정이 증가하여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보험료가 낮아지면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어, 두 재원이 서로 상충하는(trade-off) 역할을 함. 사전적 지불인 보험료와 사후적 지불인 본인부담의 관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음
- ‘현재보다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현재보다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 ‘현행 수준을 유지’의 세 가지 중에서 ‘현재보다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43.8%가 지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현재보다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은 38.1%가 지지하였고, ‘현행 수준을 유지’에 대해서는 18.1%가 지지함
- 성별 분석 결과, ‘현재보다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

에 대한 지지 비율은 남성과 여성에서 거의 동일하였음. 그러나 ‘현재보다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남성이 훨씬 높은 지지 비율(43.0%)을 보였고(여성 33.4%), ‘현행 수준을 유지’에 대해서는 여성이(21.8%) 남성(14.3%) 비해 훨씬 높은 지지 비율을 보임

- 연령별로 볼 때, 낮은 연령층은 ‘현재보다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높은 지지 비율을 나타냈음 (20대 48.3%, 30대 43.9%). 나머지 연령층은 ‘현재보다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건강보험료를 인하는 방안’을 가장 지지하였으며, 지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50대였음 (53.8%). 한편 ‘현행 수준을 유지’에 대해서는 높은 연령층이 비교적 높은 지지 비율을 보였음 (70세 이상 31.2%, 60대 28.8%)
- 소득수준별로 볼 때, 모든 집단에서 ‘현재보다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건강보험료를 인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음

<표 3-47>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관계에 대한 성별 선호도

단위: 명(%)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료를 인상	본인부담금을 높임 건강보험료를 인하	현행수준 유지	계
남	211 (43.0)	210 (42.8)	70 (14.3)	491 (100.0)
여	170 (33.4)	228 (44.8)	111 (21.8)	509 (100.0)
계	381 (38.1)	438 (43.8)	181 (18.1)	1000 (100.0)

<표 3-48>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관계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

단위: 명(%)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료를 인상	본인부담금을 높임 건강보험료를 인하	현행수준 유지	계
20대	85 (48.3)	67 (38.1)	24 (13.6)	176 (100.0)
30대	94 (43.9)	90 (42.1)	30 (14.0)	214 (100.0)
40대	91 (41.4)	95 (43.2)	34 (15.5)	220 (100.0)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료를 인상	본인부담금을 높임 건강보험료를 인하	현행수준 유지	계
50대	54 (29.0)	100 (53.8)	32 (17.2)	186 (100.0)
60대	31 (27.9)	48 (43.2)	32 (28.8)	111 (100.0)
70세 이상	26 (28.0)	38 (40.9)	29 (31.2)	93 (100.0)
계	381 (38.1)	438 (43.8)	181 (18.1)	1000 (100.0)

<표 3-49>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의 관계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선호도

단위: 명(%)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료를 인상	본인부담금을 높임 건강보험료를 인하	현행수준 유지	계
100만원미만	42 (31.3)	61 (45.5)	31 (23.1)	134 (100.0)
100~200만원 미만	61 (36.5)	71 (42.5)	35 (21.0)	167 (100.0)
200~300만원 미만	85 (40.7)	86 (41.1)	38 (18.2)	209 (100.0)
300~400만원 미만	72 (39.1)	85 (46.2)	27 (14.7)	184 (100.0)
400~500만원 미만	45 (36.9)	57 (46.7)	20 (16.4)	122 (100.0)
500만원이상	70 (41.4)	71 (42.0)	28 (16.6)	169 (100.0)
계	375 (38.1)	431 (43.8)	179 (18.2)	985 (100.0)

*무응답 : 15(1.5%)

○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에서의 부담 비율에 대한 선호

- 앞의 질문에서 ‘현재보다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한 381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 수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음.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총의료비의 64%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 비율이 얼마나 높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호도를 조사함
- ‘64~69% 이하’, ‘70~74% 이하’, ‘75~79% 이하’, ‘80~84% 이하’, ‘85%

이상'으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 '70~74% 이하'에 답자의 39.4%가 지지하여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64~69% 이하'가 24.7%의 지지 비율을 얻었음. 즉 전체 응답자의 64%가 건강보험에서의 부담 비율로 74% 이하를 지지하였음. 응답자의 2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의 부담 비율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고 답하였음

-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는 거의 없었음
- 연령별로 볼 때, 모든 연령구간에서 '70~74% 이하'를 가장 선호하였음.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에서는 건강보험에서의 높은 보장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높은 연령층에서는 낮은 보장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음. '75~79% 이하'에 대한 지지 비율이 20~40대에서는 19% 수준으로 다른 연령 구간(7% 수준)에 비해 높았고, '64~69% 이하'에 대한 지지 비율은 60세 이상에서 35% 수준으로 높았음
- 가구소득 수준별로 보았을 때, 모든 집단에서 '70~74% 이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음. '1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64~69% 이하'에 대해서도 '70~74% 이하'와 동일한 선호도를 보였음(35.7%)

<표 3-50>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부담비율에 대한 성별 선호도

단위: 명(%)

	64~69% 이하	70~74% 이하	75~79% 이하	80~84% 이하	85% 이상	계
남	56 (26.5)	81 (38.4)	32 (15.2)	27 (12.8)	15 (7.1)	211 (100.0)
여	38 (22.4)	69 (40.6)	27 (15.9)	24 (14.1)	12 (7.1)	170 (100.0)
계	94 (24.7)	150 (39.4)	59 (15.5)	51 (13.4)	27 (7.1)	381 (100.0)

*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보험료를 높이자고 한 응답자의 비율임,

** 비해당: 619(61.9%)

<표 3-51>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부담비율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

단위: 명(%)

	64~69% 이하	70~74% 이하	75~79% 이하	80~84% 이하	85% 이상	계
20대	15 (17.6)	40 (47.1)	16 (18.8)	10 (11.8)	4 (4.7)	85 (100.0)
30대	16 (17.0)	35 (37.2)	18 (19.1)	15 (16.0)	10 (10.6)	94 (100.0)
40대	25 (27.5)	32 (35.2)	18 (19.8)	8 (8.8)	8 (8.8)	91 (100.0)
50대	18 (33.3)	21 (38.9)	3 (5.6)	10 (18.5)	2 (3.7)	54 (100.0)
60대	11 (35.5)	12 (38.7)	2 (6.5)	5 (16.1)	1 (3.2)	31 (100.0)
70세 이상	9 (34.6)	10 (38.5)	2 (7.7)	3 (11.5)	2 (7.7)	26 (100.0)
계	94 (24.7)	150 (39.4)	59 (15.5)	51 (13.4)	27 (7.1)	381 (100.0)

*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보험료를 높이자고 응답자의 비율임,

** 비해당:619(61.9%)

<표 3-52>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부담비율에 대한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선호도

단위: 명(%)

	64~69% 이하	70~74% 이하	75~79% 이하	80~84% 이하	85% 이상	계
100만원미만	15 (35.7)	15 (35.7)	2 (4.8)	6 (14.3)	4 (9.5)	42 (100.0)
100~200만원 미만	19 (31.1)	20 (32.8)	11 (18.0)	8 (13.1)	3 (4.9)	61 (100.0)
200~300만원 미만	18 (21.2)	33 (38.8)	13 (15.3)	13 (15.3)	8 (9.4)	85 (100.0)
300~400만원 미만	15 (20.8)	37 (51.4)	13 (18.1)	6 (8.3)	1 (1.4)	72 (100.0)
400~500만원 미만	8 (17.8)	20 (44.4)	7 (15.6)	8 (17.8)	2 (4.4)	45 (100.0)
500만원이상	17 (24.3)	22 (31.4)	12 (17.1)	10 (14.3)	9 (12.9)	70 (100.0)
계	92 (24.5)	147 (39.2)	58 (15.5)	51 (13.6)	27 (7.2)	375 (100.0)

*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보험료를 높이자고 응답자의 비율임,

** 비해당:619(61.9%) 무응답 6(0.6%)

○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인상 범위

—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지지한 381명을 대

상으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현재에 비해 얼마나 더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였음

- 현재에 비해 보험료를 '10% 이하' 더 납부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는 '11~20% 이하'가 19.2%, '21~30% 이하'가 11.6%로 나타났음
- 여성에 비해 남성이 보험료의 인상 가능 범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층에서 '10% 이하'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20대는 상대적으로 보험료의 인상 가능 수준이 더 높았고, 70세 이상은 '현행 보험료 유지'를 선택한 비율이 38.5%로 매우 높았음
- 소득수준별로 볼 때 모든 소득구간에서 '10% 이하'를 가장 선호하였음. '1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현행 보험료 유지'를 선택한 비율이 33.3%로 특히 높았고, '500만원 이상'에서는 보험료 인상 가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3>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인상률 범위의 성별 분포

단위: 명(%)

	현행 보험료 유지	10% 이하	11~20% 이하	21~30% 이하	31~40% 이하	41~50% 이하	51% 이상	계
남	20 (9.5)	103 (48.8)	43 (20.4)	29 (13.7)	13 (6.2)	0 (0.0)	3 (1.4)	211 (100.0)
여	25 (14.8)	93 (55.0)	30 (17.8)	15 (8.9)	3 (1.8)	2 (1.2)	1 (0.6)	169 (100.0)
계	45 (11.8)	196 (51.6)	73 (19.2)	44 (11.6)	16 (4.2)	2 (.5)	4 (1.1)	380 (100.0)

*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보험료를 높이자고 응답자의 비율임,

** 비해당: 619(61.9%) 무응답 1(0.1%)

<표 3-54>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인상률 범위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현행 보험료 유지	10% 이하	11~20% 이하	21~30% 이하	31~40% 이하	41~50% 이하	51% 이상	계
20대	8 (9.4)	34 (40.0)	24 (28.2)	14 (16.5)	3 (3.5)	2 (2.4)	0 (0.0)	85 (100.0)
30대	5 (5.4)	51 (54.8)	19 (20.4)	12 (12.9)	4 (4.3)	0 (0.0)	2 (2.2)	93 (100.0)

	현행 보험료 유지	10% 이하	11~20% 이하	21~30 %이하	31~40 %이하	41~50% 이하	51% 이상	계
40대	9 (9.9)	55 (60.4)	14 (15.4)	8 (8.8)	3 (3.3)	0 (0.0)	2 (2.2)	91 (100.0)
50대	7 (13.0)	27 (50.0)	9 (16.7)	6 (11.1)	5 (9.3)	0 (0.0)	0 (0.0)	54 (100.0)
60대	6 (19.4)	19 (61.3)	5 (16.1)	1 (3.2)	0 (0.0)	0 (0.0)	0 (0.0)	31 (100.0)
70세 이상	10 (38.5)	10 (38.5)	2 (7.7)	3 (11.5)	1 (3.8)	0 (0.0)	0 (0.0)	26 (100.0)
계	45 (11.8)	196 (51.6)	73 (19.2)	44 (11.6)	16 (4.2)	2 (0.5)	4 (1.1)	380 (100.0)

*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보험료를 높이자고 응답자의 비율임,

** 비해당: 619(61.9%) 무응답 1(0.1%)

<표 3-55>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인상률 범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분포

단위: 명(%)

	현행 보험료 유지	10% 이하	11~20% 이하	21~30 %이하	31~40 %이하	41~50% 이하	51% 이상	계
100만원 미만	14 (33.3)	19 (45.2)	4 (9.5)	3 (7.1)	2 (4.8)	0 (0.0)	0 (0.0)	42 (100.0)
100~200 만원미만	7 (11.5)	35 (57.4)	12 (19.7)	6 (9.8)	1 (1.6)	0 (0.0)	0 (0.0)	61 (100.0)
200~300 만원미만	5 (5.9)	47 (55.3)	16 (18.8)	10 (11.8)	5 (5.9)	1 (1.2)	1 (1.2)	85 (100.0)
300~400 만원미만	8 (11.3)	43 (60.6)	11 (15.5)	8 (11.3)	1 (1.4)	0 (0.0)	0 (0.0)	71 (100.0)
400~500 만원미만	7 (15.6)	25 (55.6)	6 (13.3)	6 (13.3)	1 (2.2)	0 (0.0)	0 (0.0)	45 (100.0)
500만원 이상	4 (5.7)	25 (35.7)	22 (31.4)	10 (14.3)	6 (8.6)	0 (0.0)	3 (4.3)	70 (100.0)
계	45 (12.0)	194 (51.9)	71 (19.0)	43 (11.5)	16 (4.3)	1 (0.3)	4 (1.1)	374 (100.0)

*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보험료를 높이자고 응답자의 비율임,

** 비해당: 619(61.9%) 무응답 6(0.6%)

□ 저출산·고령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국민의 55.9%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33.6%는 약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함.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표 3-56> 저출산·고령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관심없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약간 영향을 미칠 것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계
남	5 (1.0)	54 (11.0)	159 (32.4)	273 (55.6)	491 (100.0)
여	8 (1.6)	38 (7.5)	177 (34.8)	286 (56.2)	509 (100.0)
계	13 (1.3)	92 (9.2)	336 (33.6)	559 (55.9)	1000 (100.0)

○ 연령별로는 대체로 30대와 40대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60대와 20대는 저출산·고령화가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연령별 차이에서 특히 30대와 40대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30대와 40대는 현재 노부모 세대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양육·교육하고 있는 중간 세대로서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가장 강하게 체감하고 있는 세대로 볼 수 있음.
- 둘째, 30대와 40대는 현재 경제활동의 최전성기에 있지만, 동시에 노년기를 현실로 닥칠 가까운 미래로 볼 가능성이 높은 세대임. 따라서 경제활동으로부터 벗어난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세대로 볼 수 있으며, 노후보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대임.
- 셋째, 30대와 40대는 소위 ‘386세대’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사회복지의 문제에 대해 다른 세대보다 관심이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반해, 20대에게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체감되지 않았거나 ‘남’의 문제로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50대와 60대에게 저출산·고령화는 미래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음.

<표 3-57> 연령대별 저출산·고령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관심없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약간 영향을 미칠 것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계
20대	3 (1.7)	14 (8.0)	67 (38.1)	92 (52.3)	176 (100.0)
30대	2 (.9)	15 (7.0)	62 (29.0)	135 (63.1)	214 (100.0)
40대	1 (.5)	11 (5.0)	72 (32.7)	136 (61.8)	220 (100.0)
50대	2 (1.1)	21 (11.3)	62 (33.3)	101 (54.3)	186 (100.0)
60대	2 (1.8)	20 (18.0)	44 (39.6)	45 (40.5)	111 (100.0)
70세 이상	3 (3.2)	11 (11.8)	29 (31.2)	50 (53.8)	93 (100.0)
계	13 (1.3)	92 (9.2)	336 (33.6)	559 (55.9)	1000 (100.0)

○ 소득집단별로 볼 때는 ‘역U’자 형을 나타냄. 즉, 상대적으로 월소득 200~400만원인 중산층의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저출산·고령화에 관심도는 중산층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이는 ‘사회복지’의 대상층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임.

- 즉, 저소득층인 경우, 자녀에 대한 공적 보육지원, 노인에 대한 기초보장 제도나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
- 고소득층인 경우, 자력에 의한 보육이나 부양의 가능한 집단으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의 혜택에 대한 수요가 낮은 집단일 수 있음.

— 이에 비해, 중산층은 자녀 보육이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공적 사회복지-예컨대, 보육지원이나 기초노령연금, 기초보장제도 등-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집단임.

- 실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대상의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주택을 보유하거나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중산층 가구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이러한 이유로 월소득 200~400만원이면서 대부분의 사회복지 급여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가구의 상대적 복지욕구와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3-58> 소득계층별 저출산·고령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관심없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약간 영향을 미칠 것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계
100만원미만	3 (2.2)	12 (9.0)	53 (39.6)	66 (49.3)	134 (100.0)
100~200만원 미만	3 (1.8)	23 (13.8)	47 (28.1)	94 (56.3)	167 (100.0)
200~300만원 미만	2 (1.0)	14 (6.7)	69 (33.0)	124 (59.3)	209 (100.0)
300~400만원 미만	1 (0.5)	12 (6.5)	59 (32.1)	112 (60.9)	184 (100.0)
400~500만원 미만	2 (1.6)	12 (9.8)	48 (39.3)	60 (49.2)	122 (100.0)
500만원이상	1 (0.6)	18 (10.7)	56 (33.1)	94 (55.6)	169 (100.0)
계	12 (1.2)	91 (9.2)	332 (33.7)	550 (55.8)	985 (100.0)

*무응답 : 15(1.5%)

□ 보육시설 확대

- 보육과 관련한 공적 개입의 방식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민간보육의 개선보다는 공보육의 확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전체 응답자 중 69.2%가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꼽았음.
 -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선호한 응답자는 17.1%, 보육료를 자율화시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응답자는 13.6%였음.
- 보육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남녀 간의 선호율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9> 보육시설 확대

단위: 명(%)

	민간보육시설 평가를 강화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제공	보육료를 자율화 시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
남	83 (17.0)	62 (12.7)	344 (70.3)	489 (100.0)
여	88 (17.3)	74 (14.5)	347 (68.2)	509 (100.0)
계	171 (17.1)	136 (13.6)	691 (69.2)	998 (100.0)

*무응답 : 2(0.2%)

- 연령별 선호의 차이를 살펴보면, 40대 이상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선호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고, 이에 비해 20대와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한 인센티브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음.
- 이러한 경향에 대한 판단은 다소 유보적이지만, 20-30대가 보육시설의 현재 실수요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현실적 접근, 즉 단기간 내의 보육 환경 개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비해, 40대 이상의 경우 좀 더 규범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선호 비율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를 의미할 뿐 전체적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쪽에 절대 다수의 선호를 보이고 있음.

<표 3-60> 연령대별 보육시설 확대

단위: 명(%)

	민간보육시설 평가를 강화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제공	보육료를 자율화 시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
20대	47 (26.7)	23 (13.1)	106 (60.2)	176 (100.0)
30대	51 (23.8)	21 (9.8)	142 (66.4)	214 (100.0)
40대	29 (13.2)	28 (12.7)	163 (74.1)	220 (100.0)
50대	26 (14.1)	28 (15.1)	131 (70.8)	185 (100.0)

	민간보육시설 평가를 강화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제공	보육료를 자율화 시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
60대	10 (9.0)	19 (17.1)	82 (73.9)	111 (100.0)
70세 이상	8 (8.7)	17 (18.5)	67 (72.8)	92 (100.0)
계	171 (17.1)	136 (13.6)	691 (69.2)	998 (100.0)

*무응답 : 2(0.2%)

○ 소득 수준별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로 나타남.

- 즉,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오히려 보육료 자율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비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추가적인 조사를 요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판단을 유보함.

<표 3-61> 소득계층별 보육시설 확대

단위: 명(%)

	민간보육시설 평가를 강화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제공	보육료를 자율화 시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
100만원미만	13 (9.8)	26 (19.5)	94 (70.7)	133 (100.0)
100~200만원 미만	30 (18.0)	24 (14.4)	113 (67.7)	167 (100.0)
200~300만원 미만	38 (18.2)	22 (10.5)	149 (71.3)	209 (100.0)
300~400만원 미만	28 (15.2)	27 (14.7)	129 (70.1)	184 (100.0)
400~500만원 미만	25 (20.5)	17 (13.9)	80 (65.6)	122 (100.0)
500만원이상	36 (21.4)	17 (10.1)	115 (68.5)	168 (100.0)
계	170 (17.3)	133 (13.5)	680 (69.2)	983 (100.0)

*무응답 : 7(0.7%)

□ 양육수당

-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에 대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47.2%)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47.6)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 남성이 여성보다 양육수당의 지원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약 10%p 정도 더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기를 원하며, 지원을 중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극소수임.

<표 3-62> 양육수당

단위: 명(%)

	지원 중지	지원 축소	현재 상태 유지	지원 확대	계
남	8 (1.6)	18 (3.7)	206 (42.0)	259 (52.7)	491 (100.0)
여	11 (2.2)	15 (2.9)	266 (52.3)	217 (42.6)	509 (100.0)
계	19 (1.9)	33 (3.3)	472 (47.2)	476 (47.6)	1000 (100.0)

- 연령대별로 볼 때, 20대와 30대의 경우 보육수당에 대한 지원 유지보다는 확대 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40대 이후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원 확대보다는 지원 유지 쪽을 다소 더 선호하고 있음.
 - 즉, 실수요 연령일수록 지원의 확대를 원하는 반면, 납세자이면서 비수요 연령대인 경우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것임을 알 수 있음.

<표 3-63> 연령대별 양육수당

단위: 명(%)

	지원 중지	지원 축소	현재 상태 유지	지원 확대	계
20대	0 (0.0)	1 (0.6)	69 (39.2)	106 (60.2)	176 (100.0)

	지원 중지	지원 축소	현재 상태 유지	지원 확대	계
30대	4 (1.9)	6 (2.8)	97 (45.3)	107 (50.0)	214 (100.0)
40대	8 (3.6)	7 (3.2)	110 (50.0)	95 (43.2)	220 (100.0)
50대	6 (3.2)	12 (6.5)	87 (46.8)	81 (43.5)	186 (100.0)
60대	1 (0.9)	4 (3.6)	57 (51.4)	49 (44.1)	111 (100.0)
70세 이상	0 (0.0)	3 (3.2)	52 (55.9)	38 (40.9)	93 (100.0)
계	19 (1.9)	33 (3.3)	472 (47.2)	476 (47.6)	1000 (100.0)

○ 소득계층별로는 100~300만원인 가구에서 지원 확대를 바라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 이에 비해, 100만원 미만 계층과 300만원 이상 계층에서는 미미하지만 지원 확대보다는 현재 상태 유지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서도 실수요자의 경우 지원 확대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로,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41만원, 4인 가구 173만원, 5인 가구 205만원, 6인 가구 237만원임.
 - 이러한 기준액으로 볼 때 최대 수혜계층은 소득 100~200만원 대 가구일 것으로 추정됨(1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단독가구나 아동이 없는 가구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

<표 3-64> 소득계층별 양육수당

단위: 명(%)

	지원 중지	지원 축소	현재 상태 유지	지원 확대	계
100만원미만	0 (0.0)	3 (2.2)	72 (53.7)	59 (44.0)	134 (100.0)
100~200만원 미만	2 (1.2)	4 (2.4)	76 (45.5)	85 (50.9)	167 (100.0)
200~300만원 미만	3 (1.4)	8 (3.8)	91 (43.5)	107 (51.2)	209 (100.0)

	지원 중지	지원 축소	현재 상태 유지	지원 확대	계
300~400만원	8	5	89	82	184
미만	(4.3)	(2.7)	(48.4)	(44.6)	(100.0)
400~500만원	3	6	57	56	122
미만	(2.5)	(4.9)	(46.7)	(45.9)	(100.0)
500만원이상	3	6	81	79	169
	(1.8)	(3.6)	(47.9)	(46.7)	(100.0)
계	19	32	466	468	985
	(1.9)	(3.2)	(47.3)	(47.5)	(100.0)

*무응답 : 15(1.5%)

□ 노후 대비 수단

- 다음으로 노후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본인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남성의 경우에는 개인연금 및 종신보험(48.5%), 공적연금(49.5%), 부동산 및 주택(33.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공적연금(53.8%), 개인연금 및 종신보험(51.7%), 예금 및 적금(30.1%) 순으로 나타남.
- 남녀 공히 자녀들로부터의 부양을 원하는 비율은 10% 내외로 가장 낮게 나타나, 가족 간 경제적 이전과 부양에 대한 의식은 매우 약화된 것으로 보임.

<표 3-65> 노후 대비 수단

	공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종신)보험	예금·적금	부동산 및 주택 (역모기지)	단위: 명(%)
남	243 (49.5)	114 (23.2)	238 (48.5)	164 (33.4)	166 (33.8)	57 (11.6)
여	274 (53.8)	130 (25.5)	263 (51.7)	153 (30.1)	152 (29.9)	43 (8.4)

다중 응답임. 집단에 대한 응답비율임.

- 가족 간 부양의식이 시간이 갈수록 약화된다는 것은 연령대별로도 확인 가능함.
- 70대 이상의 현 노인계층은 30% 정도가 자녀들로부터 부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대는 18%, 50대는 8.1%, 40대는 5%, 30대는 4.7%

만이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에 비해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미하지만 조금 더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와 60대는 공적연금을 노후 대비 수단으로 좀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 순위를 감안해야겠지만—본 조사에서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음—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 또한, 30대와 40대의 경우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부동산 및 주택(역모기지 포함)을 통한 노후 대비를 좀 더 선호하는 데 비해, 50대와 60대는 예금과 적금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즉, 젊은 세대는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안전 자산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비해,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경우 좀 더 안정적인 형태의 자산을 선호함.

<표 3-66> 연령대별 노후 대비 수단

단위: 명(%)

	공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종신)보험	예금·적금	부동산 및 주택 (역모기지)	자녀들의 부모부양
20대	62 (35.2)	67 (38.1)	80 (45.5)	65 (36.9)	62 (35.2)	16 (9.1)
30대	110 (51.4)	47 (22.0)	115 (53.7)	63 (29.4)	83 (38.8)	10 (4.7)
40대	113 (51.4)	59 (26.8)	124 (56.4)	65 (29.5)	68 (30.9)	11 (5.0)
50대	119 (64.0)	34 (18.3)	92 (49.5)	59 (31.7)	53 (28.5)	15 (8.1)
60대	61 (55.0)	24 (21.6)	49 (44.1)	37 (33.3)	30 (27.0)	20 (18.0)
70세 이상	52 (55.9)	13 (14.0)	41 (44.1)	28 (30.1)	22 (23.7)	28 (30.1)

다중 응답임. 집단에 대한 응답비율임.

- 소득계층별로 노후 대비 수단에서 일관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려움. 예컨대, 100만원 미만 저소득계층과 500만원 이상 고소득계층은 공적연금을 노후 대비 수단으로 좀 더 선호하는데 비해, 100~200만원 미만 계층은 개인연금을

좀 더 선호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선호도는 소득계층보다는 연령, 직업, 가족구성 등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
- 예컨대, 고소득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과 고소득 자영자 등 소득 파악을 꺼리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적연금보다 개인연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다른 한편, 공무원, 교수, 교사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보다 급여 수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공적연금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음.
- 저소득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있음.
- 주부를 포함한 비경활자 등 적용제외자 중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높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같이, 노후에 대비한 준비는 소득수준보다는 여타의 요인들에 의해 선호도를 달리할 수 있음.

<표 3-67> 소득계층별 노후 대비 수단

	공적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종신)보험	예금·적금	부동산 및 주택 (역모기지)	단위: 명(%) 자녀들의 부모부양
100만원미만	77 (57.5)	17 (12.7)	62 (46.3)	43 (32.1)	35 (26.1)	31 (23.1)
100~200만원 미만	80 (47.9)	44 (26.3)	73 (43.7)	56 (33.5)	47 (28.1)	34 (20.4)
200~300만원 미만	107 (51.2)	51 (24.4)	114 (54.5)	65 (31.1)	66 (31.6)	15 (7.2)
300~400만원 미만	100 (54.3)	42 (22.8)	94 (51.1)	60 (32.6)	63 (34.2)	9 (4.9)
400~500만원 미만	70 (57.4)	30 (24.6)	61 (50.0)	37 (30.3)	43 (35.2)	3 (2.5)
500만원이상	75 (44.4)	54 (32.0)	91 (53.8)	49 (29.0)	61 (36.1)	8 (4.7)

다중 응답임. 집단에 대한 응답비율임.

□ 노후 정책지원

- 본인의 노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남녀 공히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일순위로 꼽고 있음.
 - －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지원의 순임. 남녀 간 선호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 지원을 일순위로 꼽는 것은 소득지원과 달리 의료 지원은 노인이라는 인구학적 특징을 가진 집단의 공통적인 욕구이기 때문.
 - 즉, 소득지원이나 취업지원의 경우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집단의 욕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노화로 인한 건강의 쇠약은 노인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임.
 - 특히,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비지출의 18%,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총소비지출의 19%를 의료비로 지출할 만큼 의료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높음(여유진 외, 2011).

<표 3-68> 노후 정책지원

	은퇴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	자원봉사 등 여가지원	노인 주거 시설 확충	단위: 명(%)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
남	204 (41.5)	221 (45.0)	132 (26.9)	120 (24.4)	305 (62.1)
여	212 (41.7)	241 (47.3)	98 (19.3)	135 (26.5)	332 (65.2)

다중 응답임. 집단에 대한 응답비율임.

- 연령대별 정부의 노후보장에 대한 지원 욕구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냄.
 - － 젊은 세대일수록 은퇴 후 취업 및 창업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 많이 원하는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현 고령자세대인 70대 이상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지원과 함께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자원봉사 등 여가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낮음.

- 고령자의 경우 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세대이면서 신체적·심리적·정신적 노화를 겪고 있는 만큼 소득 단절과 건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비하면, 은퇴를 앞둔 세대인 5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원봉사 등 여가지원에 대한 욕구가 31.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
- 은퇴 후 소득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근로의 단절로 오는 소외감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 노후 생활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표 3-69> 연령대별 노후 정책지원

단위: 명(%)

	은퇴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	자원봉사 등 여가지원	노인 주거 시설 확충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
20대	86 (48.9)	84 (47.7)	39 (22.2)	47 (26.7)	96 (54.5)
30대	94 (43.9)	99 (46.3)	50 (23.4)	62 (29.0)	123 (57.5)
40대	107 (48.6)	87 (39.5)	51 (23.2)	62 (28.2)	133 (60.5)
50대	82 (44.1)	77 (41.4)	58 (31.2)	34 (18.3)	121 (65.1)
60대	35 (31.5)	53 (47.7)	17 (15.3)	28 (25.2)	89 (80.2)
70세 이상	12 (12.9)	62 (66.7)	15 (16.1)	22 (23.7)	75 (80.6)

다중 응답임. 집단에 대한 응답비율임.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소득계층일수록 은퇴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더 원하는 반면, 저소득계층일수록 소득지원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연령과는 상호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고소득층은 현재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층은 노동시장에 막 진입했거나 이미 탈퇴한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음—,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일자리를,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사회경제적 지

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원할 가능성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음.

- 또한, 예상할 수 있듯이 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등의 여가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70> 소득계층별 노후 정책지원

단위: 명(%)

	은퇴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	자원봉사 등 여가지원	노인 주거 시설 확충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
100만원미만	28 (20.9)	88 (65.7)	19 (14.2)	34 (25.4)	99 (73.9)
100~200만원 미만	66 (39.5)	79 (47.3)	39 (23.4)	44 (26.3)	106 (63.5)
200~300만원 미만	87 (41.6)	100 (47.8)	43 (20.6)	60 (28.7)	128 (61.2)
300~400만원 미만	85 (46.2)	74 (40.2)	42 (22.8)	47 (25.5)	120 (65.2)
400~500만원 미만	60 (49.2)	50 (41.0)	35 (28.7)	31 (25.4)	68 (55.7)
500만원이상	83 (49.1)	64 (37.9)	52 (30.8)	34 (20.1)	105 (62.1)

다중 응답임. 집단에 대한 응답비율임.

□ 기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고소득자, 고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30.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다음으로는 기부나 자원봉사에 대한 세제혜택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5.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모금기관의 투명성 강화 (17.5%), 나눔문화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의 확대 (1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1>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

단위: 명(%)

	사회적 대우 강화	나눔문화에 대한 교육, 캠페인 확대	세제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강화	모금기관의 투명성 강화	고소득자, 고위층의 술선수범	계
남	51 (10.4)	75 (15.3)	132 (26.9)	84 (17.1)	149 (30.3)	491 (100.0)
여	54 (10.6)	84 (16.5)	121 (23.8)	91 (17.9)	159 (31.2)	509 (100.0)
계	105 (10.5)	159 (15.9)	253 (25.3)	175 (17.5)	308 (30.8)	1000 (100.0)

-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성별 의견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 의견에서는 40대에서 고소득자나 고위층의 술선수범보다는 세제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음. 50대는 모금기관의 투명성강화보다 나눔문화에 대한 교육, 캠페인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표 3-72> 연령별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

단위: 명(%)

	사회적 대우 강화	나눔문화에 대한 교육, 캠페인확대	세제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강화	모금기관 의 투명성 강화	고소득자, 고위층의 술선수범	계
20대	27 (15.3)	25 (14.2)	44 (25.0)	30 (17.0)	50 (28.4)	176 (100.0)
30대	15 (7.0)	36 (16.8)	64 (29.9)	39 (18.2)	60 (28.0)	214 (100.0)
40대	30 (13.6)	34 (15.5)	59 (26.8)	42 (19.1)	55 (25.0)	220 (100.0)
50대	12 (6.5)	38 (20.4)	44 (23.7)	33 (17.7)	59 (31.7)	186 (100.0)
60대	10 (9.0)	16 (14.4)	17 (15.3)	19 (17.1)	49 (44.1)	111 (100.0)
70세 이상	11 (11.8)	10 (10.8)	25 (26.9)	12 (12.9)	35 (37.6)	93 (100.0)
계	105 (10.5)	159 (15.9)	253 (25.3)	175 (17.5)	308 (30.8)	1000 (100.0)

- 소득계층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고소득자, 고위층의 술선수범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 4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세제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났음.

<표 3-73> 소득계층별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

단위: 명(%)

	사회적 대우 강화	나눔문화에 대한 교육, 캠페인 확대	세제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강화	모금기관의 투명성 강화	고소득자, 고 위층의 술선수법	계
100만원미만	18 (13.4)	19 (14.2)	24 (17.9)	21 (15.7)	52 (38.8)	134 (100.0)
100~200만원 미만	19 (11.4)	23 (13.8)	38 (22.8)	27 (16.2)	60 (35.9)	167 (100.0)
200~300만원 미만	17 (8.1)	29 (13.9)	54 (25.8)	45 (21.5)	64 (30.6)	209 (100.0)
300~400만원 미만	19 (10.3)	36 (19.6)	43 (23.4)	27 (14.7)	59 (32.1)	184 (100.0)
400~500만원 미만	17 (13.9)	15 (12.3)	33 (27.0)	30 (24.6)	27 (22.1)	122 (100.0)
500만원이상	11 (6.5)	36 (21.3)	58 (34.3)	23 (13.6)	41 (24.3)	169 (100.0)
계	101 (10.3)	158 (16.0)	250 (25.4)	173 (17.6)	303 (30.8)	985 (100.0)

*무응답 : 15(1.5%)

□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에 관한 의견

-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은지,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이 증가하는 것이 좋은지 양자간의 선택을 해야 한다면, 세금이 증가하더라도 사회복지혜택이 증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63.6%를 차지하였음.
- 이에 대한 성별의견은 여성 (42.4%)이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남성 (30.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도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혜택이 증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7.6%로 반대의견보다는 높게 나타났음.
- 중산층까지로 복지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질문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2%로 찬성 48%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음.
- 여성 (54.2%)의 경우 남성 (49.7%)보다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음.
- 남성의 경우는 복지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이 50.3%로 반대의견 49.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음.
- 복지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74>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에 관한 의견

단위: 명(%)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			중상층까지 복지 대상 확대		
	세금 감소 사회복지 감소	세금 증가 사회복지 증가	계	반대	찬성	계
남	148 (30.2)	342 (69.8)	490 (100.0)	244 (49.7)	247 (50.3)	491 (100.0)
여	216 (42.4)	293 (57.6)	509 (100.0)	276 (54.2)	233 (45.8)	509 (100.0)
계	364 (36.4)	635 (63.6)	999 (100.0)	520 (52.0)	480 (48.0)	1000 (100.0)

- 전연령층에서 세금이 증가하더라도 사회복지혜택이 증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낮은 연령계층일수록 세금이 증가하더라도 사회복지혜택이 증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비율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대의 세금증가 복지증가 지지율은 69.3%이었으나 연령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율이 낮아져 70대 이상에서는 50.5%를 보임
- 젊은 계층이 복지에 관한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대상의 확대에 관한 의견은 50대, 20대, 70대, 40대 순으로 반대의향이 강하며, 30대와 60대에서는 복지대상을 중상층까지 확대하는 것에 찬성비율이 더 높았음.

<표 3-75> 연령별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에 관한 의견

단위: 명(%)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			중상층까지 복지 대상 확대		
	세금 감소 사회복지 감소	세금 증가 사회복지 증가	계	반대	찬성	계
20대	54 (30.7)	122 (69.3)	176 (100.0)	97 (55.1)	79 (44.9)	176 (100.0)
30대	71 (33.3)	142 (66.7)	213 (100.0)	102 (47.7)	112 (52.3)	214 (100.0)
40대	76 (34.5)	144 (65.5)	220 (100.0)	112 (50.9)	108 (49.1)	220 (100.0)
50대	69 (37.1)	117 (62.9)	186 (100.0)	105 (56.5)	81 (43.5)	186 (100.0)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			중상층까지 복지 대상 확대		
	세금 감소 사회복지 감소	세금 증가 사회복지 증가	계	반대	찬성	계
60대	48 (43.2)	63 (56.8)	111 (100.0)	54 (48.6)	57 (51.4)	111 (100.0)
70세 이상	46 (49.5)	47 (50.5)	93 (100.0)	50 (53.8)	43 (46.2)	93 (100.0)
계	364 (36.4)	635 (63.6)	999 (100.0)	520 (52.0)	480 (48.0)	1000 (100.0)

- 전소득계층에 걸쳐 세금이 증가하더라도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음. 특히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소득집단에서 세금증가에 대한 지지율이 74.6%로, 저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인상적임.
- 중상층까지의 복지대상 확대에 관해서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소득집단에서는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차상위계층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듯 보여짐.
 - －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집단에서는 중상층까지의 복지대상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이 55.2%로 찬성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표 3-76> 소득계층별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에 관한 의견

단위: 명(%)

	세금부담과 복지대상 확대			중상층까지 복지 대상 확대		
	세금 감소 사회복지 감소	세금 증가 사회복지 증가	계	반대	찬성	계
100만원미만	59 (44.0)	75 (56.0)	134 (100.0)	74 (55.2)	60 (44.8)	134 (100.0)
100~200만원미만	67 (40.1)	100 (59.9)	167 (100.0)	83 (49.7)	84 (50.3)	167 (100.0)
200~300만원미만	74 (35.4)	135 (64.6)	209 (100.0)	92 (44.0)	117 (56.0)	209 (100.0)
300~400만원미만	67 (36.6)	116 (63.4)	183 (100.0)	104 (56.5)	80 (43.5)	184 (100.0)
400~500만원미만	31 (25.4)	91 (74.6)	122 (100.0)	64 (52.5)	58 (47.5)	122 (100.0)
500만원이상	62 (36.7)	107 (63.3)	169 (100.0)	97 (57.4)	72 (42.6)	169 (100.0)
계	360 (36.6)	624 (63.4)	984 (100.0)	514 (52.2)	471 (47.8)	985 (100.0)

*무응답 : 15(1.5%)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전문가 일반적 특성

- 본 조사에 참여서 전문가는 총 105명으로 이중에 73.3%가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6.7% 임.
- 40대가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50대 28.6%, 20~30대 16.2% 순으로 나타났음.
- 전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학이 3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학 21.9%, 경제학 14.3% 순임
- 기관 분포는 학교가 5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소 33.3% 이었고, 정부기관은 9.5%임

<표 3-77> 전문가 일반적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	77	73.3
	여	28	26.7
	계	105	100.0
연령	20~30대	17	16.2
	40대	50	47.6
	50대	30	28.6
	60대 이상	8	7.6
	계	105	100.0
전공	경제학	15	14.3
	사회복지학	34	32.4
	보건학	23	21.9
	행정학	7	5.7
	기타	26	30.7
	계	105	100

		빈도(명)	비율(%)
기관	연구소	35	33.3
	정부기관	10	9.5
	학교	54	51.4
	기타	6	5.7
	계	105	100.0

□ 전반적인 복지수준

-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72.4%로 지배적이었음. 이는 일반인의 복지수준이 낮다는 의견 61.3%에 비해 높아서, 전문가들이 보는 복지수준이 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3-78> 전반적인 복지수준 인식

단위: 명(%)

	매우 낮음	낮음	다소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계
복지수준	5 (4.8)	34 (32.4)	37 (35.2)	26 (24.8)	2 (1.9)	1 (1.0)	105 (100.0)

□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

- 소득분배정도에 대한 전문가의견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수준이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83.7%로 나타났다. 복지수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소득분배수준이 불평등하다는 의견 77.7%보다 전문가가 보는 불평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매우 불평등하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인이 24.5%로 전문가의 11.4% 보다 높음.

<표 3-79> 소득 및 재산 분배 정도 인식

단위: 명(%)

	매우 불평등	불평등	다소 불평등	다소 평등	평등	매우 평등	계
복지수준	12 (11.4)	48 (45.7)	28 (26.7)	13 (12.4)	4 (3.8)	0 (0.0)	105 (100.0)

□ 보건복지 분야 성과

- 사회정책의 영역별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1순위에서 국민의 건강보장 (43.8%),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28.6%), 보육 지원 (18.1%) 순으로 성과가 크다는 의견이었음. 기타 성과가 낮은 부분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이 각각 3.8%로 나타났고, 노후소득보장이 가장 낮은 1.9%라는 의견이었음.
- 1,2순위를 합산하여보아도 국민의 건강보장이 66.7%,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59.1%, 보육지원이 40%순으로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0> 보건복지 분야 성과 순위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30	28.6	32	30.5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4	3.8	6	5.7
국민의 건강 보장	46	43.8	24	22.9
보육 지원	19	18.1	23	21.9
노후 소득 보장	2	1.9	11	10.5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4	3.8	9	8.6
계	105	100.0	105	100.0

□ 사회정책 관련 미흡 분야

- 반면 사회정책관련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의견의 1순위는 일자리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42.9%), 노후소득보장 (18.1%),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제고 (16.2%)순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13.3%로 나타났다.
- 1,2순위를 합산하여 보아도 일자리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68.6%), 노후소득보장 (45.7%),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제고 (34.3%)순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었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24.7%였음.

<표 3-81> 사회정책 관련 미흡 분야 순위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14	13.3	12	11.4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45	42.9	27	25.7
국민의 건강 보장	3	2.9	7	6.7
보육 지원	7	6.7	11	10.5
노후 소득 보장	19	18.1	29	27.6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17	16.2	19	18.1
계	105	100.0	105	100.0

□ 듣고 싶은 뉴스

- 신년에 가장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로는 전문가의 27.6%가 적극적 탈빈곤 지원으로 빈곤을 감소를 1순위로 꼽았음. 그 외에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19%),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로 출산율 상승 (18.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부담완화 (16.2%), 노후소득보장확대 (15.2%) 순이었음. 나눔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는 가장 낮은 3.8%에 그치고 있음.

- 1,2순위를 합산하면, 적극적 탈빈곤 지원으로 빈곤율 감소 (53.3%),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41.9%),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
로 출산율 상승 (37.1%), 노후소득보장확대 (27.6%), 건강보험 보장성 확
대로 의료비 부담완화 (23.8%), 순으로 1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함.

<표 3-82> 듣고 싶은 뉴스 선호 순위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로 출산율 상승	19	18.1	20	19.0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20	19.0	24	22.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17	16.2	8	7.6
노후 소득보장 확대	16	15.2	13	12.4
적극적 탈빈곤 지원으로 빈곤율 감소	29	27.6	27	25.7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4	3.8	13	12.4
계	105	100.0	105	100.0

□ 중점 복지분야 정책

- 향후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각각 38.1%와 29.5%)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각각 25.7%와 21.9%),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각각 20%와 21.9%) 순으로 나타남.
 -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2순위로 꼽은 전문가의 비율이 18.1%였으며, 국민의 건강 보장은 1순위와 2순위 모두 최하위를 기록함.
- ‘일을 통한 복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세계적으로 복지 지향-

welfare to work, activation policy)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OECD에서 최하위이면서, 고령화 속도는 최상위에 속하여 향후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지난 10여년간 사회복지 영역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 영역이고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함으로써 3번째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임.
-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9.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아직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해 있고⁵⁾, 공적 사회지출은 최하위권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향후 중점 부문의 2순위로 둔 전문가의 비율이 18.1%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복지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를 낮게 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나라로서, 비록 자부담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 부문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전문가와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첫 번째와 연결된 것으로서 제한된 자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시급성, 필요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건강 보장은 다른 사회복지정책보다는 후순위라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음.

5)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1.0%이고, 국민부담률은 26.5%로, OECD 30개 회원국 중 각각 25위와 28위임.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6.7%, 국민부담률은 35.8%임(OECD Revenue Statistics, 2009)

<표 3-83> 중점 복지분야 정책 선호 순위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21	20.0	23	21.9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40	38.1	31	29.5
국민의 건강 보장	7	6.7	9	8.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27	25.7	23	21.9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10	9.5	19	18.1
계	105	100.0	105	100.0

□ 근로능력 저소득층 자립

-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38.1%)를 꼽았으며, 일을 하는 ‘경우 정부 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25.7%), ‘직업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25.7%)가 그 뒤를 이었음.
-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일을 통한 복지’에 대한 전문가의 선호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가 대체효과(다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표 3-84> 근로능력 저소득층 자립방안

단위: 명(%)

	빈도	비율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10	9.5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27	25.7

	빈도	비율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40	38.1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1	1.0
직업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27	25.7
계	105	100.0

□ 장애인 지원 정책

- 향후 장애인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인 51.4%가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을 1순위로 꼽았음. 나머지 중 23.8%는 2순위로 자립지원을 꼽음.
 - － 1순위에서 일자리 지원 다음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16.2%), 의료 및 재활 지원 강화(13.3%),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인프라 확대(9.5%),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9.5%)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빈곤율이 일반인의 2배~3배라는 사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임. 한국복지패널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빈곤율은 2008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3.8%이며, 중위소득 50% 기준으로는 33.1%로, 일반인(각각 6.0%와 13.6%)의 2.3배와 2.4배에 이른다(김태완, 2010).
 - － 또한, 장애인의 고용률은 2005년 기준으로 34.1%로 국민 전체의 고용률 60.6%의 약 절반 밖에 되지 않음. 또한, 실업률은 8.7%로 전체 실업률 3.4%의 2.6배에 이르고, 실망실업률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이금진, 2006).
 - － 즉,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소득이 낮으며, 그 주요 원인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적 소득보장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인식임.
 - 다만, 장애인의 중증도와 유형에 따라 근로 능력 정도와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할 때 일자리 지원과 소득보장 강화의 상대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음.

<표 3-85> 장애인 지원 정책 요구 순위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17	16.2	21	20.0
의료 및 재활 지원 강화	14	13.3	20	19.0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10	9.5	18	17.1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일자리 확대 포함)	54	51.4	25	23.8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10	9.5	21	20.0
계	105	100.0	105	100.0

□ 양육수당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와 유사하게 전문가에게 양육수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문항의 구성을 약간 달리 하였기 때문에 일반인 조사 결과와 절대적 비교는 어려움).
- 분석 결과,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지원하되 지원 금액을 지금보다 인상하는 안에 대한 찬성도가 29.5%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8%로 그 뒤를 이었음.
 - － 양육수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1%로 일반인의 1.9%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남. 이는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도 공보육시설 확대와 양육수당 지원 간의 논쟁이 활발히 있었음을 감안할 때-공보육의 확대와 양육수당 지원을 병행하는 것보다는 공보육 확대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음.
 - －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양육수당을 금액면에서나 대상 범위 측면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표 3-86>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빈도	비율
양육수당제도 폐지	10	9.5
현 수준 유지	19	18.1
지원 대상을 전체아동으로 확대	19	18.1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지원하되 지원 금액을 인상	31	29.5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	26	24.8
계	105	100.0

□ 노인복지 정책

○ 노후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에서도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이 1순위의 61.9%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이 26.7%를 차지하여,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소득 지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 이에 비해, 2순위에서는 39.0%가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꼽고 있음.

○ 이는 일반인에 대한 조사 결과와 유사하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임. 즉, 일반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소득지원, 일자리 지원의 순이었음(물론 일반인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음).

－ 전문가들은 노후 보장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소득 확보에 좀 더 초점을 두는 반면, 일반인의 경우 건강과 소득을 거의 동등하게 보거나 오히려 건강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일자리 지원보다는 직접적 소득지원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들이 일자리 지원에 너무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게 함.

－ 또한,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은 여가활동 지원, 주거시설 확충 등에도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7> 노인복지 정책지원 요구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65	61.9	0	0.0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	28	26.7	18	17.1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5	4.8	11	10.5
노인 주거 시설 확충	6	5.7	3	2.9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	1	1.0	41	39.0
계	105	100.0	73	69.5

□ 세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지원(혹은 창출)을 통한 복지’에 가장 큰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을 통한 복지’가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경향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일을 통한 복지’는 공급 측면에서 장애의 중증도, 연령의 고령도, 케어 해야 할 아동의 유무 등 인구학적 특성과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의 과밀도와 대체 효과 등 노동시장의 역학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친 ‘근로 중심’적 사고가 자칫 ‘복지’를 ‘복지병’과 등치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실제 일반인의 욕구와 요구와의 괴리를 가져올 수 있음.

□ 복지정책 발전

○ 우리나라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향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

문에 대해서,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21.0%) 다음 순으로 꼽았음.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16.2%),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16.2%), 그리고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13.3%)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단기 내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기존의 제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집중과 누락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선진국에 존재하고 있는 복지 제도들이 대부분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 제도들이 비체계적이고 나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이와 무관치 않음. 부처 내·부처 간 복지 지원의 난립과 비조정의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표 3-88> 복지정책 발전 방향

단위: 명(%)

	빈도	비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17	16.2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	22	21.0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14	13.3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	17	16.2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35	33.3
계	105	100.0

□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기부, 자원봉사 등에 대해 세제 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46.7%). 다음으로 고소득자, 고위층의 솔선수범(19.0%), 나눔 문화에 대한 교육, 캠페인 확대(15.2%)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기부와 자원봉사의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 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볼 수 있음.

<표 3-89>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단위: 명(%)

	빈도	비율
기부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10	9.5
나눔 문화에 대한 교육, 캠페인 확대	16	15.2
기부, 자원봉사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49	46.7
모금기관의 투명성 강화	10	9.5
고소득자, 고위층의 솔선수범	20	19.0
계	105	100.0

□ 보건의료부문 평가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하여 접근성, 보장성, 서비스의 질 등 세가지 측면을 평가하도록 질문한 결과,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다음으로 ‘의료의 질’, ‘보장성’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일반인들이 평가한 결과와 동일함.
- ‘접근성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우수하다는 의견이 84.8%이었음. 특히 ‘매우 우수’하다는 의견이 21.0%로 높게 나타났음.
- ‘의료의 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우수하다는 의

전은 73.3%이었음.

- ‘보장성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우수하다는 의견은 66.7%로 나타났다.

<표 3-90> 보건의료부문 평가

단위: 명(%)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계
접근성	1 (1.0)	9 (8.6)	6 (5.7)	23 (21.9)	44 (41.9)	22 (21.0)	105 (100.0)
보장성	2 (1.9)	12 (11.4)	21 (20.0)	30 (28.6)	32 (30.5)	8 (7.6)	105 (100.0)
의료의 질	2 (1.9)	8 (7.6)	18 (17.1)	33 (31.4)	34 (32.4)	10 (9.5)	105 (100.0)

□ 보건의료 분야 중점 정책

- 2012년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를 질문하였음.
- 1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로 전체 응답의 21.0%를 차지하였음.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19.0%)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19.0%)로 나타났다.
- 2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공공의료체계 확충’(20.0%)이었고,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18.1%)과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확대’(18.1%)였음.

<표 3-91> 보건의료 분야 중점 정책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20	19.0	19	18.1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20	19.0	15	14.3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22	21.0	15	14.3
공공의료체계 확충	19	18.1	21	20.0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2	11.4	16	15.2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확대	12	11.4	19	18.1
계	105	100.0	105	100.0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장 요구되는 정책에 대해 중증질환,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저소득층, 신기술 및 고가치료제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 1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중증질환 (암환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하였음.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서 전체 응답의 19.0%를 차지하였음.
- 2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으로 전체 응답의 28.6%를 차지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중증질환 (암환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과 ‘저소득층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으로서 각각 22.9%를 차지함.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해 볼 때, 중증질환, 저소득층,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9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암 환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54	51.4	24	22.9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14	13.3	30	28.6
-노인틀니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6	5.7	13	12.4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보장 확대	20	19.0	24	22.9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11	10.5	14	13.3
계	105	100.0	105	100.0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정책에 대해 ‘국고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인상’, ‘새로운 재원 마련’ 등 재원확보 방안과 ‘의료 공급 체계의 효율화’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 의료공급 분야의 정책,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환자의 비용의식 제고’와 같은 환자 측면의 정책으로 나누어 질문하였음
- 1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로 전체 응답자의 42.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으로 18.1%를 차지하였음.
- 2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24.8%) 이었고 다음으로는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20.0%)였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원확보, 의료공급 분야 정책 개선, 환자 측면 정책 개선 중에서 의료공급 분야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93>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고 지원 확대	13	12.4	20	19.0
건강보험료 인상	10	9.5	10	9.5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45	42.9	21	20.0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19	18.1	26	24.8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환자의 비용의식 제고	7	6.7	12	11.4
새로운 재원 마련 (의료보장세, 건강증진부담금 신설 등)	11	10.5	16	15.2
계	105	100.0	105	100.0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공공의료체계 확충’이 39.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21.9%)로 나타났음.
- 2순위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와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로 각각 33.3%를 차지하였음.
-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1순위와 2순위에서 모두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었음.

<표 3-94>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의료 인력 공급 확충	13	12.4	16	15.2
건강보험 수가 인상	9	8.6	6	5.7
공공의료체계 확충	41	39.0	13	12.4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23	21.9	35	33.3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19	18.1	35	33.3
계	105	100.0	105	100.0

□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정책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47.6%)였음. 다음으로는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30.5%)였음.
-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체계의 확충과 관련하여 인력 등 자원 확충이나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보다는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어, 공공의료의 취약층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95>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정책

단위: 명(%)

	빈도	비율
-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32	30.5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	50	47.6
- 지방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의 서비스 수준 개선	0	0.0
- 농어촌 등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	15	14.3
- 국·공립대학병원의 연구기능강화,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8	7.6
계	105	100.0

□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각각 44.8%, 31.4%) 차지하였음. 다음으로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의료기관의 연구기능 강화’로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각각 39.0%, 24.8%) 보였음.
- 전문가들은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제품의 해외진출, 수출 지원과 같은 정책에 비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음.

<표 3-96>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5	4.8	9	8.6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10	9.5	14	13.3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의료기관의 연구기능 강화	41	39.0	26	24.8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47	44.8	33	31.4
-의약품, 의료기기의 제품 및 기술 수출 지원 확대	2	1.9	23	21.9
계	105	100.0	105	100.0

□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

- 영역별로 가장 확대되어야 할 1순위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자리창출 (39%), 아동 (20%), 노인(16.2%)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하 소수의견으로서는 근로무능력자 (7.6%), 보건(5.7%), 주거(5.7%), 가족(2.9%), 근로자능력개발 (2.9%)순임.
- 3순위까지 모두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이 72.3%로 가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부문 지출이 54.3%, 아동관련 지출이 49.5%, 근로자능력개발이 30.5%, 보건의 30.4%, 주거 25.7%, 가족 15.3%순으로 나타났음.

<표 3-97>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 정책

단위: 명(%)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노인	17	16.2	19	18.1	21	20.0
아동	21	20.0	20	19.0	11	10.5
근로 무능력자	8	7.6	7	6.7	8	7.6
보건	6	5.7	10	9.5	16	15.2
가족	3	2.9	7	6.7	6	5.7
일자리 창출	41	39.0	17	16.2	18	17.1
근로자 능력개발	3	2.9	15	14.3	14	13.3
주거	6	5.7	10	9.5	11	10.5
계	105	100.0	105	100.0	105	100.0

□ 세금과 사회복지

- 세금과 사회복지지출을 모두 낮추는 것과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이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88.6%로 지배적이었음. 이는 일반인 63.6%보다 높은 것으로,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문가의 찬성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8> 세금과 사회복지 정책

단위: 명(%)

	빈도	비율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	12	11.4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	93	88.6
계	105	100.0

□ 재원마련

-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1순위 방안으로서 전문가들은 자본소득세의 인상 (37.1%), 담배 주류 및 사행성산업에 대한 세금인상 (35.2%), 사회보장세등 목적세 신설 (19%), 근로소득세 인상 (5.7%), 부가가치세 인상 (2.9%)순으로 답하고 있음.
- 2순위까지를 합하여 보면, 담배주류등 사행산업에 대한 세금인상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자본소득세 인상 (62.8%), 사회보장세등 목적세 신설 (46.6%), 근로소득세 인상 (12.4%), 부가가치세 인상 (8.6%)순으로 나타났음.
- 이로 미루어보면, 복지재원을 위한 세금인상은 담배, 주류, 사행성 산업에 대한 세금인상과 자본소득이 합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목적세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남.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간의 비교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합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간접세보다는 직접세가 세원으로서 보다 합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표 3-99> 재원마련 방안

단위: 명(%)

	1순위		2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로 소득세 인상	6	5.7	7	6.7
자본 소득세 인상	39	37.1	27	25.7
부가가치세 인상	3	2.9	6	5.7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20	19.0	29	27.6
담배, 주류, 사행성 산업(경마 등)에 대한 세금 인상	37	35.2	36	34.3
계	105	100.0	105	100.0

복지인식 및 정책수요조사 추진체계 구축

제 4장 복지인식 및 정책수요조사 추진체계 구축

제1 절 기존 복지인식조사 사례 검토

□ 김영모(1980), 한국인의 복지인식

- 1979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의식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음.
- 이 조사는 전국의 대도시를 학력과 직업을 층화시키고, 지역을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한 결과 총 2000명 가운데, 서울시가 40.8%, 도시가 43.1%, 읍이 10.1%, 면이 8.8%, 농촌이 6.1%이고,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이 23.5%, 관리사무직이 21.7%, 부녀자가 17.8%, 농민이 13.9%, 근로자가 10.1%, 그 외 소수 고용주 4.4%, 전문기술자 1.7%, 무직이 6.5%임.
- 복지인식과 관련된 설문문항은 복지권, 빈곤, 실업, 질병, 교육, 주택, 노인의 7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치료는 주로 누가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은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이 가정형평상 공부를 중단하거나 제대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경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개인’, ‘가족’, ‘친척’, ‘개인+정부’, ‘직장’, ‘지역사회’, ‘정부’의 7개 부문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음.
- 복지재원마련과 관련된 설문문항으로는 ‘우리나라를 복지사회로 만드는데 필요

한 돈(재원)은 주로 어디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개인, 가족, 친척, 개인+정부, 직장, 지역사회, 정부의 7개 부문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음.

- 국가개입정도에 관련된 설문문항으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복지는 가족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하여 저절로 해결된다고 보는 학자가 있고 반면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음.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아서 어떠한 입장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자유방입’, ‘중간형태’, ‘국가개입’의 3개중 선택하도록 구성하였음.

□ 김영란(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 고려대학교 사회조사연구실의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조사’로 이 조사는 1994년 7월에 실시하였음.
- 이 조사는 국제사회설문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및 하센펠드와 라퍼티(Hasenfeld & Rafferty, 1898), 파파다키스(Papadakis, 1993), 테일러 구비(Taylor-Gooby, 1992), 쿡과 배렛(Cook & Barret, 1992) 등에서 사용한 질문은 한국사회에 맞게 수정하여 복지제도의 효과, 세금과 복지비용과의 관계, 복지비용, 공적복지와 사적복지,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 다음 표본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직업에 따라 층화추출하였음. 조사 대상은 총 598명으로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69.5%, 여성이 29.5%이고, 학력의 경우 중졸이하가 15.4%, 고졸이 36.9%, 대졸 및 대졸 이상은 45.7%이고, 직업별은 전문직 및 경영관리직이 17%, 사무/기술직이 25.8%, 자영업자가 18.5%, 기능숙련공이 20.4%, 단순직과 실업자 17.7%임
- 복지책임과 관련된 설문문항은 빈곤, 실업, 질병, 노인, 장애, 여성가장, 소년소녀가장의 7개 영역별로 ‘각각의 사람들을 돌보는데 있어 주된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고, 응답은 ‘자신’, ‘가족과 친척’, ‘이웃’, ‘지역사회’, ‘정부’ 중 선택하도록 하였음.

- 세금과 복지비용에 관한 설문문항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비용은 정부예산의 5%정도입니다. 다음 중 정부가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①세금과 복지비용을 증여야 한다, ②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과 복지비용을 유지해야 한다, ③세금을 늘리고 복지비용도 늘려야 한다’로 구성하였음.
- 분야별 개입 수준에 관한 설문문항은 ‘복지제도 분야별(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공적부조)로 정부 예산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정말 늘려야 한다’,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 ‘정말 줄여야 한다’, ‘잘 모르겠다’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음.
- 복지제도 분야별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치료비를 일부 지불하는 것’, ‘60세 이상이거나 본인이 사망시 유족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 ‘작업 중 부상을 당했거나 요양할 때 지급되는 것’, ‘최저생계를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의료혜택을 주는 것’, ‘고아원 등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는 것’,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양로원 등 노인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 ‘가난한 심신장애자를 돕거나 재활시설을 지원하는 것’, ‘가난한 여성 가장 · 미혼모를 지원하는 것’임.
- 복지제도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설문문항으로 ‘복지제도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 ‘복지혜택은 받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준다’, ‘복지혜택은 받는 사람과 세금 내는 사람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한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다’, ‘돕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돕는다’, ‘자기 가족에 소홀해진다’, ‘생활하는데 안정감을 준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등 각각의 문항에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다’, ‘잘 모르겠다’ 중 어디에 생각하는가를 물었음.
- 사회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빈부간의 소득차이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뒤떨

어진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을 도와주어야 한다’, ‘정부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각각의 문항에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다’, ‘잘 모르겠다’ 중 어디에 생각하는가를 물었음.

□ 김상균·정원오(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사용하였음. 이 조사는 1993년 11월에 실시하였고, 다단계 층화표집법에 의해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20세 이상 1198명에게 복지의식을 물어본 조사임.
- 조사대상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은 52.3%, 여성은 47.7%이고,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30%, 30대가 30.6%, 40대가 19.4%, 50대 14.5%, 60대 이상이 5.4%임.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25%, 인천 및 경기도가 16.4%, 강원도가 4.1%, 충북 3.3% 충남 7.3%, 전북 5.2%, 전남 8.8%, 경북 12.2%, 경남 17.5%이고, 학력별 분포는 국졸이하가 11%, 중졸이 14%, 고졸이 38%, 대졸이상은 36%이며, 직업별 분포는 전문관리직이 14%, 사무직이 12%, 서비스직이 18%, 생산직 및 농어민이 22%, 학생 및 무직이 12%, 주부가 20%임.
- 복지의식은 의료, 교육, 실업, 조세, 소득격차해결, 장애인, 주택, 사회복지에 대한 편견, 복지와 경제와의 관계 등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각 영역의 정부 개입에 대한 견해를 ‘전적반대’, ‘약간반대’, ‘약간찬성’, ‘전적찬성’의 4개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구체적으로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정부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
 - ‘똑똑하지만 부모가 가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정부가 책임지고 진학시켜야 한다’
 - ‘우리 동네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
 -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잘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

금을 물려야 한다'

-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국유화시켜야 한다'
- '사회복지는 자선사업과 같은 것이다'
-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는 좁혀질수록 좋다'
- '정부가 사회복지를 하면 할수록 국가경제는 더 나빠지고 국민들은 더 게을러진다'

□ 이인재(1998), IMF관리체제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 의식에 관한 연구

- 한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수원지역사회욕구조사'자료임. 이 조사는 다단계 집락표집법을 이용하여 수원시 주민 377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1998년 2월에 사회복지 의식을 물었음.
-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은 28.4%, 여성은 71.6%이고, 연령분포는 20대 이하 25.3%, 30대 39.8%, 40대 22%, 50대 이상이 12.9%임. 학력별 분포는 국졸이 4.7%, 중졸이 8.5%, 고졸 45.8%, 대졸이상이 41.1%이고, 직업별분포는 전문관리직이 11.4%, 사무직 4.6%, 판매서비스직이 13.8%, 생산직 6.0%, 주부가 47.7%, 무직이 8.7%임.
- 복지의식은 교육, 의료, 실업, 주택, 생활보호,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에 대한 편견, 조세등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각 영역의 정부 개입에 대한 견해를 '전적반대', '약간반대', '약간찬성', '전적찬성'의 4개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음.
- 구체적으로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을 받을 욕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제의 제한없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정부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
 - '똑똑하지만 부모가 가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정부가 책임지고 진학시켜야 한다'

- ‘실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직업 알선 및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 ‘노인에 대한 보호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 ‘사회복지는 자선사업과 같은 것이다’
- ‘사회복지가 확대될수록 그만큼 국가의 경제발전은 저하되고 국민은 게을러진다’
-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잘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이성균(2002), 한국사회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 ‘민주주의와 전통윤리’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의 ‘복지의식’부분임. 이 조사는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2000년 상반기에 진행되었으며, 면접대상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음.
- 표본은 인구비례표집방식으로 선정된 1000명으로 인적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남성은 49.3%명, 여성은 50.7%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이하가 19.0%,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47.1%, 대학교 재학 이상이 33.9%임.
-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복지책임 주체와 관련한 의식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가장, 소년소녀가장, 빈곤층, 실업자부분으로 나누어 ‘각 대상 집단의 복지향상을 위한 책임의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는 ‘①자기자신, ②가족과 친지, ③이웃주민, ④지방자치단체, ⑤중앙정부’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성균은 복지책임의 주체를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자기자신, 가족과 친지, 이웃주민을 민간부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국가부문으로 재정리하였음.

-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문항으로는 ‘귀하는 가난한 사람은 성공할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반대’에서 ‘매우찬성’의 5점 척도를 구성하였음.
- 경제적 개인주의에 대한 의식에 관한 문항으로 ‘위하는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우선 자신을 탓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반대’에서 ‘매우찬성’의 5점 척도를 구성하였음.

□ 서성이(2007), 행정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정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의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의 ‘정부역할’에 관한 부분임. 이 조사는 국제사회설문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역할(Role of Government)관련 설문문항들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국가 간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2007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인구통계자료를 기초로 표본수 1,000명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도의 시부 및 군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각 행정구역내에서는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에 의거하여 표본을 선정하였음.
- 조사대상자의 인적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 49.3%(493명), 여자 50.7%(507명)이고, 연령별 분포 20대는 20.3%, 30대 23.7%, 40대 23.0%, 50대 15.3%, 60대 이상이 17.7%이며, 지역별 분포는 인천 및 경기도가 2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서울이 21.7%, 부산·울산·경남이 16.6%, 광주·전라와 대구·경북이 10.9%, 대전·충청이 9.6%, 강원이 3.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분포는 대졸이 39.7%로, 고졸이 39.0%, 중졸이하가 17.3%, 대학원 졸 이상이 3.9%이고, 월평균 소득별 분포에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가 3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100-200

만원미만이 23.6%, 300-400만원미만이 21.8%, 100만원미만이 8.1%, 400-500만원미만이 7.4%, 500만원 이상이 7.0%로 나타났다.

-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에 혜택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귀하는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① 많이 받고 있다, ②약간 받고 있다, ③별로 받고 있지 못하다, ④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질문하였고, ‘그럼 현재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정부출범 때와 비교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①훨씬 더 많아졌다, ②약간 더 많아졌다, ③비슷하다, ④약간 더 적어졌다, ⑤훨씬 더 적어졌다’로 질문하였음.
- 정부의 신뢰에 대한 문항으로 ‘귀하는 다른 사람(다른 지역주민/귀하보다 상위계층/ 귀하보다 하위계층)과 비교해서 정부로부터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①매우 공정하다, ②약간 공정하다, ③별로 공정하지 않다, ④전혀 공정하지 않다’로 구성하여 질문하였음.
- 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설문문항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물가 관리’,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에게 적정 수준의 생활 보장’, ‘성장이 필요한 산업 지원’,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생활 보장’, ‘빈부 간 소득격차 완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재정 지원’, ‘무주택자에게 적정 수준의 주거 제공’, ‘환경피해를 줄이도록 산업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 분야별로 나누어 ‘귀하는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당연히 정부책임이다, 아마도 정부책임일 것이다, 정부책임이 아니다, 당연히 정부 책임이 아니다’로 구성하였음.
-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설문문항은 분야별로 ‘환경’, ‘보건의료’, ‘치안’, ‘교육’, ‘국방’, ‘노인(노령)연금’, ‘실업급여’, ‘문화예술’로 나누어 ‘각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더 늘려야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실 때 정부지출을 훨씬 늘려야한다면 세금이 인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십시오’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은 ‘훨씬 더 늘려야, 다소 더 늘려야, 현재대로 다소 더 줄여야, 훨씬 더 줄여야’로 구성하였음.

□ 백정미·주은선·김은지(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한국의 복지 인식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로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의 자료는 국제사회조사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의 Role of Government 자료를 사용하였고, 한국은 서울대학교 사회정책연구그룹의 ‘한국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 조사 2006’을 사용하였음.
- ‘한국사회정책 욕구 및 인식 조사 2006’는 국제사회조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조사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다단계층화 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여 1202명을 표본추출하였음.
- 설문문항은 일자리제공, 노년층 생계보장, 실업자생계보장, 의료 항목에 대해 정부복지책임에 대해서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다’, ‘아마 정부의 책임일 것이다’, ‘아마 정부의 책임 아닐 것이다’,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중 선택하도록 하였음.
- 구체적 질문은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일자리 제공,’ ‘노년층에게 일정수준의 생계보장,’ ‘실업자들에게 일정수준의 생계 보장,’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임.

□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부가조사

- 한국복지패널 2차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가 2007년 4월 24일 ~2007년 7월 20일에 조사한 자료임.
-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부가조사의 내용은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에 대한 것임.
-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의 세부 내용은 사회계층과 관련한 인식(2문항), 소득분배와 관련된 인식(2문항),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견(14문항),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의견(12문항), 사회전반적인부문에서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23문항)이며,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의 세부 내용은 세금부담에 대한 의견(3문항), 납세에 대한 의견(4문항),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견(2문항)임.
- 총1,694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은

47.1%, 여성은 52.9%이며,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무학4.8%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이 약35%이며, 고등학교 학력이37.4%이고, 대학교 이상의 학력은 21.7%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살펴보았을 때 가구균등화중위소득 60%미만의 저소득층가구에 속하는 응답자가 23.1%, 일반가구에 속하는 응답자가 76.9%로 나타났다.

○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음.

	설문내용	응답
사회 계층 구조	귀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자가 약간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2.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3.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4.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5.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귀하는 아래 그림 중에서 한국사회가 어떠한 사회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득 분배 인식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평등 <--> 7. 매우 불평등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1.매우동의, 2.동의, 3.동의도반대도안함 4.반대, 5.매우 반대, 6.모름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	다음에 열거된 각 영역의 정부 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여들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환경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노령연금) -교육 -주거지원 -국방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빈곤층 생활지원 -노인 생활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문화와 예술 -정부행정업무	1. 훨씬 더 많이 지출 2. 좀 더 지출 3. 현재수준으로 지출 4. 조금 덜 지출 5. 훨씬 덜 지출 9. 모름

	설문내용	응답
복지 인식1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 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보통 5. 대체로 그렇지 않다 6. 그렇지 않다 7. 전혀 그렇지 않다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성장만 중요 <--> 4.분배만 중요
복지 인식2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금 감소 -사회복지확대를 위해 세금 증가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는 게으름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생계 보장 -부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음 -건강보험은 최소한 축소, 민간의료보험 이용해야 함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유치원, 보육시설 무상 제공되어야 함	1.매우동의 2.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안함 4. 반대 5. 매우 반대
정부 사회 정책 평가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의 삶의 질 유지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빈곤 예방 및 감소 -실업에 대한 대응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 -인재교육을 위한 학교교육	1. 매우잘함 2. 잘하고 있음 3. 보통 4. 잘 못하고 있음 5. 매우 잘못함
복지서비스 운영/전달주체	귀하는 다음 각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담당해서 운영하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보건의료 -아동 -노인 -주거 -고용 -장애인	1. 국가(중앙/지방정부) 2. 가족 친지 3. 직장 4. 민간기관(영리기관) 5. 비영리 민간기관
복지서비스 재정 부담 주체	귀하는 다음 각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보건의료 -아동 -노인 -주거 -고용 -장애인	1. 국가(중앙/지방정부) 2. 가족 친지 3. 직장 4. 민간기관(영리기관) 5. 비영리 민간기관

	설문내용	응답
복지 재원 및 대상 범위	다음은 세금부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오늘날 한국의 세금 수준이 어느 정도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세금은 소득세, 소비세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단, 사회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고소득층의 세금수준 -중간층의 세금수준 -저소득층의 세금수준	1. 지나치게 높다 2. 꽤 높다 3. 적절한편 4. 꽤 낮다 5. 너무 지나치게 낮다 6. 모름
	다음은 세금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고 서민들은 덜 내야한다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대체로 그렇다 4. 보통 5. 대체로 그렇지 않다 6. 그렇지 않다 7. 전혀 그렇지 않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1. 매우찬성 2. 찬성 3. 대체로 찬성 4. 보통 5. 대체로 반대 6. 반대 7. 매우 반대
	귀하는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서비스이용요금 2. 국민의 세금 3. 돈 많은 사람의 세금 4. 기업의 세금 5. 종교단체의 기부금 6. 기타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육아나 양로와 같은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모든 국민대상 <--> 5. 가난한 사람 대상
	국민이 낸 세금을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쓴다고 할 때, 어디에 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 노후생활문제 2. 건강 및 의료문제 3. 실업문제 4. 교육문제 5. 아동양육문제 6. 장애인문제 7. 주거문제 8. 빈곤 9. 기타

제 2절 기존 복지인식 조사 문항

1. 사회복지 패널 조사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2010년 말에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사회복지패널조사의 사회복지인식 부가조사 문항을 보다 확장한 것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 인식조사 문항

문10) 귀하는 현재 혹은 앞으로의 노후생활에 대해 얼마나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매우 불안하다	2. 조금 불안한 편이다
3. 불안하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불안하지 않다

문11) 귀하는 현재 노후 생활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

문11-1) 노후생활에 대비를 하시는 분만) 귀하는 노후생활 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주십시오

항목	1순위	2순위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2. 개인연금(민간연금)		
3. 퇴직금(퇴직연금)		
4. 저축		
5. 부동산(부동산 임대료, 부동산의 처분/매각)		
6. 기타		

문 12) 귀하와 귀하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은 다음의 혜택들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경험이 있다면)각각의 복지혜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문12-1) 혜택경험		문12-2)만족정도
	있다	없다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하는 편이다 3.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4. 매우 불만족스럽다
1)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1	2	
2)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1	2	
3) 기업복지 (직장내보육, 교육비 지원 등)	1	2	
4) 민간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1	2	
5) 기타 복지서비스 (복지관, 보육바우처 등)	1	2	

문13)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다음과 같은 각 영역에서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사회정책	매우잘 하고있다	잘하고 있는편	보통/그 저그렇다	잘못 하는편	매우잘못 하고있다
1)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	2	3	4	5
2)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1	2	3	4	5
3)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1	2	3	4	5
4) 질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	2	3	4	5
5) 빈곤 예방 및 감소	1	2	3	4	5
6) 실업에 대한 대응	1	2	3	4	5
7)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1	2	3	4	5
8)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	2	3	4	5
9)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1	2	3	4	5

문14) 다음 중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국가가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원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1.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3.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4. 질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5. 빈곤 예방 및 감소 6. 실업에 대한 대응 7.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8.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9.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문15) 다음은 소득분배와 관련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모르겠다
1)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1	2	3	4	5	9
2)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1	2	3	4	5	9
3) 세율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높아야 한다	1	2	3	4	5	9
4) 우리나라에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높은 편이다	1	2	3	4	5	9
5)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정당하다	1	2	3	4	5	9

문16) 귀하는 다음 각각의 사항들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다	대체로 정부책임 인것같다	정부책임 이 아닌 것 같다	당연히 정부책임 아니다	모르겠다
1)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것	1	2	3	4	9
2) 시장가격을 조절하는 것	1	2	3	4	9
3) 아픈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	2	3	4	9
4)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것	1	2	3	4	9
5)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것	1	2	3	4	9
6) 실업자가 어느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1	2	3	4	9
7)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격 차를 줄이는 것	1	2	3	4	9
8)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것	1	2	3	4	9
9)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 절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1	2	3	4	9

문17) 귀하는 다음 각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국가 (중앙/지방정부)	가족친지	직장	민간기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1) 교육	1	2	3	4	5
2) 보건의료	1	2	3	4	5
3) 아동	1	2	3	4	5
4) 노인	1	2	3	4	5
5) 주거	1	2	3	4	5
6) 고용	1	2	3	4	5
7) 장애인	1	2	3	4	5

문19) 귀하는 다음 각 분야에서 국가의 복지서비스가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가난한 사람에게만	중간소득이하 사람들에게까지	어느정도 잘사는 사람들 (중간층)에게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국민에게 골고루
1) 교육	1	2	3	4
2) 보건의료	1	2	3	4
3) 아동	1	2	3	4
4) 노인	1	2	3	4
5) 주거	1	2	3	4
6) 고용	1	2	3	4
7) 장애인	1	2	3	4

문20) 다음에 열거된 각 영역의 정부지출에 대해 귀하가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단 ‘훨씬 더 많이’ 지출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위해 세금(또는 사회보험료)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구분	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현재수준으로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모르겠다
1) 환경	1	2	3	4	5	9
2)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1	2	3	4	5	9
3) 국방	1	2	3	4	5	9
4) 남북교류 및 통일	1	2	3	4	5	9
5) 교육	1	2	3	4	5	9
6) 문화와 예술	1	2	3	4	5	9
7) 정부행정업무	1	2	3	4	5	9
8) 건강보험 및 보건	1	2	3	4	5	9

9)국민연금 (노령연금)	1	2	3	4	5	9
10)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1	2	3	4	5	9

문21)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	매우 동의 한다	동의 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않 는다	반대 한다	매우 반대 한다
1)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1	2	3	4	5
2) 사회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1	2	3	4	5
3) 어린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1	2	3	4	5
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1	2	3	4	5
5)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1	2	3	4	5
6)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1	2	3	4	5
7) 국가가 노인의 생활을 책임진다면,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	1	2	3	4	5
8)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1	2	3	4	5
9) 대학교육까지는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한다.	1	2	3	4	5

문39-1) 우선,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의 수준은?

1. 지나치게 높다	2. 꽤 높다
3. 적절한 편이다	4. 꽤 낮다
5. 너무 지나치게 낮다	9. 모르겠다

문43) 귀하는 본인의 노후생활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1순위	2순위
1.국민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2.저축 및 투자(주식, 채권, 배당금 등) 3.개인연금 4.자녀, 배우자, 친지들의 지원 5.퇴직금(퇴직연금) 6.근로소득(노후에도 일을 계속할 경우) 7.부동산 임대료, 부동산의 처분/매각 8.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지원 9.기타(적을 것 :)		

문44) 만약, 귀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면, 누가 당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어떤 경우에도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1. 가족, 친지	4. 국공립 요양시설
2. 간병인	5. 기타(적을 것 :)
3. 민간 요양시설	

문45) 귀하는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영양과 치료	4. 여가와 문화
2. 가사 도움	5. 소득지원
3. 일자리 제공	6. 기타(적을 것 :)

문46) 귀하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급여를 줄이는 만큼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료, 요양, 주거, 가사지원 등)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매우 동의한다	4. 반대한다
2. 동의한다	5. 매우 반대한다
3.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문47) 귀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낼 생각이 있습니까?

전혀 더 낼 생각이 없다	<----->								많이 라도 더 낼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문48)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는 돈이 많이드는 진단, 치료 항목들이 상당수 빠져있습니다. 귀하는 이런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낼 생각이 있습니까?

전혀 더 낼 생각이 없다	<----->								많이 라도 더 낼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문48-1) (문48)에서 ‘더 낼 생각이 없다’(1-5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세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1. 나보다 돈은 많이 벌지만 보험료는 적게 내는 사람들 때문에			
2. 국민건강보험이 언제 민영화 되어 혜택이 축소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3. 돈은 더 내도 혜택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4. 아프지도 않으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낭비 때문에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5. 이미 건강보험료가 심각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6. 지금의 건강보험 서비스 수준이 적절하여 서비스를 늘릴 필요가 없으므로 7.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료를 더 낼 여력이 없어서 8. 기타(적을 것 :)			

문49)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한 기관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기관 유형	늘어나야한다	현재수준이적절하다	줄어야한다
1)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1	2	3
2) 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3) 직장어린이집			
4) 공동육아			
5) 공공 방과후			

문50) 다음 중 귀하는 주거복지의 대상을 어느 소득수준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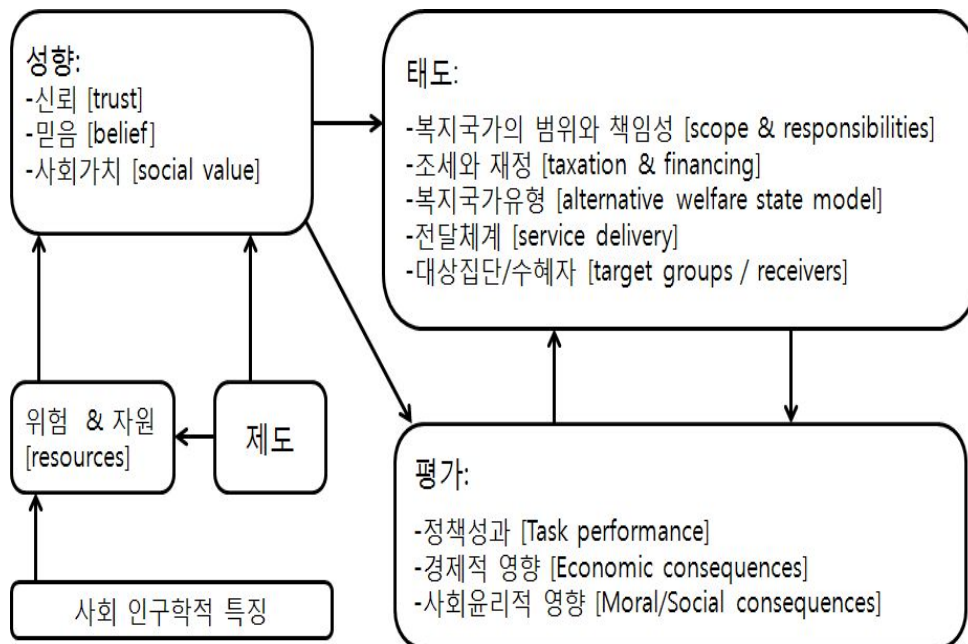
빈곤층	<----->		중간층	<----->		고소득층
1	2	3	4	5	6	7

2. European Social Survey(ESS)

□ 분석틀

- ESS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인식, 평가 등을 조사하였는데, 다음 그림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개발하여 조사하였음.

[그림 4-1] 분석틀: 측정개념과 서로 간의 관계



- 이러한 분석틀에서 실제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성향, 태도, 제도, 평가이임.⁶⁾
- 앞의 기존문헌 연구에서 다룬 다양한 복지인식 조사에서의 측정 내용들도 모두 이 개념들을 측정하고 있음.

6) ESS의 복지인식조사는 정기적인 사회조사의 부가조사인데, 제도에 대한 문항은 본조사의 문항에 포함되어 있다.

□ 조사 문항

○ 성향에 대한 설문

1) 믿음

□ 자신에게 닥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믿음(BelRisk)

- 향후 12개월 동안 귀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보기
향후 12개월 동안 귀하가 실업 상태에 놓여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다?(더 이상 일하지 않으며, 일할 의사도 없으면 건너 뛴).	1 전혀 없을 것이다 2 별로 없을 것이다 3 그럴 수 있을 것이다 4 거의 확실히 그럴 것이다. 8 잘 모르겠다.
향후 12개월 동안 귀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12개월 중 일정 기간 동안 생필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할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귀하가 아파서 적절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데,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믿음 (BelSust)

- 최근 건강보험의 재원(비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10년 정도를 고려했을 때,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까우십니까?

10년 이내에,

- 1) 현재 수준의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 2) 현재 수준의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8) 잘 모르겠다.

- 최근 국민연금의 재원(비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10년 정도를 고려했을 때,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까우십니까?

10년 이내에,

- 1) 현재 수준의 국민연금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 2) 현재 수준의 국민연금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국민연금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8) 잘 모르겠다.

☐ 수요집단의 구성과 크기에 대한 믿음 (BelClaim)

○ 근로연령대 사람들 100명 중 몇 명 정도가 다음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현황을 모르더라도 추측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보기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1)0-4, 2)5-9, 3)10-14, 4)15-19, 5)20-24, 6)25-29, 7)30-34, 8)35-39, 9)40-44, 10)45-49, 11)50명 이상, 88) 잘 모르겠다.
만성질환 혹은 장애 상태에 놓여 있다	
기본적인 생활도 하기 어려울 만큼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해외에서 태어났다.	

○ 오늘날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은 한국에 세금을 내며 동시에 복지 혜택도 받습니다. 귀하께서는 해외 이주민들이 기여하는 것(세금을 내는 것)과 복지 혜택을 받는 것 사이에 어느 정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기여한 것보다 많이 받아야 한다)에서 10(받는 것보다 더 많이 기여해야한다)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 해 주십시오.

기여한 것보다
많이
받아야 한다

0 1 2 3 4 5 6 7 8 9

받는 것보다
더 많이
기여해야한다

10

잘
모르겠다

88

2) 사회 가치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귀하는 얼마나 동의 또는 반대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평등주의에 대한 믿음(ValEgal)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도, 반대도 없음	반대함	매우 반대함	잘 모르겠 음
소득의 큰 격차는 사람들의 재 능과 노력의 차이에 따른 것이 므로 수용할 수 있다.	1	2	3	4	5	8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사람들의 생활 수준 차이는 적어야 한다.	1	2	3	4	5	8

☐ 권위주의에 대한 믿음 (ValAut)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 지도, 반대하 지도 없음	반대함	매우 반대함	잘 모르겠 음
학교는 아이들이 권위에 따르도 록 가르쳐야 한다.	1	2	3	4	5	8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현행보 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해야한 다.	1	2	3	4	5	8

☐ 성 전통주의에 대한 믿음(ValGend)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 지도, 반대하 지도 없음	반대함	매우 반대함	잘 모르겠 음
여성은 가족을 위해서 직장 일을 줄 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	2	3	4	5	8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남자가 여자 보다 우선해서 일자리를 가져야 한 다.	1	2	3	4	5	8

○ 태도에 대한 설문

1) 복지국가의 범위와 책임에 대한 태도(AttScope)

○ 사람들은 정부 책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각 업무에 대하여 귀하는 정부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0 (전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에서 10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사이로 답변해 주십시오

-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 아픈 사람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것
-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것
- 일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

전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잘 모르겠다
0	1	2	3	4	5	6	7	8	9			10	88

2) 조세와 재원 조달에 대한 태도 (AttTax)

○ 조세 당국은 민원의 시간내 처리, 조세부과 실수 방지, 탈세 방지 등 세무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0 (매우 비효율적) 에서 10 (매우 효율적) 사이로 답변해 주십시오

매우 비효율적											매우 비효율적	잘 모르겠다
0	1	2	3	4	5	6	7	8	9		10	88

○ 조세 당국은 조세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 에서 10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 사이로 답변해 주십시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	잘 모르겠다
0	1	2	3	4	5	6	7	8	9	10	88	

○ 대부분의 복지혜택은 조세를 재원으로 제공됩니다. 정부가 ① 세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과 ② 세금을 낮추고 복지 혜택도 줄이는 것 사이에 선택을 하여야 한다면 둘 중의 어느 것을 지지하십니까?

세금을 낮추고 복지 혜택도 줄여야 한다											세금을 높이고 복지혜택도 높여야 한다	잘 모르겠다
0	1	2	3	4	5	6	7	8	9	10	88	

○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다른 사람보다 소득이 2배입니다. 이 두 명에게 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둘 다 동일한 세율(동일한 %)이 적용되어서, 2배 버는 사람은 세금도 2배를 내야 한다.
- 2)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세율(더 높은 %)이 적용되어서 2배 버는 사람은 2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3)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 4) 위의 셋 중 어느 것도 아니다
- 8) 잘 모르겠다.

3)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태도[AttMod]

○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냈으므로 더 많은 노령연금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자들이 연금소득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령연금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 주장 중에서 어느 것에 가장 동의하십니까?

- 1)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노령연금급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 2) 고소득과 저소득자 모두 동일한 노령연금급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 3) 저소득자들이 더 많은 노령연금급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 4) 위의 셋 중 어느 것도 아니다
- 8) 잘 모르겠다.

○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고용보험료)을 냈기 때문에 실업을 하였을 때, 저소득자들 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자들이 급여소득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 주장 중에서 어느 것에 가장 동의하십니까?

- 1) 고소득자들이 실업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
- 2) 고소득과 저소득자 모두 실업했을 때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 3) 저소득자들이 실업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
- 4) 위의 셋 중 어느 것도 아니다
- 8) 잘 모르겠다.

4)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태도 [AttServ]

○ 귀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매우 비효율적) 에서 10 (매우 효율적) 사이로 답해 주십시오

매우 비효율적											매우 비효율적	잘 모르겠다
0	1	2	3	4	5	6	7	8	9	10	88	

○ 의사와 간호사들이 특정인들을 특별 대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특정인들을 특별대우함) 에서 10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함) 사이로 답변해 주십시오

특정인들을 특별 대한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	잘 모르겠다
0	1	2	3	4	5	6	7	8	9	10		88	

5) 목표집단/수혜자들에 대한 태도 [AttRec]

○ 다음의 주장(진술)들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 또는 반대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도, 반대도 없음	반대함	매우 반대함	잘 모르겠 음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	1	2	3	4	5	8
빈곤계층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	1	2	3	4	5	8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1	2	3	4	5	8
우리나라는 정말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충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1	2	3	4	5	8
근로자들은 종종 집에 있기 위하여 아프지 않아도 병가를 낸다.	1	2	3	4	5	8

○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들의 경우,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에 대하여 언제쯤 내국인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 1) 입국 즉시
- 2) 입국 후 1년 이후, 노동 여부와는 무관하게
- 3) 취업 이후 세금을 낸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일 때
- 4) 우리나라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 5) 결코 동등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 8) 잘 모르겠다.

○ 평가에 대한 설문

1) 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EvTask]

○ 다음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생활 형편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0 (매우 나쁨) 에서 10 (매우 좋음) 사이로 답변해 주십시오

- 노인계층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실업자들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 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정규직에 취업할 기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쁨											매우 좋음	잘 모르겠다
0	1	2	3	4	5	6	7	8	9	10	88	

2)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EvEc]

○ 다음은 복지정책(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각의 진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동의 혹은 반대하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도, 반대도 없음	반대함	매우 반대함	잘 모르겠 음
경제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1	2	3	4	5	8
빈곤의 확산을 막고 있다.	1	2	3	4	5	8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1	2	3	4	5	8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과 비용부담을 지우고 있다.	1	2	3	4	5	8

3) 윤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EvSoc]

○ 다음은 복지정책(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각의 진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동의 혹은 반대하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도, 반대도 없음	반대함	매우 반대함	잘 모르겠 음
해외 이주민 유입을 증가시킨다.	1	2	3	4	5	8
일과 가정의 양립을 쉽게 해 주고 있다.	1	2	3	4	5	8
사람들을 게으르게 한다	1	2	3	4	5	8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것을 감소시킨다	1	2	3	4	5	8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것을 감소시킨다	1	2	3	4	5	8

제3절 복지인식 및 정책수요 조사표

- 앞에서 제시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사회복지인식조사와 European Social Survey(ESS)의 복지인식부가조사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복지수요와 인식조사 문항의 거의 대부분이 망라되어 있음. 따라서 이 조사들의 문항 내용 중에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문항들을 추출하여 본 연구 문항의 기본 내용을 구성함.
- 공식적인 사회복지인식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정기적으로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한국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도 노후보장과 관련한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를 하고 있음.
 - － 따라서 기존에 정기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중복 조사가 필요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이 연구의 문항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
- 설문에 포함되는 내용 및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음.
 - － ① 복지, 소득 분배 등에 대한 전반적 태도
 - － ② 복지정책 분야별 체감도 및 만족도
 - － ③ 복지정책에 대한 욕구와 수요
 - － ④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 － ⑤ 복지지출 수준 및 재원 부담 의사
 - － ⑥ 구체적인 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



복지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2012년도 보건 및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된 신분 보장 및 비밀엄수 사항은 엄격히 지킬 것이며 본 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다면 바람직한 보건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자

연락처

5. 귀하는 과거(대략 5년 전)에 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형편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쁨 중간 매우 좋음 잘 모름 ☐

0 1 2 3 4 5 6 7 8 9 10 99

6. 귀하는 과거(대략 5년 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부(富)의(혹은 소득과 재산의) 분배 상태가 더 평등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불평등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평등 중간 매우 평등 잘 모름 ☐

0 1 2 3 4 5 6 7 8 9 10 99

7.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이 중요 중간 분배가 중요 잘 모름 ☐

5 4 3 2 1 0 1 2 3 4 5 99

II. 복지정책 분야별 체감도 및 만족도

8. 다음은 우리 사회 다양한 계층의 생활 형편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잘 모르겠음

①-----②-----③-----④-----⑤ ⑥

- 1) 저소득계층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2) 노인계층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3) 실업자들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4)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5)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6)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정규직에 취업할 기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7) 장애인들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8) 양성 평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9) 저소득계층의 주택 사정은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0)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9.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다음의 복지 혜택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각각의 복지혜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응답해주시오.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① ————— ② ————— ③ ————— ④ ————— ⑤

구분	혜택경험		만족수준				
	있다	없다	①	②	③	④	⑤
1) 국민연금							
2) 기초노령연금							
3) 건강보험							
4) 산재보험							
5) 고용보험							
6) 장기요양보험							
7)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8) 보육 지원							
9) 고용지원(근로장려세 지원, 사회보험료 감면 등)							
10) 기타 복지서비스 (복지관, 사회복지 바우처 등)							

- 1)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
- 2) 노후에 일정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 3)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4)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5) 최소한의 생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
- 6) 실업 기간 동안의 소득 지원
- 7)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 8) 양성 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 9)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10) 대학 교육비 지원

12. 향후 5년 동안 귀하 또는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거의 확실히 그럴 것이다 잘 모르겠다

①-----②-----③-----④ ⑤

- | | |
|--|--------------------------|
| 1) 실업 상태에 놓여서 구직 활동을 한다. | <input type="checkbox"/> |
| 2)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 <input type="checkbox"/> |
| 3) 일정 기간 동안 생필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할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놓인다. | <input type="checkbox"/> |
| 4) 나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데,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 | <input type="checkbox"/> |

13. 장래에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알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을 것이다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거의 확실히 그럴 것이다 잘 모르겠다

①-----②-----③-----④ ⑤

- | | 5년 이내의
짧은 미래 | 5년 이후의
먼 미래 |
|--|--------------------------|--------------------------|
| 1) 본인에게 닥칠 수 있는 경제적 위험 상황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2) 실업 상태에 놓여서 구직 활동을 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3) 가족(아이나 부모 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4) 일정 기간 동안 생필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할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놓인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5) 나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데,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6) 적절한 노후 대비가 부족하여, 노후 생활이 곤궁하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7)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8) 어느 정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집(주거)을 마련하지 못한다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V.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14. 귀하는 다음의 각 업무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부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아마도 정부 책임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정부 책임일 것이다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잘 모르겠다

①-----②-----③-----④-----⑧

- 1)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것
- 2)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 3) 아픈 사람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4) 노인에게 적정 수준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
- 5)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
- 6)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
- 7) 무주택자에게 적정수준의 주거를 제공하는 것
- 8) 일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
☐
☐
☐
☐
☐
☐

15. 귀하는 다음 각 분야에 대해 국가와 개인(가족) 중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개인(가족) 중간 전적으로 국가 잘 모름
0 1 2 3 4 5 6 7 8 9 10 99

- 1) 노인부양
- 2) 노후생활안정
- 3) 보육
- 4) 장애인 돌봄
- 5) 대학 교육비 부담
- 6) 취업

☐
☐
☐
☐
☐
☐

16. 귀하는 다음 각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중앙/ 지방정부) ①	가족 친지 ②	직장 ③	민간영리 기관 ④	민간 비영리기관 ⑤
1) 교육					<input type="checkbox"/>
2) 보건의료					<input type="checkbox"/>
3) 아동					<input type="checkbox"/>
4) 노인					<input type="checkbox"/>
5) 주거					<input type="checkbox"/>
6) 고용					<input type="checkbox"/>
7)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17.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누가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가족, 친지 ①	간병인 ②	민간 요양시설 ③	국공립 요양시설 ④	
				<input type="checkbox"/>

- 1)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 2) 반군의 감소시킨다.
- 3) 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 4) 기업에게 너무 많은 세금과 비용 부담을 준다.
- 5) 일하는 부모의 가사 부담을 덜어준다.
- 6)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낮춘다.
- 7)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것을 감소시킨다
- 8)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책임지려는 의식을 감소시킨다.

20. 정부가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정책 분야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알고자 합니다. 각각의 진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동의 혹은 반대하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도, 반대도 아님 반대함 매우 반대함 잘 모르겠음

①-----②-----③-----④-----⑤ ⑨

- 1) 저소득층 소득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2) 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3) 주거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4) 실업자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5) 보육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6) 노후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7) 대학 교육비 경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8) 대학 교육비 경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9) 장애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
☐
☐
☐
☐
☐
☐
☐

21. 귀하는 다음 각 분야에서 국가의 복지서비스가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만 중간소득 이하 사람들까지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 (중간층)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잘 모르겠음

①-----②-----③-----④

- 1) 대학 교육비 지원
- 2) 의료 서비스
- 3) 보육 서비스
- 4) 노후 소득 보장
- 5) 노인 요양 서비스
- 6) 주거 제공

☐
☐
☐
☐
☐
☐

7) 고용 제공

☐

8) 장애인 소득 지원

☐

22. 대부분의 복지혜택은 조세를 재원으로 제공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과 세금을 낮추고 복지 혜택도 줄이는 것 사이에 선택을 하여야 한다면 둘 중의 어느 것을 지지하십니까?

세금을 낮추고 복지
혜택도 줄여야 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세금을 높이고 복지혜택도
높여야 한다

잘
모르겠다

☐

23.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대상을 빈곤층에서 중산층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확대에 반대한다

2) 확대에 찬성한다

☐

24.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대부분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습니까?

전혀 더 낼 생각이 없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많이 라도 더 낼 것이다

잘 모르겠다

☐

25.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습니까?

전혀 더 낼 생각이 없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많이 라도 더 낼 것이다

잘 모르겠다

☐

26. 만약 귀하의 소득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복지 증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습니까?

전혀 더 낼 생각이 없다

0

1

2

3

4

5

6

7

8

9

10

99

많이 라도 더 낼 것이다

잘 모르겠다

☐

27.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세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세금은 소득세, 소비세 등 모든 종류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단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지나치게 높다 꽤 높다 적절한 편이다 꽤 낮다 너무 낮다 모르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
|---------|--------------------------|
| 1) 고소득층 | <input type="checkbox"/> |
| 2) 중간층 | <input type="checkbox"/> |
| 3) 저소득층 | <input type="checkbox"/> |

VI. 구체적인 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

28. 다음에 불러드릴 각각의 항목들이 귀하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
|--|--------------------------|
| 1)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 | <input type="checkbox"/> |
| 2)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 | <input type="checkbox"/> |
| 3)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 | <input type="checkbox"/> |

29. 현재 국민들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총 의료비의 64%는 정부가 부담을 하고, 36%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비 본인부담과 건강보험료와의 관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지금보다 건강보험에서 더 많이 부담하고 대신 건강보험료를 높인다. | <input type="checkbox"/> |
| 2) 지금보다 건강보험에서 더 적게 부담하고 대신 건강보험료를 낮춘다. | |
| 3) 현행의 건강보험 부담 수준이 적절하다 | |

30. 현재 전체 노인 중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이 매월 9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혜자 규모와 액수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수혜자 범위: ① 축소 ② 현행 유지 ③ 확대

☐

2) 급여 액수: ① 축소 ② 현행 유지 ③ 확대

☐

31.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며 동시에 복지 혜택도 받습니다. 귀하께서는 해외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 제공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2)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3)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적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32. 귀하는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을 위한 기관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기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늘어나야 한다 현재수준이 적절하다 줄어야 한다 잘 모르겠다

① ————— ② ————— ③ ————— ④

1)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

2) 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

3) 직장어린이집

☐

4) 공동육아

☐

5) 공공 방과 후

☐

※ 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_____ 세
3. 결혼여부: ①미혼 ②기혼 ③기타(이혼,사별)
4.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 유무:
①있다 ②없다 ③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있음
5. 가구원수: _____명
(※본인을 포함한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6. 거주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대전 6) 광주 7) 울산
8) 경기 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강원 16) 제주
① 시·구 ② 군
7. 최종학력: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대학 이상
⑨ 무응답
8. 월평균 가구소득(세후):
① 100만원 이하 ② 100 ~ 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⑨ 무응답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보건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김태완. (2010).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2010. 6).
- 여유진 · 강신욱 · 이봉주 · 정익중 · 최은영 · 박세경 · 오지현 · 박경희. (2009). 복지분야 『휴먼뉴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 김문길 · 장수명 · 한치록. (2011).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 김태완 · 김수정 · 송치호. (2010).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 복지부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해봉·최은아. (2009).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현황과 노후소득보장 대책. 국민연금연구원.
- 이금진. (2006). 장애인 경제활동 분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정경희 외. (2011).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2009). Health at a Glance.
- OECD. (2009). OECD Revenue Statistics.
-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 www.mohw.go.kr(보건복지부)

05

K
I
H
A
S
A

부록



지역 코드		조사표 ID				조사원 ID	
1	2	3	4	5	6	7	8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 조사 설문지

- 일반 국민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2년도 보건 및 복지 분야 정책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본 설문은 2012년도 보건 및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된 신분 보장 및 비밀엄수 사항은 엄격히 지킬 것이며 본 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다면 바람직한 보건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자

연락처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및 평가

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①-----②-----③-----④-----⑤-----⑥

2.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①-----②-----③-----④-----⑤-----⑥

3.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현 정부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한 귀한의 경험이나 평소 인식 또는 의견을 토대로 아래의 6점 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미흡 미흡 다소 미흡 다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①-----②-----③-----④-----⑤-----⑥

번호	항목	
1)	저소득층 지원	<input type="checkbox"/>
2)	보건 및 의료	<input type="checkbox"/>
3)	주거 지원	<input type="checkbox"/>
4)	자활 및 일자리 지원	<input type="checkbox"/>
5)	보육 지원	<input type="checkbox"/>
6)	노후 소득 보장	<input type="checkbox"/>
7)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input type="checkbox"/>

3-1.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 중 최근 가장 성과가 큰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②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 ③ 국민의 건강 보장
- ④ 보육 지원
- ⑤ 노후 소득 보장
- ⑥ 복지지출 효율화 등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

3-2.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 영역 중 현재 가장 미흡한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②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 ③ 국민의 건강 보장
- ④ 보육 지원
- ⑤ 노후 소득 보장
- ⑥ 복지지출 효율화 등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

2-1. 보건복지 정책방향 - 일반

정부가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정책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동의하는 편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②-----③-----④-----⑤-----⑥					

4. 향후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5. 향후 정부는 ‘보건 및 의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6. 향후 정부는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7. 향후 정부는 ‘자활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8. 향후 정부는 ‘보육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9. 향후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10. 향후 정부는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11. 신년에 가장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것 입니까? 2
순위까지 우선순위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로 출산율 상승 ☐
- ②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
- 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
- ④ 노후 소득보장 확대
- ⑤ 적극적 탈빈곤 지원으로 빈곤율 감소
- ⑥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12. 다음에 볼러드릴 각각의 항목들이 귀하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②-----③-----④-----⑤-----⑥

	항목	
1)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2)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	<input type="checkbox"/>
3)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	<input type="checkbox"/>

13. 2012년 보건 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 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③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④ 공공의료체계 확충
- ⑤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⑥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확대

☐
☐

14. 현재 국민들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총 의료비의 64%는 정부가 부담을 하고, 36%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비 본인부담과 건강보험료와의 관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지금보다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대신 건강보험료를 높인다. (13번으로)
- ② 지금보다 본인부담이 높아지는 대신 건강보험료를 낮춘다. (14번으로)
- ③ 현행수준 유지 (14번으로) ※ 조사시 ③은 선택항목으로 제시치 않음

15. 본인부담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비의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정부가 총 의료비의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입안함
- ② 64~69% 이하
- ③ 70~74% 이하
- ④ 75~79% 이하
- ⑤ 80~84% 이하
- ⑥ 85% 이상

15_1. 귀하께서는 정부가 의료비를 더 부담하는 것이(즉,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원하는 수준을 위해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보다 얼마나 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① 현행 보험료 유지 ② 10% 이하 ③ 11~20% 이하
④ 21~30% 이하 ⑤ 31~40% 이하 ⑥ 41~50% 이하
⑦ 51% 이상

☐

2-3.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분야

16. 귀하는 향후 저출산고령화가 더 심화된다면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십니까?

- ① 관심없다 ②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③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7.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보육시설에 인센티브 제공
② 보육료를 자율화 시켜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③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18.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 ① 지원 중지 ② 지원 축소
③ 현재 상태 유지 ④ 지원 확대

☐

19. 본인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① 공적연금 ② 퇴직금(퇴직연금) ③ 개인연금 및 (중신)보험

☐

④ 예금·적금 ⑤ 부동산 및 주택(역모기지)

⑥ 자녀들의 부모부양(사적이전포함)

20.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① 은퇴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

☐

②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

③ 자원봉사 등 여가지원

④ 노인 주거 시설 확충

⑤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

3. 재원 및 기타

21.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나눔활동이 외국에 비해 적다고 합니다.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부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 강화
- ② 나눔 문화에 대한 교육, 캠페인 확대
- ③ 기부, 자원봉사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 ④ 모금기관의 투명성 강화
- ⑤ 고소득자, 고위층의 솔선수범

22. 만약,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것과 사회복지를 증가시키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귀하는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

- ①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
- ②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한다

23.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대상을 빈곤층에서 중산층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확대에 반대한다
- ② 확대에 찬성한다

24.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저소득층 | 중하층 | 중간층 | 중상층 | 상위층 |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_____ 세
3. 결혼여부: ①미혼 ②기혼 ③기타(이혼,사별)
4.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 유무:
①있다 ②없다 ③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있음
5. 가구원수: _____명
(※본인을 포함한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6. 거주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대전 6) 광주 7) 울산
8) 경기 9) 충북 10) 충남 11) 전북 12) 전남 13) 경북 14) 경남
15) 강원 16) 제주
① 시·구 ② 군
7. 최종학력: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대학 이상
⑨ 무응답
8. 월평균 가구소득(세후):
① 100만원 이하 ② 100 ~ 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⑨ 무응답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보건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역 코드		조사표 ID				조사원 ID	
1	2	3	4	5	6	7	8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 조사 설문지

- 전문가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2년도 보건 및 복지 분야 정책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본 설문은 2012년도 보건 및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된 신분 보장 및 비밀엄수 사항은 엄격히 지킬 것이며 본 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다면 바람직한 보건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자

연락처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일반 인식 및 평가

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다 낮다 다소 낮다 다소 높다 높다 매우 높다

①-----②-----③-----④-----⑤-----⑥

2.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다소 불평등하다 다소 평등하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①-----②-----③-----④-----⑤-----⑥

3.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 중 최근 가장 성과가 큰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 ②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
- ③ 국민의 건강 보장
- ④ 보육 지원
- ⑤ 노후 소득 보장
- ⑥ 복지지출 효율화 등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4. 귀하는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 영역 중 현재 가장 미흡한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 ②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
- ③ 국민의 건강 보장 ☐
- ④ 보육 지원

- ⑤ 노후 소득 보장
- ⑥ 복지지출 효율화 등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5. 신년에 가장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것 입니까? 2순

위까지 우선순위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출산 및 양육지원 확대로 출산율 상승
- ②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 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부담 완화
- ④ 노후 소득보장 확대
- ⑤ 적극적 탈빈곤 지원으로 빈곤율 감소
- ⑥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
☐

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복지 및 저출산

6. 2012년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②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 ③ 국민의 건강 보장
- ④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

7. 귀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 ② 일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 ③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 ④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 ⑤ 직업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

8.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 ② 의료 및 재활 지원 강화
- ③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 ④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일자리 확대 포함)
- ⑤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

9.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 ① 양육수당제도 폐지
- ② 현 수준 유지
- ③ 지원 대상을 전체아동으로 확대
- ④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지원하되 지원 금액을 인상
- ⑤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

☐

10. 노후를 위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 ①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
- ②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지원
- 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 ④ 노인 주거 시설 확충
- ⑤ 장기요양 등 의료서비스 지원

☐☐

11. 귀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②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
- ③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 ④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

☐

⑤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12.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나눔활동이 외국에 비해 적다고 합니다.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부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 ② 나눔 문화에 대한 교육, 캠페인 확대
- ③ 기부, 자원봉사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 ④ 모금기관의 투명성 강화
- ⑤ 고소득자, 고위층의 솔선수범

☐

2-2. 보건복지 정책방향 - 보건분야

13. 다음에 불러드릴 각각의 항목들이 귀하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6점 척도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다소 불만족 다소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②-----③-----④-----⑤-----⑥

	항목	
1)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2)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보장성)	<input type="checkbox"/>
3)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의료의 질)	<input type="checkbox"/>

14. 2012년 보건 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 ②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③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④ 공공의료체계 확충
- ⑤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

⑥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확대

15.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암 환자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②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 ③ 노인틀니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④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보장 확대
- ⑤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16.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국고 지원 확대
- ② 건강보험료 인상
- ③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 ⑤ 환자 본인부담 인상 등 환자의 비용의식 제고
- ⑥ 새로운 자원 마련(의료보장세, 건강증진부담금 신설 등)

☐
☐

17.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의료 인력 공급 확충
- ② 건강보험 수가 인상
- ③ 공공의료체계 확충
- ④ 의료기관별 서비스 평가 및 결과 공개
- ⑤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
☐

18.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농어촌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 ②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
- ③ 지방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적십자 병원 등)의 서비스 수준 개선
- ④ 농어촌 등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
- ⑤ 국공립대학병원의 연구기능강화, 특성화 및 전문화 지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19.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 ②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 ③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의료기관의 연구기능 강화
- ④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 ⑤ 의약품, 의료기기의 제품 및 기술 수출 지원 확대

4. 공공사회복지 지출, 재원 및 기타

(아래 표를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

국가	1인당GDP	재정수지	여성고용율	실업률	일반정부지출	국민부담율	공공사회복지지출	노인인구비율
호주	37,616	1.8	66.1	4.4	33.4	27.1	16.0	13.2
오스트리아	36,839	-0.7	64.4	4.4	49.0	42.7	26.4	17.0
벨기에	34,665	-0.2	54.9	7.5	48.4	44.2	26.3	17.1
캐나다	38,448	1.6	70.1	6.0	39.4	32.3	16.9	13.4
체코	23,995	-0.7	57.3	5.3	42.5	36.0	18.8	14.5
덴마크	36,326	4.5	73.3	3.8	50.8	48.2	26.1	15.5
핀란드	35,346	5.2	68.5	6.9	47.2	43.1	24.9	16.5
프랑스	32,495	-2.7	59.4	8.3	52.6	43.2	28.4	16.5
독일	34,683	0.2	63.2	8.4	43.6	37.0	25.2	19.9
그리스	27,793	-4.0	48.1	8.3	46.6	32.6	21.3	18.6
헝가리	18,763	-5.0	50.9	7.4	50.0	40.2	23.1	16.1
아이슬란드	36,325	5.4	81.7	2.3	42.3	36.8	14.6	11.5

국가	1인당GDP	재정 수지	여성 고용율	실업률	일반 정부지출	국민 부담율	공공사회복 지지출	노인인 구비율
아일랜드	44,381	0.2	60.3	4.6	36.7	28.8	16.3	10.8
이탈리아	30,990	-1.5	46.6	6.1	47.9	43.3	24.9	20.0
일본	33,635	-2.5	59.5	3.9	35.9	28.2	18.7	21.5
한국	26,574	4.7	53.2	3.2	28.7	26.5	7.5	9.9
룩셈부르크	82,456	3.7	54.5	4.2	36.2	35.6	20.6	14.0
멕시코	14,128	-	43.6	3.7	20.5	21.0	7.2	5.5
네덜란드	39,594	0.2	68.5	3.2	45.3	39.1	20.1	14.6
뉴질랜드	27,020	5.0	69.0	3.7	38.8	33.7	18.4	12.5
노르웨이	53,802	17.7	74.0	2.6	41.1	42.6	20.8	14.6
폴란드	16,312	-1.9	50.6	9.6	42.2	34.3	20.0	13.4
포르투갈	22,638	-2.7	61.9	8.1	44.4	35.3	22.5	17.3
슬로바키아	20,270	-1.9	53.0	11.2	34.3	29.3	15.7	11.9
스페인	31,469	1.9	55.5	8.3	39.2	33.3	21.6	16.6
스웨덴	36,785	3.8	73.2	6.1	51.0	46.3	27.3	17.4
스위스	41,800	1.6	71.6	3.6	32.3	29.1	18.5	16.3
터키	13,362	-	22.8	8.6	34.5	24.2	10.5	6.0
영국	34,957	-2.7	66.3	5.3	44.0	35.7	20.5	16.0
미국	46,434	-2.8	65.9	4.6	36.8	26.1	16.2	12.6
OECD평균	33,077	-1.3	57.5	5.7	41.2	35.4	19.3	14.2

자료: OECD Stats. National Accounts,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Taxation and Market Regulation
 주: 재정수지, 일반정부지출, 국민부담율,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비율임.

20.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면 다음 항목 중 가장 시급히 증
 대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순위까지 우선 순위)

- | | |
|------------|----------|
| ① 노인 | ② 아동 |
| ③ 근로 무능력자 | ④ 보건 |
| ⑤ 가족 | ⑥ 일자리 창출 |
| ⑦ 근로자 능력개발 | ⑧ 주거 |

☐
☐
☐

21. 만약,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것과 사회복지를 증가시키는 것 중에서 ☐ 선택해야 한다면, 귀하는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 ①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
- ②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한다

22.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 ① 근로 소득세 인상
 - ② 자본 소득세 인상
 - ③ 부가가치세 인상
 - ④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 ⑤ 담배, 주류, 사행성 산업(경마 등)에 대한 세금 인상
- ☐

※ 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성별 *

- 1) 남
2) 여

☐

2. 연령(만) *

☐

3. 전공

- 1)경제학
2)사회복지학
3)보건학
4)행정학
5)기타: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보건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